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특허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적절성 검토연구

Review of Performance Objectives and  
Management Tasks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 by Changing Policy  
Environment





## 정 책 연 구 결 과 보 고 서

연구과제명	(한글)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특허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적절성 검토 연구 (영문)Review of Performance Objectives and Management Tasks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 Attributed by Changing Policy Environment		
주관연구기관	기 관 명	소재지	대 표
	한국행정학회	서울	임도빈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이해영	영남대 행정학과	정책학
연구기간	2018년 7월19일~2018년 11월 1일(3개월 14일)		
연구비	일금 이천육백사십오만사천오백사십 원정 (₩26,454,540)		
참여연구원	3명(책임: 1명, 연구원: 1명, 보조원: 1명)		
<p>2018년도 정책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p> <p>붙임 : 1. 최종보고서 100부. 2. 최종보고서 수록파일 1부.</p> <p style="text-align: right;">2018년 11월 1일</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연구책임자      이해영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연구기관장      임도빈</p> <p style="text-align: left;">특허청장 귀 하</p>			





##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특허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적절성 검토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주관연구책임자 이해영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장 임도빈 서명 또는 인





( 옆 면 )

( 앞 면 )

2018년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특허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적절성

검토

연구

특

허

청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특허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적절성 검토 연구

Review of Performance Objectives and Management Tasks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

Attributed by Changing Policy Environment

특 허 청



##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특허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적절성 검토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 주관연구기관명 : (사) 한국행정학회
- 연구기간 : 2018년 7월 19일  
~ 2018년 11월 01일
- 주관연구책임자 : 이해영
- 참여연구원 : 허만용

## 목 차

<b>요약문</b> .....	<b>6</b>
<b>제1장 서론</b> .....	<b>13</b>
제1절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	13
제2절 연구과제의 내용 및 방법 .....	13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3
2. 연구방법 .....	14
<b>제2장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타 계획과의 비교</b> .....	<b>16</b>
제1절 2007년~2015년 성과목표 시행계획의 성과목표 체계 변화 .....	16
1. 200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	16
2. 200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	19
3. 20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	21
4. 201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	23
5. 201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	25
6. 201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	27
7. 201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	29
8. 201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	31
9. 201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	33
제2절 2016년~201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성과목표체계 기술 .....	35
1. 2016년도 성과목표체계 .....	35
2. 2017년도 성과목표체계 .....	37
3. 2017년도(수정) 성과목표체계 .....	38
4. 2018년도 성과목표체계 .....	40
제3절 2016년~201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화 논의 .....	42
1. 목표 및 과제 수 변화 개요 .....	42
2.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변화 .....	42
3. 관리과제의 변화 .....	46
제4절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타 계획과의 비교 .....	50
1.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의 비교 .....	50
2. 2018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의 비교 .....	52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의 비교 .....	54
4. 2018년 특허청 업무계획과의 비교 .....	56
5. 2018년 특허청 성과목표 정의서와의 비교 .....	57
6. 2018년 특허청 성과계획서와의 비교 .....	59
7. 타 부처 성과관리 시행계획 검토 .....	61

## 목 차

<b>제3장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제안을 위한 실증조사</b> .....	<b>99</b>
제1절 조사 설계 .....	99
1. 조사개요 .....	99
제2절 전문가조사 결과 .....	101
1. 전문가조사 실시 개요 .....	101
2. 전문가조사 분석 결과 .....	103
제3절 수혜자조사 결과 .....	109
1. 수혜자조사 실시 개요 .....	109
2. 수혜자조사 분석 결과 .....	110
<b>제4장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제안</b> .....	<b>116</b>
제1절 정책 환경의 변화와 성과목표 제안 .....	116
1.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의한 정책 환경의 변화 .....	116
2.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된 성과목표 제안 .....	119
제2절 실증조사 결과에 따른 성과목표체계 제안 .....	121
1. 단기 성과목표체계 제안 .....	121
2. 중장기 성과목표체계 제안 .....	139
3. 제안 종합 .....	145
<b>제5장 결론</b> .....	<b>150</b>
참고문헌 .....	151
부록 1. 특허청 2018년도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현황 .....	154
부록 2. 단기 및 중장기 추진과제의 분류(전문가조사 응답 결과) .....	155
부록 3. 설문지 .....	162

## 표 목차

<표 2-1> 200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현황 .....	18
<표 2-2> 200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현황 .....	19
<표 2-3> 20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현황 .....	21
<표 2-4> 201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현황 .....	23
<표 2-5> 201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현황 .....	25
<표 2-6> 201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현황 .....	28
<표 2-7> 201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현황 .....	30
<표 2-8> 201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현황 .....	32
<표 2-9> 201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현황 .....	34
<표 2-10> 2016년~2018년도 목표 및 과제 수 변화 .....	42
<표 2-11> 특허청 2016년~2018년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변화 .....	45
<표 2-12> 특허청 2017년도(수정) 관리과제의 변화 .....	47
<표 2-13> 특허청 2018년도 관리과제의 변화 .....	49
<표 2-14>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전략 및 핵심과제(일부) .....	51
<표 2-15>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중점방향 및 추진과제(일부) .....	53
<표 2-1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의 전략 및 과제 .....	55
<표 2-17> 2018년도 특허청 업무계획의 전략 및 추진과제 .....	57
<표 2-18> 2018년도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성과목표 정의서(일부) .....	58
<표 2-19> 2018년도 특허청 성과계획서의 목표 및 과제 .....	60
<표 2-2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대응 역량 및 인식제고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69
<표 2-21> 중소벤처기업부 핵심기술위주 R&D 지원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71
<표 2-22>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74
<표 2-23> 과기정통부 연구성과 창업·사업화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83
<표 2-24> 과기정통부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산업 활성화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85
<표 2-25> 과기정통부 R&D 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 및 개방성 확대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88
<표 2-26> 산업부 중견기업 R&D 지원기반 확충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94
<표 2-27>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96
<표 2-28> 산업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기능 강화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98

## 표 목차

<표 3-1> 조사 설계 및 전문가조사 실시 개요 .....	100
<표 3-2> 전문가(표본) 선정 및 응답률 .....	102
<표 3-3>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상위과제-전문가조사) .....	103
<표 3-4>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하위과제-전문가조사) .....	104
<표 3-5>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상위과제-전문가조사) .....	105
<표 3-6>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하위과제-전문가조사) .....	106
<표 3-7>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정책방향 중 추진과제 우선순위(상위과제-전문가조사) .....	107
<표 3-8>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정책방향 중 추진과제 우선순위(하위과제-전문가조사) .....	108
<표 3-9>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상위과제-수혜자조사) .....	110
<표 3-10>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하위과제-수혜자조사) .....	111
<표 3-11>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상위과제-수혜자조사) .....	112
<표 3-12>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하위과제-수혜자조사) .....	113
<표 3-13>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정책방향 중 추진과제 우선순위(상위과제-수혜자조사) ..	114
<표 3-14>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정책방향 중 추진과제 우선순위(하위과제-수혜자조사) ..	115
<표 4-1> 특허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제안(단기) .....	147
<표 4-2> 특허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제안(중장기) .....	149

## 그림 목차

<그림 2-1>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체계 .....	66
<그림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체계 .....	80
<그림 2-3>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체계 .....	91
<그림 4-1> 특허청 성과관리 목표체계 제안(단기) .....	146

## 요 약 문

- 이 정책연구는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그리고 국가지식재산 관련 주요계획과 연계된 특허청의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제안하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 보고서는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타 계획과의 비교, 전문가조사 및 수혜자조사 등 실증조사, 성과목표체계 제안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 제2장 요약: 2장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타 계획과의 비교에서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화, 2차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의 비교,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의 비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의 비교, 2018년 특허청 업무계획과의 비교, 2018년 성과목표 정의서와의 비교, 2018년 성과계획서와의 비교, 중소벤처기업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유사 관리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 첫째,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 기반 강화, 보호 기반 강화,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지식재산 정보화 선도, 성과 중심 책임경영 구현 등 6가지 전략목표 하에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수와 내용 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크게 변화되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 기반 마련 등 전략목표의 수와 내용을 개편하고 그 아래의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에서도 대폭 자리 이동 및 신설·삭제 등의 변화가 있었다.
- 둘째,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비교하여 전략과 핵심과제 등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유사하지만, 지식재산 분야 최상위 계획이라는 점, 24개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 셋째,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비교하여 추진[세부]과제의 목표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상위 기본계획의 연도별 계획이라는 점, 다수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넷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4대 전략과 목표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5개년 장기계획이라는 점, 전략추진을 위한 법률개정사항과 목표연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핵심[세부]과제가 방대하고 세부과제 추진 일정이 2022년까지 지속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 다섯째, 특허청 2018년도 업무계획은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비교하여 비전과 전략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업무계획의 추진과제와 시행계획의 성과목표는 상이하며, 전자가 더 방대하다는 점(예: 지식재산 격차해소 등)에서 차이가 있다.
- 여섯째, 2018년 성과목표 정의서는 조직 성과목표를 정의한 것으로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비교하여 성과목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전자는 특허청 내부 정책부서 평가를 위한 계획서인데 비해 후자는 부처기관의 정부업무평가를 위한 계획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전자는 성과목표와 과제를 단순히 제시하는데 비해 후자는 성과목표체계의 연쇄관계를 도식화하여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와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등 계량적 측정설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일곱째, 2018년도 특허청 성과계획서는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비교하여 임무·비전·목표체계, 성과지표의 측정설계 등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전자는 각각 2개의 전략목표와 프로그램목표가 있으며 1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후자는 전략[성과]목표 각각 4개, 10개, 관리과제 22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자는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일반재정, 정보화, R&D)과 비대상 단위사업(인건비, 기본경비 등) 등으로 구분하는데 비해, 후자는 예산 및 재정관련 연계는 주요 논의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여덟째, 특허청과 업무 관련이 있는 부처 중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였다. 이들 각 부는 조직과 업무가 방대하고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수가 많기 때문에 특허청과 우열 비교는 적합하지 않으며, 다만 유사한 관리과제와 세부사업들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수준에서 논의하였다. 우선, 중기부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특허청과 유사한 관리과제를 검토하였다. 그러한 관리과제로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대응 역량 및 인식 제고,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위주 R&D 지원, 성과공유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문화 확산(지식재산권 공유 등)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는 연구성과 창업·사업화 촉진으로 실험실 일자리 창출,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통한 연구산업 활성화(공공연구성

과 활용·확산, 대학기술이전 지원 등) 등이 있다. 산업부 성과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는 중견기업 R&D 지원기반 확충,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기능 강화 등이 있다.

- 제3장 요약: 3장은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제안을 위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조사는 전문가조사와 수혜자조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사절차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 등 세 가지 준거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질문항목과 문항구성을 결정하였다. 응답 전문가를 선별하기 위해 국내 주요 학술DB를 검색하여 특허법, 특허정책, 특허청 업무, 정부업무 평가 등에 관한 논문 및 보고서를 탐독하였고, 법학·정책학·경영학·공학 전공 등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이메일로 연구목적 설명하고 설문지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선정자 66명 중 41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62.1%이다.
- 둘째, 전문가조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선별한 상위과제(중장기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는 지식재산·기술거래 사업화 촉진, 신기술·신산업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지식재산 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등이다.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서 선별한 상위과제(단기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는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IP-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 등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서 선별한 상위과제(단기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는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 등이다.
- 셋째, 수혜자조사는 변리사, 일반수혜자,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응답대상 65명 중 54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83.1%이다. 수혜자조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선별한 상위과제(중장기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지식재산·기술거래 사업화 촉진,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신기술·신산업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등이다.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서 선별한 상위과제(단기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는 IP-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시장주도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시장주도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 등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서 선별한 상위과제(단기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는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 등이다

○ 제4장 요약: 4장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제안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의한 정책 환경의 변화 및 국정과제와 연계된 성과목표 제안, 실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제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의한 정책 환경에서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열린 혁신정부 및 서비스하는 행정, 소프트웨어 강국, 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과 정책 환경의 변화를 논의하였다. 그 다음 국정과제와 연계된 성과목표 제안에서는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하여 창업 선도 역할,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 확충 및 품질제고, 특허행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둘째, 실증조사 결과에 따른 성과목표체계 제안에서는 3장의 분석결과 중 전문가조사와 수혜자조사에서 공동으로 도출된 성과목표(상위과제)와 관리과제(하위과제)를 단기 및 중장기 제안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단기 성과목표체계에서는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 등 특허청 업무와 사업을 중심으로 11가지의 성과목표와 다양한 관리과제를 인용·제안하였다. 중장기 성과목표체계에서는 특허청과 관련된 6가지 성과목표와 여러 가지 하위 관리과제를 인용·제안하였다.

○ 마지막으로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그리고 실증조사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특허청의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제안을 종합하였다.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단기 성과목표는 201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성과목표는 크게 10가지로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4차 산업혁명 분야 국가 R&D 지원 강화, 신기술 분야 R&D에 표준특허 전략 적용 강화,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식재산 기반 혁신창업 지원,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품질 제고,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등이다.

-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중장기 성과목표는 2018년 이후 연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며, 단기 성과목표들과는 일부 명칭이 동일하지만 하위 추진과제에서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한 성과목표는 크게 6가지로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지식재산·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등이 있다.
  
-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국정과제는 특허청의 외부 정책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후반기는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는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의 성과목표 아래 ‘지식재산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강화’의 관리과제를 두고 ‘IP 서비스업 채용 연계율’ 및 ‘전문자격취득률’의 성과지표를 두고 있다. 이에 더하여 장기과제 제안 및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지식재산 인력 확충 및 조직정비를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자체에 지식재산 전문인력 보강, 출연연구기관에 상설 지식재산 전담조직 설치·확대 등이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조직 및 인력 확충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지식재산 전문인력 확충 및 채용 확대를 제안한다.

## S U M M A R Y

This policy research suggested performance objectives and management tasks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 hereafter in the KIPO) attributed by the changing policy environments. And this study revealed some policy priorities in the KIPO, in which they must be linked to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rojects.

At first,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the changed performance management and its implementing plans from the year of 2007 to 2018. Also this research did a comparative approach on the second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roject, the 2018 project,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in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the 2018 KIPO administration planning, the 2018 performance objectives definition books, and performance management and planning of bot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Following these document analysis and examination, this study surveyed on the KIPO'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strategy during Moon Jai In's ruling government by mailing questionnaires to two groups of expert delphi cohort(response rate was 62.1%) and policy beneficiary of the KIPO's program and administration(response rate was 83.1%) in the period of August to September of this year(2018).

Based on these analyses and reviewing documents, and the survey study, this policy research enunciated five policy suggestions and ideas to the KIPO's program performance and its management objectives as follows:

First, the performance management objectives and strategies between 2016 and 2018 have largely changed compared to the stable years of 2007 to 2015. The first factor to the change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as to the Korean government reform and the creation of the ministry organization of SMEs and Startups since the beginning of Moon Jai In's administration in 2017. In particular, the KIPO's performance programs must be linked to the national policy agendas of his government and the changed level of the KIPO's administrative cabinet by the creation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Second, as the research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expert delphi cohorts and policy beneficiary groups, the priority programs in the category of master plan of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an be collated to the facilitation of workable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transfer, protection system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issued from the emerging new technology and industry. In contrast, the policy beneficiary groups responded to the survey that the program performance priorities were in order of the reinforcement of support of intellectual protection programs for the industrial technology and ideas in SMEs.

Third, as of suggestion to the performance objectives and management strategies by changing policy environments from the inauguration of Moon's government in 2017, this research figured that the program performance of the KIPO must turn to job creations in the labor markets, leading role of the business creations, and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data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high-value added of the creations of the standard patent and its administration.

Fourth, as of summarizing the KIPO's performance objectives and management strategy attributed by the changing policy environments from the inauguration of Moon's administration, this policy-oriented research strongly reported to the KIPO as ten performance objectives, such as improvement of patent's reliability and security, national support of R&D in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strengthening application of standard patent strategy into the R&D in new technology sectors, reformu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with the advent of new technology and industry,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f SMEs and venture business, support of innovative cre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business, etc.

Fifth and finally, Moon's government has repeatedly put political and policy rhetoric and keynotes to the job creations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us the KIPO's program management and performance strategy must meet the labor market policy objectives for widening job creation efforts and activities, in which the patent and its applications into industry and business need to achieve the job-markets goals. As for examples, its policy program can be developed by redistributions of th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in depart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both central and provisional administrations as well as in public research institute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 특허청은 국가지식재산의 주요 계획 즉,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 등과 연계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현 정부의 국정전략에 나타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창업 선도, 지식재산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성과목표체계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의 국정과제 중심의 업무와 평가지표 등을 바탕으로 특허청의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재정리할 필요성이 큼
-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제안으로 함.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심에 의한 정책 환경의 변화와 실증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재정립하고자 함

## 제2절 연구과제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 2007~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성과목표 체계 비교

- 2007-201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화
- 2016년도와 2018년도까지의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변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출범(2017년)을 전후하여, 특허청의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변화를 분석함

## 2)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타 계획의 성과목표 체계 비교

- 특허청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성과목표 체계와의 비교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
  - 특허청 2018년도 업무계획, 정책부서 평가를 위한 성과목표 정의서, 성과계획서
  - 타 부처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3)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한 성과목표 체계 제안

-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그리고 국가지식재산 주요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대할 수 있는 성과목표 체계를 제안함
-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특허청의 성과목표 도출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 등 국가지식재산 주요 계획과 연계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제안

## 2. 연구방법

### 1) 자료수집방법

- 국내외 웹사이트를 통한 기초자료수집: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특허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2017년 정부업무평가결과, 연도별 성과관리 시행계획, 업무계획,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 타 부처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에 대한 자료 수집
- 학술데이터베이스(slima/lib)를 통한 국내·외 학술자료 등 수집

- 이메일조사: 특허법, 정부업무평가 등 전문가의 판단 및 특허청 유관기관 수혜자의 판단을 통한 특허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자료 수집

## 2) 자료분석방법

- 빈도분석: 전문가조사 및 수혜자조사의 우선순위 자료에 대한 분석
- 델파이(Delphi)분석: 전문가의 판단을 통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제안

## 제2장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타 계획과의 비교

- 제2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제1절에서는 2007년에서 2015년까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특징을 기술하고 전년도와 비교함. 제2절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제시된 특허청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를 기술함. 제3절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특허청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의 주요 변화를 비교하고 도식화하여 제시함. 제4절에서는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지식재산관련 주요 계획을 비교함. 제5절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각각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특허청과 유사한 관리과제를 검토함

### 제1절 2007-201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성과목표 체계 변화

#### 1. 200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 200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지식재산 창출·권리화·활용·보호에 관한 고객요구 분석 및 경쟁국 동향을 고려하여 핵심업무영역을 재설계함. 특허청의 핵심업무영역이 심사·심판에서 지식재산 창출·권리화·활용·보호로 확대됨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라는 임무를 도출함. 고객감동경영, 성과주의경영, 6시그마경영, 지식경영 등 4대 혁신전략을 통해 「특허행정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제시
- 이러한 임무와 비전을 바탕으로 실행가능한 최적의 전략목표(6개), 성과목표(18개), 과제 및 사업(총51개: 정책과제 28개, 재정성과 14개, 정보화 4개, 인사 3개, 조직 2개)을 발굴하여 제시함
-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전략목표 1의 성과목표에는 신속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심사·심판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고객지향적 지식재산권 제도 운영 등이, 전략목표 2의 성과목표는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특허행정혁신 가속화, 글로벌 특허정보화 선도, 전략목표 3의 성과목

표는 R&D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촉진,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관리 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 전략 목표 4의 성과목표는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특허기술 평가 및 거래 활성화, 전략 5의 성과목표는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반 강화, 전략 목표 6의 성과목표는 고객감동의 서비스체제 운영, 성과창출형 인적지원관리 시행,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기업형 경영혁신 시스템 정착 등이 있음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성과목표별 과제 및 사업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1> 200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 및 과제 현황

성과목표	과제현황	비고
전략목표 I.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신속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정책
	신속 정확한 심사 / 국제출원 심사지원	재정
2.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사·심판 품질제고	정책
	신속·정확한 방식심사를 통한 심사·심판 품질제고 심사 인프라 구축	재정
3. 심사·심판인력 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 강화한다.	심사·심판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정책
	지식재산 인력개발(심사·심판인력)	재정
4. 고객지향적 지식재산권제도	고객지향적 심사·심판 제도 구축·운영	정책
전략목표 II.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1.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특허행정혁신 가속화 한다.	특허행정혁신 지원 시스템 구축	정책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	정보화
	특허정보 DB 구축 /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	“
2.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선도한다.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정책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특허행정 정보화 국제협력	정보화
전략목표 III.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지식재산 창출기반을 강화한다.		
1. R&D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을 촉진한다.	국가 R&D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정책
	효율적 국가 R&D활동지원 위한 특허정보활용 인프라확대	“
	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 확산	재정
2.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관리역량 강화	기초·원천특허 창출기반 조성/지식재산 관리역량 제고	정책
	지재권 정책강화 기반조성	재정
3.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정책
	중소기업의 특허경영 기반 구축	“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	재정
4.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확충한다.	연구자에 대한 지식재산 전문교육 기반 구축	정책
	발명인력 양성 및 지식재산 교육 저변 확대	“
	발명인력 양성 지원	재정
전략목표 IV.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한다.		
1.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한다.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지원사업간 연계 강화	정책
	우수특허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 및 지원효과 제고	“
	특허기술 활용 지원	재정
2. 특허기술 평가 및 거래를 활성화 한다.	특허기술 가치평가기반 구축을 통한 기술거래 촉진	정책
	수요자 중심의 특허기술 거래시스템 구축	“
	반도체배치설계 기술 인프라 구축	재정
전략목표 V.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1.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지재권 보호 인식제고 및 지재권 분쟁예방	정책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	“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재정
2.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력활동 강화	정책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조성 / 국제출원 지원	재정
전략목표 VI. 고객 및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구현한다.		
1. 고객감동의 서비스 체제를 구축·운영한다.	고객중심 민원서비스제공 / 고객감동 전자민원서비스제공	정책
	특허고객 서비스 지원	재정
2. 성과창출형 인적자원관리를 시행한다.	실적과 역량중심의 인사운영 내실화	인사
	성과창출형 인재개발 / 성과주의 문화 내재화	“
3. 성과중심의 조직을 운영한다.	조직운영의 효율화	조직
	전략중심의 조직운영	“
4. 기업형 경영혁신 시스템을 정착시킨다.	6시그마 경영의 효율화	정책
	혁신문화의 내재화	“

자료: 특허청 (2007). “2007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pp.23-24.

## 2. 200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 지식재산 창출·권리화·활용·보호에 관한 고객요구 분석 및 경쟁국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핵심업무 영역(Value Chain)을 재설계함
- 특허청의 핵심업무영역이 심사·심판에서 지식재산 창출·권리화·활용·보호로 확대됨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라는 임무를 도출함
- 국정원리인 ‘창조적 실용주의’에 기초하여 기관의 운영방향·기능 및 사업을 고객가치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특허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초일류 글로벌 특허청, 지식재산부국 선도」라는 비전을 제시함
- 이러한 임무와 비전을 바탕으로 실행가능한 전략목표(6개), 성과목표(17개), 과제 및 사업(총54개: 정책과제 27개, 재정성과 16개, HRD, 2개, 정보화 4개, 인사 3개, 조직 2개)을 제시함.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별 과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200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비교하여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의 내용에서 거의 동일함. 전년도와 비교하여 전략목표 1의 성과목표들 중 2개를 1개로 통합함. 즉 신속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과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하나로 통합하여 결과적으로 성과목표 수가 1개 축소됨

<표 2-2> 200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 및 과제 현황

성과목표	과제현황	부문	국정과제
전략목표 I. 세계 최고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사·심판 품질제고/신속·정확·고객지향 방식심사	정책	
	특허심사지원 / 특허심사 인프라 구축	재정	
	상표·디자인 심사지원/상표·디자인심사 인프라구축	재정	
2. 심사심판인력 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심사·심판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정책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	HRD	
3. 고객지향적 지식재산권 제도운영	고객지향적 심사·심판 제도 구축·운영	정책	

(아래에서 계속)

<표 2-2> 200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 및 과제 현황

성과목표	과제현황	부문	국정과제
전략목표 II. 세계를 선도하는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1.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특허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미래형 특허정보시스템의 구축	정책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	정보화	
	특허정보 DB 구축 /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	정보화	
2.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선도한다.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정책	
	한국형 특허정보화 시스템의 해외 확산	정책	
	특허행정 정보화 국제협력	정보화	
전략목표 III.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지식재산 창출기반을 강화한다.			
1. 국가 R&D 전략 선도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을 촉진한다.	국가 R&D 사업의 효율적 추진 위한 특허정보활용강화	정책	2-2-3(중점)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인프라 확대	정책	
	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 확산	재정	
2. 대학 공공 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관리역량 강화	기초·원천 특허 창출기반 조성	정책	2-2-1(핵심)
	지식재산 관리역량 제고	정책	2-2-1(핵심)
	지재권 정책강화 기반조성	재정	
3.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정책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정책	1-1-12(일반)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지역 지식재산 창출강화	재정	
	상표·디자인 정보 활용 확산	재정	
4.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확충한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체계 고도화	정책	2-3-4(일반)
	미래의 전문인력 양성 내실화	정책	2-1-4(중점)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재정	2-3-4(일반)
	발명인력 양성 지원	HRD	2-1-4(중점)
전략목표 IV.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한다.			
1.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한다.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의 효과성 제고	정책	1-3-9(일반)
	우수특허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	정책	
	특허기술 사업화 촉진	재정	1-3-9(일반)
2. 특허기술 평가 및 거래를 활성화한다.	특허기술 가치평가기반 구축을 통한 기술거래 촉진	정책	
	수요자중심 특허기술거래시스템 및 운영내실화	정책	
	특허기술거래 및 평가기반 구축	재정	
	반도체 설계재산 기술 인프라 구축	재정	
전략목표 V.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정책	1-4-7(일반)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책	1-4-7(일반)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조성	재정	1-4-7(일반)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재정	
2.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양자협력활동 강화	정책	
	지식재산권 분야 다자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	정책	
전략목표 VI. 고객 및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구현한다.			
1. 고객중심의 무한감동 서비스체제를 구축·운영한다.	고객지향 민원서비스/고객감동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	정책	
	특허고객서비스 지원	재정	
2. 성과창출형 인적자원관리를 시행한다.	실적과 역량중심의 인사운영 내실화	인사	
	성과창출형 인재개발 / 성과주의 문화 내재화	인사	
3. 성과중심의 조직을 운영	조직운영의 효율화 / 전략중심의 조직운영	조직	
4. 기업형책임경영시스템 정착	6시그마 경영의 효율화 / 핵심가치 내재화	정책	

자료: 특허청 (2008). “2008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pp.23-24.

### 3. 20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지식재산의 중요성 증대, 국내외 지재권 환경변화, 고객 요구 분석 등을 통해 핵심업무영역을 재설계함
- 특허청의 핵심업무가 심사·심판 외에 지식재산 창출·권리화·활용·보호영역으로 확대됨.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라는 임무를 도출함
- ‘창조적 실용주의’에 기초하여 국정 비전인 선진 일류국가 건설의 관점에서 특허청의 운영 방향·기능 및 사업을 재설계.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특허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초일류 글로벌 특허청, 지식재산부국 선도」라는 비전을 제시함
- 이러한 임무와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목표(6개), 성과목표(15개), 관리과제(총 42개: 주요 정책과제 21개, 일반재정 17개, 정보화 4개)를 제시함
- 2008년 시행계획과 비교하여 목표와 과제 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체제와 내용 측면에서 유사함. 성과목표 2개 및 성과목표와 연계된 과제 12개가 축소되는 변화가 있음. 즉 전년도 전략목표 VI의 성과목표 수는 4개이지만 이 중 2개(성과창출형 인적자원 관리 시행,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 성과목표 및 이와 연계된 5개 관리과제를 삭제하는 등의 변화가 있음.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별 과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3> 20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 및 과제 현황

성과목표	과제현황	부문	관련 국정과제
전략목표 I.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사·심판 품질제고	정책	
	신속·정확한 고객지향의 방식심사	정책	
	특허 심사지원	재정	
	상표·디자인 심사지원	재정	
2. 심사·심판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심사·심판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정책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	재정	
3. 고객지향적인 지식재산권 제도를 구축·운영한다.	고객 맞춤형 심사·심판 제도 구축·운영	정책	

(아래에서 계속)

<표 2-3> 20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 및 과제 현황

성과목표	과제현황	부문	관련 국정과제
전략목표 II. 3세대 특허넷 구현으로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선도한다.			
1.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특허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미래형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정책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	정보화	
	특허정보 DB 구축	정보화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	정보화	
2.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선도한다.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정책	
	특허행정 정보화 국제협력 강화	정보화	
전략목표 III.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지식재산 창출기반을 강화한다.			
1.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선도한다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국가 R&D 전략 선도	정책	4-2-3(중점)
	특허기술조사분석	재정	4-2-3(중점)
	특허정보 활용 인프라 구축	재정	
	첨단부품.소재 IP-R&D 전략지원	재정	
2. 대학 . 공공 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관리역량을 강화한다.	기초 원천 특허 창출기반 조성	정책	4-2-1(핵심)
	지식재산 관리역량 제고	정책	4-2-1(핵심)
	지재권 정책강화 기반조성	재정	
3.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정책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정책	2-1-12(일반)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	재정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재정	
4.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확충한다.	상표.디자인 정보활용 확산	재정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체계 고도화	정책	4-3-4(일반)
	창의적 발명인재 육성체계 고도화	정책	4-1-4(중점)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재정	4-3-4(일반)
	발명교육 활성화	재정	4-3-4(중점)
전략목표 IV. 우수특허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한다.			
1.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한다.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	정책	4-3-9(일반)
	특허기술 사업화 촉진	재정	4-3-9(일반)
2. 특허기술 거래를 활성화한다.	수요자 중심의 특허기술거래시스템 구축 및 운영 내실화	정책	
	반도체 설계재산 기술 인프라 구축	재정	
전략목표 V.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정책	1-4-7(일반)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책	1-4-7(일반)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조성	재정	1-4-7(일반)
2.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재정	
	지식재산권분야의 양자협력활동 강화	정책	
	지식재산권분야 다자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	정책	
전략목표 VI. 고객 및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구현한다.			
1. 고객중심의 서비스체제를 구축.운영한다.	고객지향의 민원서비스 제공	정책	
	특허고객서비스 지원	재정	
2. 기업형 책임경영 시스템을 정착시킨다.	성과주의 문화 내재화	정책	1-1-7(중점)

자료: 특허청 (2009). “2009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pp.24-25.

#### 4. 201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 특허청의 핵심업무영역을 심사·심판 외에 지식재산 창출·권리화·활용·보호영역으로 확대함.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라는 임무 도출
- ‘창의적 실용주의’에 기초하여 국정비전인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관점에서 특허청의 운영 방향·기능 및 사업을 재설계함.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특허청으로 도약하기 위해 「21c 지식재산 선진일류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함. 추진방향은 IP-Hub Korea 구축,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 親지식재산사회 구현 등임
- 이러한 임무와 비전을 기반으로 하여 전략목표(6개), 성과목표(15개)를 발굴하고 이와 연계된 관리과제(총 40개: 주요정책과제 20개, 일반재정 16개, 정보화 4개)를 제시함
- 전년도 시행계획과 비교하여, 제시된 전략목표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수와 내용은 동일함. 관리과제에서 심판 지원 등의 추가, 상표·디자인 정보활용 확산 등의 삭제와 같은 변화가 있음.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별 과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4> 201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 및 과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관련업무 계획과제
전략목표 I.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사·심판 품질 제고	정책	I-1 I-2
	신속·정확한 고객지향의 방식심사	정책	I-1
	특허심사지원	재정	I-1
	상표·디자인심사지원	재정	I-1
	심판지원	재정	I-1
2. 심사·심판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고품질 심사·심판을 위한 교육체계 고도화	정책	I-1
	심사·심판 인력 역량 강화	재정	I-1
3. 고객지향적인 지식재산권 제도를 구축·운영한다.	고객 맞춤형 심사·심판 제도 구축·운영	정책	I-3

(아래에서 계속)

<표 2-4> 201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 및 과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관련업무 계획과제
전략목표 II.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지식재산 창출기반을 강화한다.			
1.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지재권 중심의 기술력전략을 선도한다	국가 R&D 효율화로 강한 특허 창출 지원	정책	III-1 III-2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강화	재정	IV-3
2. 대학 공공 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 관리역량 강화	공공부문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 구축 지원	정책	IV-2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역량 강화	재정	IV-2
3.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	정책	III-3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기반 구축	정책	III-3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	재정	III-3
4.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확충한다.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재정	III-3
	지식재산 인력개발 인프라 확대	정책	IV-4
	창의적 발명인재 육성체계 고도화	정책	V-3
	지식재산 인력 양성	재정	IV-4
	지식재산교육 확산(수입대체경비)	재정	IV-4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자본)	재정	IV-4
전략목표 III. 우수특허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한다.			
1.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한다.	우수특허기술의 활용기반 구축	정책	IV-1
	특허기술 사업화 촉진	재정	IV-1
2. 특허기술 거래를 활성화한다.	수요자 중심의 특허기술거래시스템 구축 및 운영 내실화	정책	IV-1
	반도체설계재산 인프라 구축	재정	IV-1
전략목표 IV.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정책	V-1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책	V-2
	지재권 보호기반 조성	재정	V-1 V-2
2.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분야 양자협력 활동 강화	정책	II-2
	지식재산권분야 다자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	정책	II-2
	국제협력 강화기반 구축	재정	II-1
전략목표 V. 3세대 특허넷 구현으로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선도한다.			
1.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특허행정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3세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정책	I-3
	특허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정보화	I-3
	특허정보 DB 구축	정보화	I-3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	정보화	I-3
2.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선도한다.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정책	II-3
	특허정보화 국제협력	정보화	II-3
전략목표 VI. 고객 및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구현한다.			
1. 고객중심의 서비스체제를 구축.운영한다.	고객지향의 민원 서비스 제공	정책	I-3
	특허고객 서비스 지원	재정	I-3
2. 기업형 책임경영 시스템을 정착시킨다.	성과주의 문화 내재화	정책	

자료: 특허청 (2010). “2010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pp.28-29.

## 5. 201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 2011년도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G5 수준의 지식재산 서비스 체계 구축, 지식재산의 경제·산업적 활용 촉진, 공정한 지식재산 사회 구현을 통해 고품질의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보호, 활용함으로써 지식재산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기여함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지식재산의 중요성 증대, 국내외 지재권 환경변화, 고객 요구 분석 등을 통해 핵심업무영역을 재설계함
- 특허청의 핵심업무가 심사·심판 외에 지식재산 창출·권리화·활용·보호영역으로 확대됨.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라는 임무를 도출함
- ‘창조적 실용주의’에 기초하여 국정 비전인 선진 일류국가 건설의 관점에서 특허청의 운영 방향·기능 및 사업을 재설계.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특허청으로 도약하기 위해 「21C 지식재산 선진일류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함
- 이러한 임무와 비전을 기반으로 하여 전략목표(6개), 성과목표(15개), 관리과제(25개)를 제시함.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별 관리과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2010년 시행계획과 비교하여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관리과제가 축소되었음

<표 2-5> 201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 및 과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I.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심사·심판 품질 제고
	② 신속·정확한 고객지향의 방식심사
	2. 심사·심판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① 고품질 심사·심판을 위한 교육체계 고도화
	3. 고객지향적인 지식재산권 제도를 구축·운영한다.
	① 고객 맞춤형 심사·심판 제도 구축·운영

(아래에서 계속)

<표 2-5> 201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 및 과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Ⅱ.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지식재산 창출기반을 강화한다.
	1.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지재산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선도한다.
	①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국가 R&D 전략 선도
	② 전략적 국제표준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표준특허 창출 지원
	2.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 구축 지원
	① 공공부문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 구축 지원
	3.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한다.
	①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
	②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기반 구축
	4.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확충한다.
	① 지식재산 인력개발 인프라 확대
	② 창의적 발명인재 육성체계 고도화
	Ⅲ. 우수특허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한다.
	1.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한다.
	①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
	2. 특허기술 거래를 활성화한다.
	① 수요자 중심의 특허기술거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내실화
	② 반도체 설계재산 인프라 구축
	Ⅳ.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①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②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2.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① 지식재산 분야 양자협력 활동 강화
	② 지식재산 분야 다자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
	Ⅴ. 3세대 특허넷 구현으로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선도한다.
	1.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특허행정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① 3세대 특허넷 시스템 구축
	② 특허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③ 특허정보 DB 구축
	④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
	2. 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선도한다.
	① 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Ⅵ. 고객 및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구현한다.
	1. 고객중심의 서비스 체제를 구축·운영한다.
	① 고객지향의 민원서비스 제공
	2. 기업형 책임경영 시스템을 정착시킨다.
	① 성과관리 문화 내재화

자료: 특허청 (2011). “2011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pp.31-32.

## 6. 201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 2012년도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서비스 체계 구축,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친 지식재산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고품질의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보호, 활용함으로써 지식재산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기여함. 이러한 기본 방향은 2011년과 거의 유사함
- 특허청의 핵심업무영역이 심사·심판 외에 지식재산 창출·권리화·활용·보호영역으로 확대됨.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라는 임무를 도출함
- ‘창조적 실용주의’에 기초하여 국정 비전인 선진 일류국가 건설의 관점에서 특허청의 운영 방향·기능 및 사업을 재설계.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특허청으로 도약하기 위해 『21C 지식재산 선진일류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함. 전술한 2012년도의 임무와 비전은 지난 연도와 동일함
- 이러한 임무와 비전을 기반으로 하여 전략목표(6개), 성과목표(14개), 관리과제(24개)를 발굴하여 제시함
- 전년도 시행계획과 비교하여 전략목표가 동일하고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수에서 각각 1개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 면에서 거의 변화가 없음. 구체적으로 전략목표 III의 성과목표 2개를 1개(중소기업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로 통합하고 이와 연계된 과제 1개(반도체 설계재산 인프라 구축)를 삭제함.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별 관리과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6> 201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 및 과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I.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심사·심판 품질 제고	
② 신속·정확한 고객지향의 방식심사	
2. 심사·심판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① 고품질 심사·심판을 위한 교육체계 고도화	
3. 고객지향적인 지식재산권 제도를 구축·운영한다.	
① 고객 맞춤형 심사·심판 제도 구축·운영	
II.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지식재산 창출기반을 강화한다.	
1.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선도한다.	
①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국가 R&D 전략 선도	
② 전략적 국제표준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표준특허 창출 지원	
2.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관리역량을 강화한다.	
① 공공부문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 구축 지원	
3.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한다.	
①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	
②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기반 구축	
4.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확충한다.	
① 지식재산 인력개발 인프라 확대	
② 창의적 발명인재 육성체계 고도화	
III. 우수특허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한다.	
1. 중소기업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를 촉진한다.	
① 특허기술 사업화 및 거래 지원	
② 반도체 설계재산 인프라 구축	
IV.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①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②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2.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① 지식재산 분야 양자협력 활동 강화	
② 지식재산 분야 다자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	
V. 3세대 특허넷 구현으로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선도한다.	
1.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특허행정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① 3세대 특허넷 시스템 구축	
② 특허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③ 특허정보 DB 구축	
④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	
2. 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선도한다.	
① 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VI. 고객 및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구현한다.	
1. 고객중심의 서비스 체제를 구축·운영한다.	
① 고객지향의 민원서비스 제공	
2. 기업형 책임경영 시스템을 정착시킨다.	
① 성과관리 문화 내재화	

자료: 특허청 (2012). “2012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pp.30-31.

## 7. 201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 2013년도 정책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 기반 강화, 지식재산 활용 생태계 구축, 중소·중견기업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 강화, 지식재산권의 보호기반 강화,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를 위한 고품질 특허행정 정보화 구현, 고객과 성과중심의 책임경영 구현 등으로 설정함
- 지식재산의 중요성 증대, 국내외 지재권 환경변화, 고객요구 분석 등을 통해 핵심업무영역을 도출한 것은 지난 연도 동일함. 특허청의 핵심업무영역을 지식재산 창출·권리화·활용·보호영역으로 확정함.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라는 임무를 도출함. 이러한 임무는 지난 연도와 동일함
- ‘경제부흥’의 국정기조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의 국정과제에 기초하여 특허청의 운영방향·기능 및 사업을 재설계함.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특허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함
- 이러한 임무와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목표(6개), 성과목표(16개), 관리과제(27개)를 제시함.
- 2012년과 비교하여 전략목표 수는 동일하지만, “우수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전략목표 IV)으로 변경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변화가 있음. 해당 전략목표의 성과목표에서도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추가하였음
- 이러한 변화 내용 및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별 관리과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7> 201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 및 과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I.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정확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① 심사·심판 처리기간의 단축	
② 심사·심판 품질 제고	
③ 고객지향의 출원·등록서비스 강화	
2. 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심사·심판 역량을 제고한다.	
① 고품질 심사·심판을 위한 교육체계 고도화	
3. 고객지향적인 지식재산권 제도를 구축·운영한다.	
① 고객 맞춤형 심사·심판 제도 구축·운영	
	II.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창출기반을 강화한다.
1. 특허정보 활용을 통해 지재권 중심으로 R&D 전략을 선도한다.	
①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	
② 연구개발-국제표준-특허를 연계한 전략적 표준특허 확보 지원	
2.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적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② 창의적 아이디어의 구현체계 지원	
	III.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1.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① 국내 지식재산권 존중문화 확산	
② 중소·중견기업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 강화	
2. 지식재산권의 보호체계를 구축·강화한다.	
① 지식재산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3.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환경을 개선한다.	
① 지식재산 분야 양자협력 활동 강화	
② 지식재산 분야 다자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	
	IV.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한다.
1. 대학, 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거래를 촉진한다.	
①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거래 촉진	
②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활용 및 관리 역량 강화	
2.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일자리를 창출한다.	
①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구축	
3.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인식제고	
	V.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글로벌 지식재산 정보화를 선도한다.
1.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특허행정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① 특허정보 서비스 강화	
② 특허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③ 특허정보 DB 구축	
④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	
2. 지식재산 정보화의 해외 협력을 강화한다.	
① 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VI. 고객 및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을 구현한다.
1. 고객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① 고객요구를 반영한 민원제도개선	
2. 기업형 책임경영 시스템을 확립한다.	
① 성과관리 문화 내재화	

자료: 특허청 (2013). “2013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pp.29-30.

## 8. 201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 2014년도 정책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 기반 강화, 지식재산 활용 생태계 구축,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보호 활동 강화, 지식재산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호 제도 개선,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환경 개선, 지식재산 정보화의 해외 협력 강화,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를 위한 고품질 특허행정 정보화 구현, 고객과 성과중심의 책임경영 구현 등으로 설정함
- 특허청의 핵심업무영역을 지식재산 창출·권리화·활용·보호영역으로 확장한 것은 지난 연도와 동일함.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라는 임무를 도출함. 이러한 임무도 지난 연도와 동일함
- ‘경제부흥’의 국정기조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의 국정과제에 기초하여 특허청의 운영방향·기능 및 사업을 재설계함.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특허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함. 2013년도와 비전이 동일함
- 이러한 임무와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목표(6개), 성과목표(16개), 관리과제(27개)를 제시함.
- 지난 연도 시행계획과 비교하여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의 수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거의 동일함. 성과목표와 연계된 관리과제에서도 거의 변화가 없음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8> 201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 및 과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I.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정확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① 심사·심판 처리기간의 단축
	② 포지티브 심사 등을 통한 심사·심판 품질 제고
	③ 고객체감도 제고를 위한 출원·등록서비스 강화
2. 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심사·심판 역량을 제고한다.	① 신기술 및 법제도 교육 강화를 통한 심사·심판 고도화
3. 고객중심의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운영한다.	① 고객 맞춤형 심사·심판 제도 구축·운영
	II.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창출기반을 강화한다.
1. 특허정보 활용을 통해 지재권 중심으로 R&D 전략을 선도한다.	①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
	②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표준특허 창출 및 보호 지원
2.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적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②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실현 및 보호체계 강화
3.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한다.	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②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발명인재 육성
	III.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1.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① 국내 지식재산권 존중문화 확산
	②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
2. 지식재산권의 보호체계를 구축·강화한다.	① 지식재산권 사법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
3.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환경을 개선한다.	①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의 국제적 위상 제고
	② 지식재산 글로벌 현상 대응력 강화
	IV.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한다.
1. 대학, 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거래를 촉진한다.	① IP 금융 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
	②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강화
2.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일자리를 창출한다.	①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성장 촉진
3.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
	V.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글로벌 지식재산 정보화를 선도한다.
1.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특허행정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① 특허정보의 민간개방 및 공유 확대
	② 특허정보시스템 적기 구축 및 운영 효율화
	③ 특허정보 DB 확충 및 품질제고
	④ 전산장비 최적화 및 안정성 강화
2. 지식재산 정보화의 해외 협력을 강화한다.	① 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VI. 국민 및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을 구현한다.
1. 국민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① 국민요구를 반영한 특허행정서비스 개선
2. 기업형 책임경영 시스템을 확립한다.	① 성과관리 문화 내재화

자료: 특허청 (2014). “201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pp.30-31.

## 9. 201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 2015년도 정책 추진방향을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지원, 창의적인 지식재산 인력 양성 등으로 설정함
- 창조경제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 증대, 주요 국가의 지식재산 전략 변화 등을 고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청의 역할을 반영한 임무·비전을 설정하여 성과관리 전략계획('13~'17)을 수립함.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라는 임무를 도출함.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특허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함
-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의 비전달성을 위하여 '지식재산으로 국민행복 및 기업성장 견인'의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 이러한 방향에 따라 고품질 지식재산이 창출되어 보호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전략목표(6개), 성과목표(17)를 수립함.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 관리과제(26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핵심지표를 구체화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함
- 전년도와 비교하여 목표 수 및 과제 수와 내용 측면에서도 거의 유사하며, 관리과제에서 1개 변화가 있음. 구체적으로 성과목표 I-1(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정확한 권리화 지원)의 관리과제 중 1개(고객체감도 제고를 위한 출원·등록서비스 강화)를 삭제함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별 관리과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9> 201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 및 과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I. 세계 최고의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정확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① 심사·심판 처리기간의 단축 ② 심사·심판 품질 제고
2. 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심사·심판 역량을 제고한다.	① 신기술 및 법제도 교육 강화를 통한 심사·심판 고도화
3. 고객 중심의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운영 한다.	① 고객 맞춤형 심사·심판 제도 구축·운영
	II.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1. 특허정보 활용을 통해 지재권 중심으로 R&D 전략을 선도한다.	①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 ②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표준특허 창출 및 보호 지원
2.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적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② 창의적 아이디어의 실현 체계 강화
3.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지식재산인력을 양성한다.	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②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발명인재 육성
	III.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1.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① 국내 지식재산권 존중문화 확산 ②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
2. 지식재산권의 보호체계를 구축·강화한다.	① 지식재산권 사법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
3.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환경을 개선한다.	①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의 국제적 위상 제고 ② 지식재산 글로벌 협상 대응력 강화
	IV.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한다.
1.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 거래를 촉진한다.	① IP 금융 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 ②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강화
2.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일자리를 창출한다.	①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성장 촉진
3.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
	V.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를 글로벌 지식재산 정보화를 선도한다.
1.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특허행정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① 특허정보의 민간개방 및 공유 확대 ② 특허정보시스템 적기 구축 및 운영 효율화 ③ 특허정보 DB 확충 및 품질제고 ④ 전산장비 최적화 및 안전성 강화
2. 지식재산 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① 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VI. 국민 및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을 구현한다.
1. 국민행복을 증진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국민요구를 반영한 특허행정서비스 개선
2. 기업형 책임경영 시스템을 확립한다.	① 성과관리 문화 내재화

자료: 특허청 (2015). “2015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pp.15-16.

## 제2절 2016년~201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성과목표 체계 기술

- 제2절에서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제3절에서 연도간의 변화를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측면에서 비교하고 이를 표로 제시함

### 1. 2016년도 성과목표 체계

#### 1) 정책방향의 고려사항

##### (1) 지식재산 창출 측면

- 지식재산의 양적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질적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미흡함
- 지식재산 창출 역량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원천기술과 핵심특허는 부족함

##### (2) 지식재산 보호 측면

-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쟁이 증가하고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여전히 취약함

##### (3) 지식재산 활용 측면

- 중소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활용이 저조함
- 지식재산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각 주체별로 다름  
중소기업: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특히 사업화, 기술이전 등 활용 저조  
대학·공공연구기관: 논문중심의 연구관행으로 지식재산 수익 창출 저조

## 2)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핵심 내용

- 창조경제를 강조하여,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
- 이를 위해 고품질의 지식재산이 창출·활용되며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 추진 전략이 필요함
- 주요국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 기반의 중장기 창조경제 추진전략을 추진 중임

## 3)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1)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시행계획의 연계

-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특허청의 임무를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로 설정함
- 2016년도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체계 선진화’로 설정함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과제를 설정하여 20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함
-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수 현황: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3개, 관리과제 24개
- 목표 및 관리과제의 세부 내용은 <표 2-11> ~ <표 2-13>을 참조함

## 2. 2017년도 성과목표 체계

### 1) 정책방향의 고려사항

- 특허 정책의 강점으로 우수한 심사 인력 및 특허정보화 시스템 인프라 보유, 선진국 수준의 심사처리기간 운영, 국내외 지재권 분쟁대응 전문가 pool 구축·운영 등이 있음
- 약점으로는 특허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의 상대적 미흡, 심사관 1인당 심사물량 및 담당분야 과중, 수요에 비해 가치평가기관 및 기술거래기관 등 기반 부족, 표준특허 확보가 대기업에 편중되는 경향, 표준특허 역량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이 있음
- 기회 요인으로 ICT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활발, 무형자산에 대한 수요자 인식 변화, 표준특허가 기업 시장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 지식재산 분야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이 있으며, 위협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IP 가치평가 비용 부담 높음, IP 출원 등 양적 성장에 비해 이전·거래·사업화·창업 등 시장 활용은 저조 등이 있음

###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특허청의 임무를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로 설정함. 이를 위한 2017년도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 선진화’로 추진할 계획.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 과제를 설정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함
-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수 현황: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1개, 관리과제 22개
- 전략목표는 2016년도와 동일하며, 성과목표는 이전연도의 목표 2개를 1개로 통합하였음. 즉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 정확한 권리화 지원(I-1)”과 “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심사·심판 역량 제고(I-2)”의 2개를 1개로 통합, “지식재산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IV-2)”과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IV-3)”의 2개를 1개로 통합하였음. 따라서 2017년도 성과목표는 이전연도에서 2개가 축소됨
- 관리과제는 성과목표의 통합에 따라 관리과제가 이동함. 그리고 특허넷시스템 고도화 특허행정서비스품질제고(성과목표 V-1)의 관리과제가 1개(전산장비 최적화 및 안정성 강화)가 삭제됨

### 3. 2017년도(수정) 성과목표 체계

#### 1) 정책방향의 고려사항

##### (1) 지식재산 창출 측면

- 지식재산의 양적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미흡함
- R&D 투자증가로 지식재산 창출 역량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원천기술과 핵심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적자임

##### (2) 지식재산 보호 측면

-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내 위조 상품의 피해는 여전히 심각함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수출중단, 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장애가 있으며,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여전히 취약하여 해외로부터 위조 상품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 (3) 지식재산 활용 측면

- 중소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활용이 저조함
-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자금과 인력 등이 부족하여 지식재산활용이 미흡함
- 대학·공공연구기관은 실적평가용 특허출원 관행과 기술이전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을 통한 수익 창출이 저조함

#### 2)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핵심 내용

-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에 기반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양질의 일자리로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
-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의 지식재산이 창출되고 효율적으로 보호되며, 활용될 수 있는 지

식재산 정책 추진 전략이 필요함

- 주요국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 기반의 중장기 창조경제 추진 전략을 추진 중임

### 3)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1)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시행계획의 연계

- 성과관리 전략계획에서 특허청의 임무를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하여 혁신 창업국가와 일자리 경제에 기여’로 설정함
- 성과관리 전략계획에서 특허청의 비전은 ‘지식재산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선도 국가로 도약’으로 설정함
- 성과관리 전략계획 상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과제를 설정하여 201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함
-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수 현황: 전략목표 4개, 성과목표 10개, 관리과제 22개
- 목표 및 관리과제의 세부 내용은 <표 2-11> ~ <표 2-13>을 참조함

## 4. 2018년도 성과목표 체계

### 1) 2018년도 정책 추진방향

#### (1) 종합계획 수립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IP) 정책방향' 수립함
-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견인하기 위한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함
- 4대 전략, 14개 핵심 추진과제 등이 제시됨

#### (2) 심사·심판 측면

- 역량 강화 및 제도 혁신을 통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있으나, 심사관 1인당 심사물량 및 담당분야가 과중함

#### (3) 지식재산 창출·활용 측면

- 우수특허 창출 및 거래·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특허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됨(특허품질: 일>미>한>중>)
- IP 출원 등 양적 성장에 비해 이전·거래·사업화·창업 등 시장 활용은 저조함

#### (4) 지식재산 보호 측면

-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으나 위조상품 유통, 특허침해에 대한 낮은 손해배상액 등 보호가 미흡함
- 주요 경쟁국의 지재권 보호 정책 강화 및 해외 특허소송이 급증하고 있음
- 기업·수요자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인식 및 분쟁대응 역량·인력 등 전문성이 부족함
-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5) 지식재산 기반 측면

-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IP 국제환경 조성, 미래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등 기반마련,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특허행정서비스 개선, 지식재산 데이터 확충 및 특허넷 시스템 안정적 운영 등의 성과가 있음
- 수요에 비해 IP 가치평가기관 및 IP 기술거래기관 등 기반이 부족함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시행계획의 연계

- 성과관리 전략계획 상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과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구체화하여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함
- 2018년도 업무계획을 반영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비전은 ‘지식재산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로 선정함
- 4대 전략 목표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화 촉진,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을 선정함
- 4대 전략목표에 근거한 10대 성과목표 추진을 통하여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에 기반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함
-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수 현황: 전략목표 4개, 성과목표 10개, 관리과제 22개
- 목표 및 관리과제의 세부 내용은 <표 2-11> ~ <표 2-13>을 참조함

### 제3절 2016-201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화 논의

#### 1. 목표 및 과제 수 변화 개요

-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전략목표 수는 2016년 5개에서 4개로, 성과목표는 13개에서 10개로, 관리과제는 24에서 22개로 변화됨

<표 2-10> 2016년~2018년도 목표 및 과제 수 변화

(단위: 개)

구분	2016년	2017년(수정)	2018년
전략목표	5	4	4
성과목표	13	10	10
관리과제	24	22	22

#### 2.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변화

##### 1) 2016년도와 2017년도(수정)의 변화

- 특허청의 비전은 2016년도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구현’에서, 2017년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선도 국가로 도약’으로 변화됨
- 특허청의 임무는 2016년도 ‘지식재산 창출·권리화·활용 촉진,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에서 ‘2017년도 ’지식재산으로 신 시장 창출, 소득주도 성장 지원하여 혁신 창업국가와 일자리 경제에 기여’로 변화됨
- 이러한 비전과 임무의 변화는 박근혜정부에서 문재인정부로의 교체에 기인함. 즉 기존의 창조경제 강조, 지식재산으로 기술혁신과 산업발전 기여 등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강조, 지식재산으로 소득주도 성장 지원, 창업, 일자리경제 등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변화됨

- 비전과 임무의 변화에 따라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가 수정되었음. 즉 전략목표는 5개에서 4개로, 성과목표는 13개에서 10개로 변화됨
- 구체적으로 2016년도 전략목표는 선진국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의 창출기반·보호기반 강화, 활용 촉진, 글로벌 정보화 선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러한 전략목표는 2017년도에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체계 구축, 활용역량 강화, 기반 조성 등으로 변화됨. 2017년도 전략목표는 소득주도 성장 지원, 혁신 창업국가 견인, 일자리 경제에 기여 등 국정과제와의 연관성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성과목표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음
  - 2016년도 전략목표(I)인 ‘선진국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및 하위 3개 성과목표(신속·정확한 권리화 지원, 심사·심판 역량 제고, 국민중심의 지식제도 구축·운영)는 2017년도에 성과목표I-1(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에 대부분이 흡수됨
  - 2016년도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적 중소기업 육성(II-2)은 2017년도에 삭제됨. 국정자문위 보고자료와 정합성 제고, 국무조정실 지적에 따른 통폐합 등의 원인이 있음
  - 2016년도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 전략 선도(II-1)는 2017년도 특허 빅데이터를 통한 국가연구개발 혁신(I-2)으로 변경됨
  - 2017년도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III-3)의 목표가 신설됨

## 2) 2017년도(수정)와 2018년도의 변화

-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201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전 연도에 비해 변화가 거의 없음
- 특허청의 비전은 2017년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선도 국가 도약’에서 2018년도 ‘지식재산의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로 변경됨으로써 큰 틀에서 유사함
- 2018년도 특허청의 임무는 ‘지식재산으로 신 시장 창출,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하여 혁신 창업국가와 일자리 경제에 기여’로 수정된 2017년도 시행계획과 동일함
- 비전과 임무의 변화가 거의 없는 이유는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임. 즉 4차 산업혁명 대응 강조, 지식재산으로 소득주도 성장 지원, 혁신 창업, 일자리경제 등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내

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임

- 비전과 임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각 연도에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수는 각각 5개, 10개로 동일하며, 전략목표의 기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성과목표의 내용도 거의 동일함
- 구체적으로 2017년도 전략목표는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의 창출로 소득주도 성장 지원,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으로 혁신 창업국가 견인, 지식재산권 활용 역량 강화로 일자리 경제에 기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기반 조성 등 국정과제와의 연관성을 강조함. 2018년도 전략목표는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등임
- 전략목표의 표현은 다르지만 2개 연도 모두에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선순환 체계를 강조하는 정책방향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전략목표 아래의 성과목표도 거의 변화가 없음. 2017년도 성과목표(I-1)인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은 2018년도 성과목표(I-2)인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으로 변경됨. 2017년도 성과목표(I-2)인 특허 빅데이터를 통한 국가 연구개발 혁신은 2018년도 성과목표(I-1)인 국가·민간 연구개발 전 주기의 강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으로 변경됨
- 전술한 2가지 성과목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의 성과목표는 동일함
- 지금까지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변화 논의를 아래 표로 제시함

<표 2-11> 특허청 2016년~2018년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변화

구분	2016년 목표 체계		2017년(수정) 목표 체계		2018년 목표 체계
전략 목표	I.선진국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I.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 창출로 소득주도 성장 지원		I.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
	1.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정확한 권리화 지원		1.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제공		1. 국가·민간 연구개발 전 주기의 강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
	2.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심사·심판 역량 제고		2.특허 빅데이터를 통한 국가 연구개발 혁신		2.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3.국민 중심의 지식재산 제도 구축·운영 및 행정서비스 제공				
전략 목표	II.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II.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으로 혁신 창업국가 견인		II.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
	1.특허정보 활용 통해 지재권과 연계한 연구개발 전략 선도		1.지식재산권 보호활동 및 체계 강화		1.지식재산의 보호활동 및 체계 강화
	2.지식재산 기반의 창조적 중소기업 육성		2.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환경 개선		2.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환경 개선
	3.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지식재산인력 양성				
전략 목표	III.지식재산권의 효과적 보호기반 강화		III.지식재산권 활용 역량 강화로 일자리 경제에 기여		III.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1.지식재산권 보호활동 및 체계 강화		1.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거래 촉진		1.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거래 촉진
	2.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환경 개선		2.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및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을 통한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2.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및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을 통한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3.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3.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전략 목표	IV.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IV.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기반 조성		IV.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1.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거래 촉진		1.창의적인 지식재산인력 양성		1.창의적인 지식재산인력 양성
	2.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일자리창출		2.지식재산 행정 및 정보서비스 품질 제고		2.지식재산 행정 및 정보서비스 품질 제고
	3.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3.글로벌 특허정보 공유체계 강화		3.글로벌 특허정보 공유체계 강화
전략 목표	V.글로벌 지식재산 정보화 선도				
	1.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특허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				
	2.지식재산 정보화의 해외 협력 강화				

### 3. 관리과제의 변화

#### 1) 2016년도와 2017년도의 변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대폭 수정에 따라 관리과제도 신설, 삭제, 자리이동 또는 내용 변경 등이 수반됨
  
- 관리과제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음
  - 2017년도 성과목표(III-3)의 신설에 따라 지역의 지식재산경영기반 구축,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등의 관리과제가 신설됨
  
  - 2016년도 성과목표(II-2)의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창의적 아이디어의 실현 체계 강화 등의 관리과제가 삭제됨
  
  - 이외에도 관리과제의 삭제는 다음과 같음. 지식재산권 보호 법제의 실효성 제고, 전산장비 최적화 및 안정성 강화 등이 삭제됨
  
  - 관리과제의 변경은 다음과 같음.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성장 촉진에서 지식재산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강화,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서 지식재산 선진5개국 협의체 및 국가간 협력을 통한 국제 질서 변화 선도 등으로 변경됨
  
  -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성과목표 변화에 따른 관리과제의 자리이동이 두드러짐. 대국민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등 대다수의 관리과제가 성과목표를 달리하여 자리가 이동됨.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할 수 있음

<표 2-12> 특허청 2017년도(수정) 관리과제의 변화

구분	2016년도 관리과제	2017년도(수정) 관리과제
	I.선진국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I.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 창출로 소득주도 성장 지원
	1.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정확한 권리화지원	1.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제공
과제	심사·심판 품질향상 및 처리기간 적시성제고	심사·심판 품질향상 및 처리기간 적시성제고
	2.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심사·심판 역량 제고	신기술 등 교육강화 통한 심사·심판 고도화
과제	신기술 등 교육강화 통한 심사·심판 고도화	공정하고 편리한 심사·심판 제도 구축·운영
	3.국민 중심의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운영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	2.특허 빅데이터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혁신
과제	고객맞춤형 심사·심판 제도 구축·운영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
과제	대국민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 지원
	II.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II.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으로 혁신 창업국가 견인
	1.특허정보 활용을 통해 지재권과 연계한 연구개발 전략 선도	1.지식재산권의 보호활동 및 체계 강화
과제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R&D효율성 제고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과제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 지원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 강화
	2.지식재산 기반의 창조적 중소기업 육성	2.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환경 개선
과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의체 등 변화 선도
과제	창의적 아이디어의 실현 체계 강화	우리 기업에 우호적 글로벌지식재산협상강화
	3.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지식재산인력 양성	
과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과제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창의적 발명인재 육성	
	III.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 강화	III.지식재산권 활용 역량 강화로 일자리 경제에 기여
	1.지식재산권의 보호활동 및 체계 강화	1.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거래 촉진
과제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IP금융연계 등 중소기업 사업화 및 거래촉진
과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 강화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역량강화
과제	지식재산권 보호 법제의 실효성 제고	2.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및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2.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환경 개선	지식재산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강화
과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의 국제적 위상 제고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
과제	지식재산 글로벌 협상 대응력 강화	3.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과제		지역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과제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IV.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IV.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기반 조성
	1.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거래 촉진	1.창의적인 지식재산인력 양성
과제	IP금융연계 통한 중소기업 사업화 및 거래촉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과제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역량강화	창의적인 발명인재 육성
	2.지식재산서비스업활성화 통해 미래일자리창출	2.지식재산 행정 및 정보서비스 품질 제고
과제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성장 촉진	대국민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3.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식재산정보시스템 적기구축 및 운영효율화
과제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	지식재산정보 DB 확충 및 품질 제고
	V.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글로벌 지식재산 정보화 선도	3.글로벌 특허정보 공유체계 강화
	1.특허넷시스템 고도화 특허행정서비스품질제고	국내외 지식재산정보 민간개방 및 공유확대
과제	특허정보의 민간개방 및 공유 확대	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과제	특허정보시스템 적기 구축 및 운영 효율화	
과제	특허정보 DB 확충 및 품질 제고	
과제	전산장비 최적화 및 안정성 강화	
	2.지식재산 정보화의 해외 협력 강화	
과제	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2) 2017년도와 2018년도의 변화

- 전략목표는 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거의 유사하고, 성과목표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관리과제에서도 변화가 거의 없음
- 성과목표(I-1)의 3개 관리과제 중 심사·심판 품질 향상 및 처리기간 적시성 제고는 성과목표(I-2)의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 구현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성과지표를 참조하면(선행기술검색충실도, 심판품질관리지수에서 선행기술조사 심사 전 제공 실적, 결정계 심결취소율) 실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성과지표를 참조할 경우, 전술한 사항을 제외하면 관리과제도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지금까지의 논의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3> 특허청 2018년도 관리과제의 변화

구분	2017년도(수정) 관리과제	2018년도 관리과제
	I.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 창출로 소득주도 성장 지원	I.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
	1.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제공	1. 국가·민간 연구개발 전 주기의 강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
과제	심사·심판 품질향상 및 처리기간 적시성제고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정부 R&D 효율성 제고
과제	신기술 등 교육강화 통한 심사·심판 고도화	산·학·연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
과제	공정하고 편리한 심사·심판 제도 구축·운영	2.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2.특허 빅데이터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혁신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 구현
과제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	공정하고 편리한 심사·심판제도 구축·운영
과제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 지원	심사·심판관 대상 신기술 및 법제도 교육 강화
	II.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으로 혁신 창업국가 견인	II.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
	1.지식재산권의 보호활동 및 체계 강화	1.지식재산의 보호활동 및 체계 강화
과제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국내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과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 강화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 강화
	2.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환경 개선	2.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환경 개선
과제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의체 및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제 질서 변화 선도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의체 및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제 질서 변화 선도
과제	우리 기업에 우호적 글로벌지식재산협상강화	우리 기업에 우호적 글로벌 지식재산협상강화
	III.지식재산권 활용 역량 강화로 일자리 경제에 기여	III.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1.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거래 촉진	1.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거래 촉진
과제	IP 금융 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	IP 금융 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
과제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역량강화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강화
	2.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및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2.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및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과제	지식재산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강화	지식재산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강화
과제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
	3.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3.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과제	지역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지역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과제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IV.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기반 조성	IV.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1.창의적인 지식재산인력 양성	1.창의적인 지식재산인력 양성
과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과제	창의적인 발명인재 육성	창의적인 발명인재 육성
	2.지식재산 행정 및 정보서비스 품질 제고	2.지식재산 행정 및 정보서비스 품질 제고
과제	대국민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대국민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과제	지식재산정보시스템 적기구축 및 운영효율화	지식재산정보시스템 적기구축 및 운영효율화
과제	지식재산정보 DB 확충 및 품질 제고	지식재산정보 DB 확충 및 품질 제고
	3.글로벌 특허정보 공유체계 강화	3.글로벌 특허정보 공유체계 강화
과제	국내외 지식재산정보 민간개방 및 공유확대	국내외 지식재산정보 민간개방 및 공유확대
과제	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제4절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타 계획과의 비교

- 이하에서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주요 계획과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간략히 비교하였으며, 비교 대상과의 차이점을 위주로 기술함

### 1.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의 비교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임
- 이 계획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과제 접수,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사전검토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됨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은 1차 기본계획('12~'16)의 5년간 성과 진단 및 글로벌 환경변화를 반영함. 또한 향후 5년간 달성할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를 구체화함
- 이 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 20개 핵심과제, 45개의 추진과제와 하위 세부과제로 구성됨
- 따라서 이 기본계획은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비교하여 전략과 핵심과제 등으로 이루어진 체계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지식재산 분야 최상위 계획이라는 점,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공정위, 금융위, 특허청 등 24개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아래는 이 계획의 전략과 핵심과제를 보여주고 있음

<표 2-14>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전략 및 핵심과제(일부)

5대 전략	20개 핵심과제 및 45개 하위과제 중 일부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1. 지식재산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
	2. 신기술 분야 R&D에 표준특허 전략 적용 강화
	2-1. 표준특허 전략이 필요한 분야에 R&D-특허-표준 연계 추진
	2-2. 국제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대외 활동 강화
	3.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IP 경영 강화
	3-1. 출연(연) IP 경영전략 도입
	3-2. 출원 前 심사 및 미활용특허 관리 강화
	4. IP·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4-1. 기술 거래 활동의 인센티브 강화
	4-2. IP·기술의 거래·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후속 지원 확충
	5. 민간중심의 IP 금융 고도화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5-1. IP 금융을 통한 우수 IP 기업 지원 강화
	5-2. 민간 중심의 IP 금융을 위한 인프라 구축
	6. 중소기업의 IP 활동 지원 강화
	6-1. 중소기업에 대한 IP-R&D 지원 확대
	6-2. 중소기업의 IP 경영 지원 강화
	6-3.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및 소송보험 활성화
	7.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7-1. 미등록 아이디어·디자인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
	7-2. 하도급 거래 등에서 부당한 기술 침해 근절
	7-3. 중소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정비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8-1. 직무발명 범위 확대 및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	
8-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관계 및 이익배분체계 합리화	
9. 해외 진출 기업의 IP 애로 해소 지원	
9-1.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IP 종합 전략 지원	
9-2. IP-DESK의 기능 확대 및 전문성 강화	
9-3. 해외 상표브로커 및 모조품 유통 등에 대한 대응 강화	
10. IP 국제공조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10-1. 글로벌 심사협력 강화	
10-2. 개도국에 IP 행정 서비스 지원 및 IP ODA 확대	
10-3. IP 국제기구 유치 및 글로벌 IP 이니셔티브 주도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등	11. 생물·유전자원 관련 新 국제규범 대응
	추진과제 12-15. 생략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16.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IP 보호체계 정비
	16-1. 신기술 IP에 대한 보호체계 정립
	16-2.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SW지재권 보호체계 개선
	16-3. SW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단속 강화
	17.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17-1. 특허 무효율 저감을 위한 고품질 심사 실현
	17-2. IP 분쟁해결시스템 선진화
	18. IP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18-1. 민간 IP 서비스업 인프라 구축
	18-2. IP 서비스 전문인력 수급 기반 조성
	19. IP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IP 역량 제고
	19-1. 공공부문 IP 인력 확충 및 조직 정비
	19-2. IP 교육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내실화
	19-3.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제고 및 브랜드 개발
19-4.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6).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2017-1021)”. pp.25-78.

## 2. 2018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의 비교

-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전술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임. 따라서 기본계획 아래 5개 연도(2017년~2021년의 각 연도) 시행계획이 있으며 현재 2018년도 시행계획이 집행되고 있음
- 이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자체의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됨
- 전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당해 연도 시행계획은 및 차년도 재원배분 방향 등 3년간의 국가지식재산 정책 방향이 연도되어 추진됨. 예를 들어 2017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시행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18년도 중점방향에 따라 2019년도 재원배분방향에 대해 의견이 제시됨
- 2018년도 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문체부, 특허청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음
- 2018년도 시행계획은 6대 중점방향, 12개 추진과제, 110개 세부과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따라서 이 시행계획은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비교하여 추진과제와 세부과제의 목표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최상위계획)의 연도별 계획이라는 점,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표 2-15>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중점방향 및 추진과제(일부)

방향I. IP 기반의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	방향III.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IP 역량 강화 및 공정질서 확립
1. IP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5.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IP 활동 지원 강화
선도적 'IP 창출' 인재 성장 지원	5-1. 중소·벤처기업의 IP 활동 지원 강화
'IP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5-1-① IP 기반 혁신 창업 활성화
현장중심 'IP 관리' 인재 성장 지원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시행
현장·융합형 'IP 인재 육성 기반' 내실화	IP 기반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 단계별 지원 강화
2. 민간 IP 서비스업 및 시장주도 IP 거래·금융 활성화	5-1-② 중소기업에 대한 IP-R&D 지원 확대
2-1. IP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및 기술분야별 IP-R&D 지원 강화
민간 주도의 IP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부처 협업을 통한 R&D 및 IP-R&D 공동 사업 추진
IP 서비스 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중소기업 수요 기반 R&D 활성화
IP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표준특허 중소기업 육성
2-2. IP·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5-1-③ 중소기업 특허공제제도 도입 및 소송보험 활성화
2-2-① IP·기술거래 활동의 인센티브 강화	중소기업 특허공제사업 추진
IP 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개 활성화	분쟁 대응 컨설팅 및 소송보험 지원
2-2-② IP·기술거래·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후속지원 확충	5-2.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공공기관 우수 IP 선별·활용 지원 및 기업 IP활용역량강화	직무발명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인식 개선
2-3. 민간 중심의 IP 금융 고도화	공공분야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2-3-① IP 금융을 통한 우수 IP 기업 지원 강화	6.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
우수 특허 보유 스타트업 등에 대한 IP 투자 강화	6-1.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상표권 기반 투자 활성화 유도	6-1-①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부당한 기술침해 근절
2-3-② 민간 중심의 IP 금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부정경쟁행위 확대 및 처벌·행정조치 강화
IP 가치평가의 전문영역 특화 및 신뢰성 제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및 처벌 강화
IP 금융인력 육성 및 전문성 제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계약 역량 제고
방향II. 4차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창출 위한 강한IP확보	6-1-② 중소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정비
3. IP-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IP 선점	관계부처 협력으로 피해사건 신속 해결
3-1. IP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R&D 전 주기 특허 빅데이터 분석 지원 확대	방향V.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3-2. 신기술 분야 R&D에 표준특허 전략 적용 강화	9. 현지 대응체계 강화 및 국제공조 지속 확대
3-2-① R&D-특허-표준 연계 추진	9-1. 해외 진출 기업의 IP 애로 해소 지원
표준특허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9-1-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IP 종합 전략 지원
3-2-② 국제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대외 활동 강화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을 위한 IP 종합 지원
국제표준 대응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IP 역량 강화
국제표준화 활동의 전문성 향상 및 인식 제고	9-1-② 현지대응체계강화(IP-DESK 기능확대 및 전문성강화)
3-3.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IP 경영 강화	IP-DESK를 중심으로 한 해외 지적권 분쟁 예방·대응 강화
특허 출원 및 미활용 특허에 대한 체계적 관리	9-1-③ 해외 상표브로커 및 모조품 등에 대한 대응 강화
4. 신기술·신산업 대응 IP 인프라 구축	상표 침해 위조상품 등에 대한 예방 및 조기 대응 강화
4-1.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IP 보호체계 정비	9-2. IP 국제공조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4-1-①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SW 지적권보호체계개선	9-2-① 글로벌 심사협력 강화
온라인 상에서의 특허기술이 포함된 SW 보호체계 마련 및 심사 내실화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주요국 간 심사공조 강화
4-2.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특허 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인적교류 활성화
4-2-① 특허 무효를 저감을 위한 고품질 심사 실현	9-2-② IP 국제기구 유치 및 글로벌 IP 이니셔티브 주도
4차 산업혁명 대비 심사조직 및 방식 개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참여 확대 및 지역사무소 유치
고품질 심사를 위한 심사인력 확충	IP 관련 국제 협력 확대 및 글로벌 이슈 주도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9-2-③ 개도국에 IP 행정 서비스 지원 및 IP ODA 확대
4-2-② IP 분쟁해결 시스템 선진화	한국형 특허행정서비스의 해외 보급 확대
특허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특허 소송·심판 체계 개선	글로벌 IP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확산
특허심판의 품질 제고	개도국에 대한 전략적 지원 및 IP-ODA 사업 체계화
	방향VI. IP 존중 문화 조성
	11. 초중고 IP 교육 확대 및 시민 인식제고 노력 강화
	11-1. 청소년 대상 IP 교육 강화
	초중고 학생 대상 발명·특허 소양교육 강화
	11-2. IP 친화적 환경 조성
	IP 인식 제고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8).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pp.3-105.

###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의 비교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2017년 11월)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지식재산’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종합적인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마련한 것임
- 이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과의 연관성을 논의하면서, 4차 산업혁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 소프트 파워가 경쟁력의 원천이며 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기술함
- 4차 산업혁명 승자의 요건이 지식재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연간 360조 규모의 지식재산 시장은 두뇌가 자원인 우리에게 고급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의 원천임을 부각시킴
- 이 보고서에서는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지식재산정책을 논의하고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새정부의 국정방향과 부합하는 지식재산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함
- 우리 지식재산 정책의 현주소를 혁신성장(특허품질 고도화 통해 원천특허 창출 필요), 공정경제(중소기업의 IP 보호 강화 시급), 일자리경제(IP 기반 창업 활성화 필요), 기반(IP 생태계 조성 시점) 등 4가지 측면에서 논의함
- 이 보고서에서는 전술한 논의를 통하여 기본방향과 연도별 주요 달성 목표를 설정함. 또한 4대 전략, 14개 핵심추진과제, 79개 세부과제를 설정함. 요약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사업화 촉진, 기반 마련 등 4대 전략의 지식재산 선순환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지식재산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의 비전을 제시함
- 이 보고서를 참조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4대 전략과 목표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함. 그러나 이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년간(2022년까지)의 장기계획이라는 점, 전략추진을 위한 입법소요(법률개정사항과 목표연도 등)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핵심과제와 세부과제가 방대하다는 점, 세부과제의 추진 일정이 2022년까지 지속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표 2-1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의 전략 및 과제

전략	핵심과제	세부과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	특허 심사품질 혁신	고품질 심사에 대한 책임행정 구현
		심사 역량 강화
		선행기술조사 내실화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4차 산업혁명 기술·디자인에 대한 우선심사
		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수수료 감면
		4차 산업혁명 분야 국가 R&D 지원 강화
	특허창출의 전주기 관리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지원
		R&D 단계: 특허 빅데이터에 기반한 R&D 전략 지원 강화
		출원 단계: 고품질 특허 설계·출원 기반 마련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	심사前 단계: 심사청구시 선행기술조사 결과 사전 제공
		외부위원 참여, 윤리강령 제정 등 심판 공정성 강화
		심판 조직, 인사 등의 혁신을 통한 심판 전문성 제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통한 특허 보호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판업무의 효율성 제고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영업비밀 보호 제도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주도	조사·지정권고 등 지식재산 집행 기능 대폭 강화
		우리 기업의 K-브랜드 보호 체계 강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IP 분쟁 예방·대응 지원
	경제·사회적 지식재산 격차 해소	해외에서의 IP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여성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향상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익변리 서비스 확대
		사회적 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특허·상표·디자인 조사서비스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으로 새로운 지식재산 서비스 창출
		민간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 지정 확대
	중소·벤처기업 IP 역량 강화 및 IP 기반 창업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강화 및 서비스 인력 양성
		지식재산 분야 세계개선 추진
		IP 발굴·거래 등을 촉진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특허공제 제도' 도입 추진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스타트업에 대한 특허바우처 사업 시행
		지역의 지식재산 강소기업 발굴·육성
		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체계 활성화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도 개선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체계 개선
		미래 신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제도 정비
	미래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효율화	융복합 발명·창작물의 IP 보호 강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특허정보시스템 고도화 전략 수립
		특허 빅데이터 자원의 가치창출·활용 기반 조성
	발명인재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청소년 발명교육 확산
		초·중·고 교원의 발명교육 인식 및 역량 증진
		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 강화
		현장 중심의 지식재산 실무능력 제고
발명 장려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	전문 자격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시허 및 제도 개선	
	발명 친화적 사회 환경 구현	
	직무발명제도 개선 및 도입 확산	
	발명인에 대한 포상 및 예우 강화	
	지식재산 허위표시 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 추진	
	국민 참여를 통한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	

자료: 특허청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pp.7-34.

#### 4. 2018년 특허청 업무계획과의 비교

- 특허청 업무계획은 특허청의 비전·목표, 이에 따른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분기별 추진계획 등을 제시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서 연말에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획서임
- 2018년 업무계획에는 2017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기술하고 2018년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을 기술함. 2017년도 주요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음. 심사·심판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을 제고(무효심판인용률 등 제시), 지식재산 창출·활용 분야에서 우수특허 창출 및 거래·사업화기반을 강화(우수특허비율, IP금융지원액 등 제시),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 보호 실효성 제고(악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와 같은 성과를 제시함
- 2018년도 정책여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신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허품질 미흡(4차 산업혁명 분야 표준특허 국가별 비교 등),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기술에 대한 보호 취약(기술 유출·탈취 건수·규모 등), IP 서비스업 영세 및 IP 기반 창업부진(창업기업 5년 생존율 등) 등의 현황을 수치로 제시함
- 2018년도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은 특허창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원천·핵심특허 확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 지식재산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사업의 과감한 민간 개방,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생태계 조성 등 4가지로 제시함
- 이러한 여건진단과 정책추진방향을 기반으로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 기반 마련 등 4가지로 제시함
- 특허청 업무계획은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비교하여 비전 및 전략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업무계획의 추진과제와 시행계획의 성과목표는 상이하며 전자의 추진과제가 더 방대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경제·사회적 지식재산 격차 해소, 발명 장려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 등의 추진과제는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표 2-17> 2018년도 특허청 업무계획의 전략 및 추진과제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창출의 전 주기적 품질관리</li> <li>·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표준 특허 확보</li> <li>· 공정하고 신속한 특허심판 구현</li> </ul>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li> <li>·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주도</li> <li>· 경제·사회적 지식재산 격차 해소</li> </ul>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li> <li>·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li> <li>·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li> </ul>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명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li> <li>·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li> <li>· 미래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효율화</li> <li>· 발명 장려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li> </ul>

자료: 특허청 (2018). “2018년도 특허청 업무계획”. p.8.

## 5. 2018년 특허청 성과목표 정의서와의 비교

- 성과목표 정의서는 특허청 정책부서의 조직평가를 위해 각 과·팀별로 성과목표와 가중치를 제시한 계획서임
- 2018년 조직 성과목표에는 33개 과 또는 팀의 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목표가 2개인 8개 부서와 3개인 2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 2018년 조직 성과목표는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비교하여 성과목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음. 그러나 전자는 특허청 내부의 정책부서 평가를 위한 계획서인데 비해, 후자는 부처기관의 정부업무평가를 위한 계획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또한 전자는 정책부서의 성과목표를 제시하는데 비해, 후자는 국정기조 및 특허청 업무계획과의 연계성도 고려하고 있음. 또한 전자는 정책부서의 성과목표와 과제를 단순히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후자는 전략·성과목표·관리과제의 연쇄관계를 도식화하여 보여줄 뿐만 아니라 관리과제의 성과지표와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등 계량적 측정설계를 포함하고 있음

<표 2-18> 2018년도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성과목표 정의서(일부)

성과목표 ①	국가 지식재산전략 및 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추진	가중치	60%
<p>□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및 지원 정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특허공제 도입을 위해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 중기재정계획 반영, '19년 예산 확보 등 제도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특허공제 운영요령, 공제계약 약관, 공제금 지급이율표 등 세부 운영규정 마련</li> <li>○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시행 및 예산 확대 추진</li> <li>○ 스타트업 IP 액셀러레이터 육성 방안 추진</li> <li>○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및 M&amp;A를 위한 특허 정보 공개 방안 마련 추진</li> </ul> <p>□ 지식재산 세제개선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우수특허를 창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세제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비용 세액공제 신설, 기술이전·취득과세 특례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인상 등 지식재산 세제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li> </ul> <p>□ 국가 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재산미래전략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및 정책 과제 도출</li> <li>○ 경제관계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지식재산위원회 등 범정부 회의체에 안건을 발굴·상정하여 지식재산 정책 추진 동력 확보</li> <li>○ 산업부, 중소벤처부, 과기정통부 등 지식재산 유관 부처와의 협업 체계 구축 및 협력 과제 도출·추진</li> <l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17.11 수립)」 후속조치 및 이행현황 점검</li> </ul>			

자료: 특허청 (2018). “특허청 정책행정지원군 성과목표 정의서”. p.10.

## 6. 2018년 특허청 성과계획서와의 비교

- 특허청 성과계획서는 재정투입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34조에 의거 예산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계획서임
- 2018년 성과계획서는 그간의 재정운용성과를 근거로 하여 2018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계획을 보여줌. 또한 전략목표별로 프로그램목표의 추진계획을 제시함. 뿐만 아니라 목표체계별 예산,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예산사업별 단위사업 등 특허청의 예산과 목표를 연계시킨 계획서임
- 성과계획서는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비교하여, 임무·비전·전략목표 등 목표체계 측면, 성과지표의 계량적 측정설계(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등)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음. 그러나 전자는 각각 2개의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가 있으며 1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자는 4개 전략목표, 10개 성과목표(15개 성과지표), 22개 관리과제(32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전자는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일반재정, 정보화, R&D) 비대상 단위사업(인건비, 기본경비, 교부금, 예비비, 차입이자상환, 내부거래, 보전지출 등) 등으로 구분하는데 비해 후자는 예산 또는 재정관련 연계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음

<표 2-19> 2018년 특허청 성과계획서 목표 및 과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과제코드	비고
전략목표 I. 고객지향적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그램목표 I-1. 고품질의 심사·심판을 구현한다.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1) 심사·심판처리 지원	I-1-재정①	
	(2)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I-1-재정②	
	(3)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I-1-재정③	
프로그램목표 I-2. 심사·심판 정보처리시스템을 고도화 한다. (지식재산행정정보화)			
지식재산행정 정보화	(1)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I-2-정보화①	
	(2) 특허정보화 국제협력	I-2-정보화②	
전략목표 II. 지식재산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			
프로그램목표 II-1. 지식재산 창출역량을 강화한다.(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1)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II-1-재정①	
	(2) 지식재산 인력양성	II-1-재정②	
	(3)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II-1-R&D①	
프로그램목표 II-2.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한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1) 지식재산권보호 기반조성	II-2-재정①	
	(2) 특허기술 활용촉진	II-2-재정②	조세지출 병행

자료: 특허청 (2018). "2018년도 성과계획서". p.3.

## 7. 타 부처 성과관리 시행계획 검토

- 특허청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중소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각각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기로 함
- 이들 각 부는 조직과 업무가 방대하여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수가 많기 때문에 특허청과 우열 비교 등은 적합하지 않으며, 다만 유사한 관리과제와 세부사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음. 따라서 아래에서는 각 부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를 기술하고 특허청과 유사한 관리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음

### 1) 중소기업부 성과관리 시행계획<sup>1)</sup>

#### (1) 2018년도 정책 추진방향

- 중소기업 정책이 새 정부 3가지 경제패러다임의 실천을 주도함. 기존은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이었음. 즉 일자리·가계소득은 성장의 결과, 대기업·수출 중심 성장, 형식적 동반 성장 등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기존 전략은 세 가지 축 성장 전략으로 개편됨. 이에 따라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중소기업 중심 혁신 성장, 강력한 공정경제 등의 정책이 제시됨
- 장관급 신설부처로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함. 기존 중소기업청 소관의 정책 중심에서 범정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조정함. 중앙·지방정부의 1,34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총괄·조정하고, 타부처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한 공조를 강화함. 또한 기존 “청”에서는 법안제출권 없었으며 정책의 집행에 치중한 데 비해, 독자 법안제출권을 가지면서 기획기능을 강화함. 법령 제출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현안 등에 대한 법률의 신속·적극적 역할 강화함(예: 벤처투자법 제정 등). 중소기업 정책 어젠더를 적극 발굴·제시함
- 국민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지원 방식 개편하여 서비스기관으로 역할 재정립함. 단편적·분절적 지원에서 일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스크럼 방식으로 지원함. 공급자 중심 지원에서 탈피하여, R&D - 자금 - 인력 - 마케팅 - 수출까지 기업에게 필요한 사항을 일관

1) 중소기업부 (2018),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pp.2-188에서 인용함

및 스크립 방식으로 종합 지원함. 정부 주도 지원에서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환함. 민간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지원 방식을 개편함. 탁상 행정 중심에서 현장 소통을 통한 정책을 기획함. 전문가 등을 통한 간접 현장 경험을 탈피하여 직접 업계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뜻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함. 관행적으로 지원을 지속한 데 비하여 성과 분석을 통해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함. 상시 성과 분석·평가 등을 통해 일자리 중심으로 사업을 통·폐합함. 이러한 변화 방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함

- 따라서 새 정부의 3가지 경제패러다임과 중기부 5대 국정과제를 연계함. 즉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과 연계된 “격차완화 통한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 중심 혁신성장 패러다임과 연계된 “창업국가 조성”,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강력한 공정경제 패러다임과 연계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등이 있음

## (2)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특성

### ① 성과관리 전략계획과의 연관성

- 뉴노멀(저성장 고착화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인 시대), 4차 산업혁명(유연하고 빠른 기업 및 기술혁신이 중심)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의 주체, 국민 대다수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득 주도 성장의 출발점임. 2011년~2014년 일자리 창출기여도는 중소기업 97% vs. 대기업 3%이며,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 종사자의 88%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더불어 성장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제·사회 구현이 필요함. 이러한 환경 변화를 극복하는 열쇠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라고 할 수 있음

### ② 국민의 복지 증진 등 희망의 새시대를 열기위한 필수 전제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이 근본적으로 필요함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함. 이를 위해 지원사업의 일자리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 조정 등을 추진함(중앙·지방정부 1,347개, 16.6조 규모의 중소기업 사업을 통합 관리 중, 2014~)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한 공공분야 퇴출 등을 통해 엄정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함

- 적합업종 법제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을 통해 300만 소상공인·600만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하여 더불어 성장을 추진함
- ③ 이러한 정책방향에 역량을 결집하여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주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해 나갈 계획임
- ④ 임무와 비전 달성을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1개 성과목표를 추진, 특히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함
- 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
- 기술·지식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해외지향형 창업 적극 육성 등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업을 촉진함
  - 지식서비스분야 창조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 역량 제고와,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층이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 지역 창업·혁신 플랫폼 확산 등 창업 활성화와,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강화 및 창의·혁신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함
  - 기술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
  - 벤처기업의 투자 중심의 자금조달 체계 마련과 벤처투자의 중간 회수시장 확충 등 벤처 투자 및 회수의 활성화를 추진함
  - 新 벤처 클러스터 구축 플랫폼의 선진화와 벤처 정신 확산 플랫폼의 개방화로 벤처기업 지원 생태계 플랫폼 정착을 추진함
- ㉕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인력난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함
- 중소기업 R&D 혁신과 일자리 창출 위주의 R&D 지원으로 중소기업 창업·성장 촉진함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인식 제고와, 민·관,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함
  -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기능인력 양성·공급과,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과,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위주의 R&D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의 확보를 지원함
  
- ㉔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촉진함
  - 중소기업 시장수요를 확대하고 마케팅기반을 확충함. 중소기업제품의 시장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제도의 지속적인 추진 및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및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지원 사업 확대·지속 운영함
  - 창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출 및 신산업 촉진 영역에 대한 금융 공급 확대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 또한, 경기침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경영안정 도모가 필요함
  -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 및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 완화, 성실실패 기업인의 재창업 촉진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개선 및 재도전 생태계 구축을 통해 재도약을 활성화함
  - 수출저변 확대와 수출역량 강화 및 유망 소비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함
  
- ㉕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함
  - 과밀창업 억제 및 안정적 퇴로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확충을 지원함
  -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함
  - 대·중소기업간 협력 파트너 관계 강화와, 대·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동반성장을 지원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력축진을 통해 역동적인 시장으로 육성함
  
- ㉖ 중소기업 친화적 정책환경 조성과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함
  - 지역특성에 부합한 특화산업 집중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와, 수요자(중소기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 실시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선도함
  -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을 위한 통계 개발·개선,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을 통한 조

사·통계자료 제공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료 생산·관리가 필요함

-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및 예방 강화와, 협동조합을 통한 기업 간 협업 및 경제적 지위향상 도모를 통한 동반성장의 문화를 확산함

⑤ 성과관리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를 '18년 시행계획의 성과목표,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에 반영함

⑥ 2018년도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수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22개, 관리과제 50개 임. 아래 그림은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제시된 목표체계임

<그림 2-1>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체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8).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p.11

(3) 특허청과 유사한 관리과제

-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기반조성의 관점에서 특허청과 유사한 관리과제를 탐색하였음. 아래에서는 중기부 성과목표 II-2(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와 민·관,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환경 조성) 중에서 관리과제(①)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응 역량 및 인식 제고” 성과목표 II-4(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확보) 중에서 관리과제(②)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위주 R&D 지원”, 성과목표 IV-3(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생태계 확산) 중에서 관리과제(①)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등 성과공유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문화 확산(예: 지식재산권 공유)” 등을 각각 논의하였음

① 관리과제(II-2-①)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대응 역량 및 인식 제고

㉔ 주요 내용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보안, 법률, 신고·수사 등) 전문 상담·진단 지원
- 신속하고 공정한 기술유출 분쟁 조정·중재를 통해 피해구제지원 및 교육과 홍보를 통한 자율적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 보안관제 강화 및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㉕ 외부환경요인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비율은 '13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기술유출 건당 피해액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기술유출 비율(%) : ('13) 10.2 → ('14~15) 3.3 → ('16) 3.5 → ('17) 3.8

\*\* 기술유출 건당 피해액(억원) : ('15) 13.7 → ('16) 18.9 → ('17) 13.1

- 대기업 대비 기술보호역량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은 보통 단계

\* 대기업 대비 기술보호역량(%) : ('15) 71.3 → ('16) 73.4 → ('17) 75.5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점) : ('15) 47.6 → ('16) 49.3 → ('17) 51.3

- 기술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술유출 대응방안 수립 및 인력 관리가 전반적으로 취약

\* 유출원인(%) : 보안관리·감독체계 미흡(46.5), 임직원 보안의식 부족(23.5)

-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통한 기술유출 사전예방부터 피해기업의 사후구제까지 기술보호 확산으로 안정적인 기술개발 기반 조성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2월)을 통해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 행정·법률·물적 지원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추진

㊤ 관리과제 추진계획

○ 추진배경 (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기술경쟁력 제고 및 관련 산업발전 등에 기여
-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유출 조정·중재, 인식개선 홍보·교육,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문가 상담·자문)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보안, 법률, 신고 등) 전문상담·진단 실시
- (신고센터)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운영 및 기술 분쟁·탈취 신고·수사 기능 활성화
- (기술유출 분쟁조정·중재)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비공개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한 기술분쟁 해결을 지원
- (인식개선) 중소기업 CEO 교육 과정 운영, 대·중소기업 임직원 교육 및 기획방송·기사, 공익광고 등 정책홍보 캠페인 전개
- (기술지킴서비스)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사이버 침해사고 방지·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취약점 모니터링, 보안솔루션 등 지원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표 2-2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대응 역량 및 인식제고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18. 2월
	18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계획 수립	'18. 3월
	18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사업 공고	'18. 3월
	전문가 상담·자문, 조정·중재, 인식개선 교육·홍보	'18. 1~3월
2/4분기	기술보호지원반(지방청 연계) 담당자 워크숍 및 활동 개시	'18. 4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업공고 및 서비스 개시	'18. 4~6월
	지식재산전략최고위과정(AIP) 운영	'18. 4~6월
	집중심리제 활성화 추진 법원 협의	'18. 5월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중소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18. 5~6월
	대기업·공공기관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생협약' 체결	'18. 6월
	초·중·고교 기술보호 전문자격 취득과정 개설·운영 개시	'18. 6월
	전문가 상담·자문, 조정·중재, 인식개선 교육·홍보	'18. 4~6월
3/4분기	입증책임, 징벌적손배, NDA의무화, 표준계약서 등 법개정 추진	'18. 7~9월
	중기 R&D 지원기업 대상 기술보호 교육 의무화 추진	'18. 7월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 및 기술보호 유공자 정부 포상	'18. 8월
	전문가 상담·자문, 조정·중재, 인식개선 교육·홍보	'18. 7~9월
4/4분기	18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추진	'18. 10월
	기술거래기록시스템 도입 및 시범운영	'18. 11월
	해외 기술보호 선진사례 벤치마킹	'18. 11월
	전문가 상담·자문, 조정·중재, 인식개선 교육·홍보	'18. 10~12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8).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p.80.

② 관리과제(II-4-②)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위주 R&D 지원

㉠ 주요 내용

- 성과 창출이 유망한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중소기업에 R&D 자금 중점 투자
- 4차 산업혁명 유망 중소기업형 전략 로드맵 등을 통해 발굴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유망 기술(사물인터넷 등)의 개발

㉡ 외부환경요인

- 미국·독일·일본·영국 등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新시장 선점과 자국 산업 육

성을 위한 강력한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

- 미국혁신전략, 독일 인더스트리 4.0, 영국 Industrial Strategy, 일본 신산업 구조 비전
-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민간의 투자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애로 해결 노력 필요
- 우리 중소기업은 투자불확실(55.5%), 전문인력 부족(51.3%), R&D자금 부족(47.8%) 등 전반적인 준비 수준이 미흡
- 중소벤처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실태조사('17.10.29, 중기중앙회)
-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센서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저조함. 2017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술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최고대비 기술수준은 5G(75%), 스마트가전(71.6%), 인공지능·빅데이터(54.6%), 스마트공장(55.3%), 지능형센서(59.7%) 등임
- 핵심 기술력 축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주도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및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성과 창출 유망기업에 중점 투자할 필요가 있음

㊤ 관리과제 추진계획

- 추진배경 (목적)
- 혁신형 기업의 기술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 기업에 비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 취약
  - \* (벤처기업) 세계 1위 기업 대비 기술수준 미흡한 기업 비중이 전체의 77.6% 차지 (이노비즈) 세계 최고수준의 76.8% 수준
-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등 분야의 경우 세계 1위 기업에 비해 기술수준 미흡
  - \* (벤처기업) 세계 1위 기업에 비해 기술수준 미흡한 기업이 80%를 넘는 수준 (소프트웨어 83.4%, 정보통신 82.1%)
  - (이노비즈) 전체 중소기업 평균 76.8% 보다 낮은 수준인 75.7%(ICT/SW)
- 기술혁신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및 신시장 창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선도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 집중 육성 필요
  - \* (매출액 증가율) ('14년) 30.7억원 → ('16년) 37.2억원
  - (산업재산권) 중소기업 평균 5건, 이노비즈 11건, 벤처 7.2건
  - (R&D인력·집약도) 중소기업 평균 0.9명 1.4%, 이노비즈 10.7명 4.3%, 벤처 4.6명 3.2%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사업목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분야 R&D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 촉진
- 주요내용
  - (혁신형기업기술개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C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新 시장과 주력산업 고도화 등 신성장동력 분야 R&D 지원

<표 2-21> 중소벤처기업부 핵심기술위주 R&D 지원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8.1월
	혁신형기업과제 1차 공고 및 신청접수	'18.2월
	혁신형기업과제 1차 온라인평가	'18.2월
	완료과제 최종평가	수시
2/4분기	혁신형기업과제 2차 공고 및 신청접수	'18.4월
	혁신형기업과제 1차 사업성심층평가	'18.4월
	혁신형기업과제 1차 협약	'18.5월
	혁신형기업과제 2차 온라인평가	'18.6월
	완료과제 최종평가	수시
3/4분기	혁신형기업과제 2차 사업성심층평가	'18.7월
	혁신형기업과제 3차 공고 및 신청접수	'18.7월
	혁신형기업과제 2차 협약	'18.8월
	혁신형기업과제 3차 온라인평가	'18.9월
	완료과제 최종평가	수시
4/4분기	혁신형기업과제 3차 사업성심층평가	'18.10월
	혁신형기업과제 3차 협약	'18.11월
	완료과제 최종평가	수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8).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pp.110-111.

□ 관리과제(IV-3-①)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등 성과공유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문화 확산<sup>2)</sup>(예: 성과공유제-지식재산권 공유)

㉗ 주요 내용

-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정배분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최종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 (성과공유제 활성화) 금년 중 성과공유제\* 도입기업(293개→) 317개, 확인과제(4,586건→) 5,735건으로 확대하여 건강한 경영문화 정착 유도
  - \*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사전에 합의를 통해 신제품 개발·판로개척·생산성 향상 등 원가절감을 위한 공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
  - \* 도입현황('17.12월말 기준누계) : 도입기업 293개, 확인과제 4,586건

㉘ 외부환경요인

- (갈등요인)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침해와 대중기간 격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위협
  - 그간 지속적인 경제민주화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확대\* 등 양극화가 심화
    -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임금(고용부, 대기업=100) : ('01) 70.9% → ('17.1~10) 63.4%
  - 그간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지원대상과 사업내용을 사전에 지정하는 등 기금운영이 폐쇄적 경향
  -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협력사에게만 개방
  - 민간이 자율합의로 적합업종의 합의를 도출하고 있으나, 영세 업종에 대한 적극적 보호장치로서 활용 미비
    - \* 민간주도로 자율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 때문에 대기업이 적합업종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부재
- (갈등관리 계획) 대·중기간 사업영역 침해, 성과공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관리를 위해 조정협의회 상시운영

---

2) 특허청의 관리과제와 유사성이 부족하여 번호를 붙이지는 않았음. 다만 중기부의 성과공유제에서 특허청의 관리과제(예: 지식재산권 공유)를 구상할 수 있음

- 적합업종 기간만료 일괄유예 대책반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방안 연구반 운영
-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전까지 갈등조정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공백 최소화
  - \* 중기부, 산업부, 동반위, 통상전문가, 적합업종 제도 전문가 등 민관합동
- 협력이익 공유제 모델개발 연구회 운영
- 협력이익공유 모델개발을 위한 의견수렴, 협력 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 전 사전협의 등을 통한 갈등소지 해소 등
  - \* 중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학계·법조계 전문가, 대기업 담당자 등
- 성과공유제 연구회 운영
- 참여 저조업종을 중심으로 성과공유 모델개발을 위한 의견수렴, 일자리 창출·근로여건 개선 성과공유 유형모델 개발
  - \* 총 5개 분과 (민간 3개 업종, 공공 2개 업종), 분과별 '기업현장형 연구회' 개최
  - \*\* 중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산·학·연 전문가, 대기업 담당자 등

④ 관리과제 추진계획

○ 추진배경

- 혁신적 동반성장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와 상생협력의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성과공유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협력이익공유제)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정히 배분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18.6~)
-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18.6)
- 협력이익공유제 추진체계 마련 및 확인검증 시스템 구축(18.9)
-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시행(18.12)

(성과공유제 내실화) 중소기업의 실질적 수익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금지급, 물량 확대 과제 중심으로 성과공유 내실화

- 성과공유 인정 유형을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10개 → 2개 유형)하고, 현금배분, 물량매출 확대 과제만 인정('17.12기준 4,586건 → 2,083건)
  - \* '물량매출 확대' 유형도 세금계산서, 구매실적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 \*\* 구체적인 실적 입증이 곤란하거나, 유사한 유형인 8개 유형은 인정 제외
- 단가반영, 시제품 구매보상, 기술료 배분, 판로확보, 거래기간연장, 지식 재산권 공유,

성과귀속, 가점·입찰 기회 부여

(개방형 상생협력기금 확대) 협력사 이외 미거래 기업까지 기금을 통한 지원 및 상생협력 강화(22년까지 60% 달성)

\* 내국법인(대기업·중견기업·공기업 등)이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 재단에 출연하는 재원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 184개 기업 10,856억원 협약 체결, 178개 기업 8,054억원 출연

(지원 프로그램 확대) 대기업 협력사 지원프로그램 플랫폼을 미거래 중소기업으로 개방하고, 타 대기업에도 공유·확산

\* 미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개방비율 확대('18년, 20% → '20년, 50%)

\*\* 상생협력 사례를 자발적으로 등록 및 개방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우수기업은 동반성장 지수평가 가점 부여(참여단계별 가점을 차등화, 0.2~1점/12점 가점기준)

<표 2-22>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2018년도 상생협력기금 워크숍 개최	'18. 3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 개최	'18. 3
2/4분기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 수립	'18. 5
	성과공유제 운영요령(고시) 개정	'18. 6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18. 6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	'18. 6
3/4분기	성과공유제 성과공유 방식 개편·시행	'18. 7
	지원 프로그램 개방 확대	'18. 9
	협력이익공유제 추진체계 마련 및 확인·검증 시스템 구축	'18. 9
4/4분기	2017년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18. 11
	동반성장 주간행사(동반성장 유공자 포상)	'18. 11
	우수 지원 프로그램 선정	'18. 12
	협력이익공유제 제도도입·운영	'18. 1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8).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p.188.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관리 시행계획<sup>3)</sup>

(1) 2018년도 정책 추진방향

- 2018년도 정책 추진방향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국가 R&D 시스템 혁신, 미래 유망기술 육성, 신산업 생태계 조성, 미래 사회 대비하는 삶의 질 제고 등이 있음. 각각의 5대 추진방향 아래에는 다시 3~6가지의 방향이 구분되어 있음

- 이러한 추진방향 중에서 국가 R&D 시스템 혁신-출연[연], 대학 등의 혁신 역량 제고, R&D 결과 공유 및 연구 성과 확산을 검토하였음

①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의 혁신 역량 제고

-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정부R&D 20조 등 변화하는 정책여건을 감안, 과학기술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출연(연)에 대한 고민 필요

- 우수한 아이디어와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를 보유한 대학이 개발한 기술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체계적 지원 필요

- 국민중심·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을 연구현장과 함께 수립('18.1)하고, 연구회와 출연(연)이 주도적으로 추진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R&R\*)을 확장하고, ‘해야 하는’ 연구에 집중하여 잘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국민 삶의 질 향상, 국방·에너지 등 국가차원 임무, 미래선도 기초·원천연구 등

\*\* 연구인력, 조직, 연구활동, 연구행정, 연구문화 등 전반, 자율성 기반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학의 혁신모델’ 개발·확산('18.上~)

- 과기특성화대 혁신방안('15.12)을 업그레이드하여 교육, 연구, 창업 분야별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일반대학으로 혁신모델 확산

\* 교육혁신(무학과제 확대, 전공 간 융합강화, 과기원 MOOC 플랫폼 통합 등), 특화 연구분야 발굴, 창업보육 강화(창업인프라 정비, 창업친화 학사행정제도 개편) 등

- 대학이 논문·특허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나노 분야 혁신기술 기반 ‘실험실 창업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pp.40-355에서 인용

‘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18.上~)

- 과기정통부·교육부·중기부 합동으로 ‘실험실 창업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신규 선정(’18년 5개)하고 부처별 역할에 따라 지원

\* 과기정통부(후속 R&D), 교육부(학사제도 개편, 창업장학금), 중기부(창업공간, 자금)

## ② R&D 결과 공유 및 연구 성과 확산

- 공공R&D의 양적 증가에 대비한 R&D성과창출 지원 강화 필요

\* 정부R&D 16조(’12)→ 19.1조(’16), 공공R&D 사업화 성공률 12.9%(’15)

- 중소·중견기업이 출연(연) 등의 연구성과,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기술해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강화

\*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노하우를 활용·현장자문 제공(’17년 100명 →’18년 150명)

- 국가 R&D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구 데이터를 모아 빅데이터화·지식자산화하는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구축 추진

- 바이오·미래소재·대형연구장비·인공지능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우선추진(’17년~, 계속) 하고 제도 확산을 위한 법제정비\* 추진(’18.1~)

\* 연구데이터 정의, 데이터관리계획 제도화, 연구자 권리 보장 등 위한 공동관리규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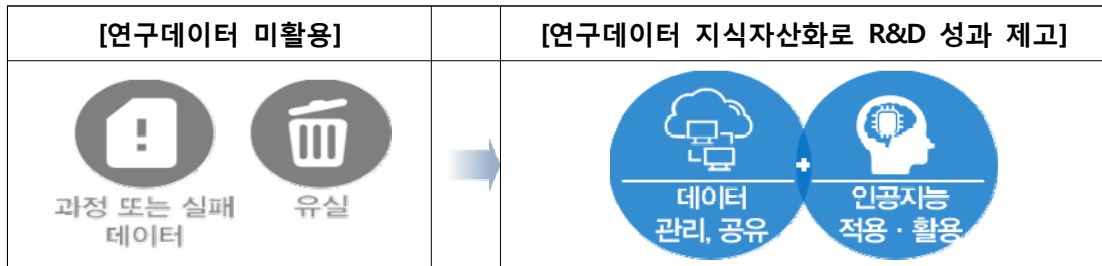
- 과기특성화대 및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적극 발굴하여 공동기술지주 등을 통하여 우수 기술발굴, 시장성 분석, 자금지원 등 기술사업화 지원

- 우수성과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공공기술지주 자회사 설립 확대(’17년 23개 → ’18년 27개) 및 신규고용 창출(’17년 132명 → ’18년 162명)

- 과학벨트 기초연구 성과의 ‘과학사업화 전주기’ 지원(12억원, ’18.下), 방사광 가속기\* 등 그간 투자한 과학기술 인프라의 전략적 활용 확대

\* 4세대가속기 이용자 빔제공 확대(’17년 120일→’18년 140일), 신약개발 전용 빔라인 조성 착수(’18.1), 신규 빔라인 2기 증설(~’19년) 등

- 데이터 기반의 R&D 패러다임 전환, 융합·공동연구 확산을 통해 새로운 발견과 효율적 연구 수행



자료: 과기정통부 (2018),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p.63.

## (2)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특성

### ① 정책 여건

- ㉔ 4차 산업혁명 도래와 국민소득 3만불 원년을 맞아 경제·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ICT 정책으로 근본적 전환 요구

\* 최근 10년간 GDP가 28.6% 증가할 때 삶의 질 지수는 11.8%만 증가(통계청, '17)

- 세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을 국가현안 해소 및 新성장동력 발굴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경제·사회 분야 기술혁신을 지속 강화

(美) AI R&D 전략계획('16) / (日) 신산업 구조 비전('17) / (獨) 디지털전략 2025('16)

- 우리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4차 산업혁명위 출범('17.10),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수립('17.11) 등 본격적인 혁신성장 추진 기반을 마련

- ㉕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지능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 분야의 기반기술이 융합되어 촉발되는 기술·산업·사회 전반의 변화

-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新산업 창출과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사람중심 경제' 실현 가능

\* 5G, IoT 전용망 구축, 빅데이터 육성, 인공지능 등 지능화 원천기술 확보

- ㉖ 또한, 복지·고용 분야 수요 증대, 국방예산 확대 등으로 정부R&D 예산은 큰 폭으로 확대가 어려운 상황

- \* 정부 R&D예산 증가율(%) : ('11)8.7 → ('13)7.0 → ('15)6.3 → ('17)1.8 → ('18)1.1
- \* '18년 분야별 예산 증가율(%) : (보건·복지·고용) 11.7 (국방) 7.0 (공공질서·안전) 5.1
- 양적 투자 확대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R&D 구조조정 및 투자 효율화, 주기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성과 극대화 필요

## ② 정책 고객별 여건

- ㉔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신기술·신산업 창출, 일자리 변화 대응, 삶의 질 제고 등 과학 기술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대
  - (연구계)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자 중심의 도전적·창의적 기초연구 지원 확대, 생애 지속적인 연구 지원체제 구축
    -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청원(호원경 외 493명, '16.10) 등
  - (산업계) 혁신성장을 위한 신기술 규제혁신 및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 등 최근 급격히 위축된 민간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
    - \* 기업 R&D 투자 증가율 : ('11) 16.4% → ('13) 7.7% → ('15) 2.6% → ('16) 5.5%
  - (지역) 지방자치 분권화 촉진과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 자생적 R&D 혁신역량 강화, 지역별 R&D 거점 육성
    - \*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67.3%가 수도권에 집중('15년 기준, KISTEP)
  - (미래세대) 급격한 산업구조·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 연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정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
    - \*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점차 사라지고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자리(드론조종사, 인공장기 제조 전문가 등)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
  - (일반국민) 건강·환경·안전·생활편의·재난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기대
    - \* 과학기술의 미래모습 전문가 조사('17.5) 및 국민제안('17.8~) 분석을 통한 정책수요 주체별 핵심키워드 분석 결과

- ③ 과기정통부의 2018년도 임무는 “지속적인 R&D 혁신과 ICT 신산업 창출을 통해 융합과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 미래사회 대비 국가 전략수립과 인력양성을 선도한다”이며, 비전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신산업·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임 이러한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를 '18년 시행계획의 성과목표,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에 반영함
- ④ 2018년도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수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8개, 관리과제 75개 임. 아래 그림은 과기정통부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p.44)에 제시된 목표체계임

<그림 2-2> 과기정통부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체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p.44.

(3) 특허청과 유사한 관리과제

- 지식재산 활용의 관점에서 특허청과 유사한 관리과제를 탐색하였음. 아래에서는 과기정통부 성과목표 I-3(과학기술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연구성과 활용 기술이전·창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산·학·연 개방형 협력생태계 구현) 중에서 관리과제(①) “연구성과 창업·사업화 촉진으로 실험실 일자리 창출”, 관리과제(②)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통한 연구산업 활성화”, 성과목표 IV-3(국가연구개발 관리·평가·공유 체계 마련으로 R&D 성과창출 촉진) 중에서 관리과제(④) “과학기술과 국가R&D 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 및 정보 개방성 확대” 등을 각각 논의하였음

① 관리과제(I-3-①) 연구성과 창업·사업화 촉진으로 실험실 일자리 창출

㉓ 주요 내용

- 기초·원천 R&D 투자를 통해 축적된 과학기술 기반 창업(실험실 창업) 및 기술이전을 활성화 하여 ‘실험실 일자리’ 창출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지원, 기술수요 발굴 및 공공연구성과와의 매칭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활성화

㉔ 외부환경요인

-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은 기술, 자금 등 투입요건 외에 기술 외 비즈니스 영역의 인력, 시장상황, 사회적 분위기 등 외부 요인에도 크게 영향
  - 사전예측이 어려운 국내외 경제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정책여건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정책수립·추진 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며, 유관부처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
    - ⇒ 정책수립시 가능한 많은 요인을 고려하고,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고, 적시에 대응
    - ⇒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등의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출연(연), 대학, 민간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진행
  -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각자의 역할과 협력방식에 대한 시각 차이가 아직 상존
    - ⇒ 공공(대학, 출연(연) 등)과 민간(기업)의 시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방안을 강구하고, 최적의 역할 정립 및 협력방안 마련

㉔ 관리과제 추진계획

○ 추진배경 (목적)

- 실험실 창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 집약형 창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창업에 비하여 고용창출 및 생존률이 우수
- 그동안 학부 중심으로 창업 마인드제고, BM 개발 등 아이디어 창업에 대한 지원에 주력하여 실험실 창업기반 조성 미흡
  - \* 대학·출연(연)이 논문·특허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 기반 창업(Lab to Market)
  - \* 실험실 창업 기업은 일반창업(평균 2.85명)에 비하여 3배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으며 (창업진흥원/’12년), 5년생존률(80%이상) 우수(일반창업 27%) (국회입법조사처/’17년)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지원, 기술수요 발굴 및 공공연구성과와의 매칭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활성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실험실 일자리 창출) 기초·원천 R&D 투자를 통해 축적된 과학기술 기반 창업(실험실 창업) 및 기술이전을 활성화 하여 ‘실험실 일자리’ 창출

- (창업지원) 신산업(바이오·나노 등) 기반 창업을 위하여 대학·출연(연) 우수 창업팀 발굴 및 시장탐색·시제품제작 등 지원
  - \* 대학·출연(연) 연구원대상 실험실창업교육 및 창업활동 지원(60팀 내외), 실험실 창업 대표선수대학 선정(5개 내외)
- (기업성장지원) 바이오·나노 등 분야 초기 실험실 창업기업 대상 R&D 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제품화 기술력 제고
- (출자회사 설립) 공동기술지주회사\* 운영을 통한 과기특성화대, 출연(연) 연구성과 기술 이전 및 창업기업 투자, 자회사 성장지원
  - \* 미래과학기술지주 : KAIST 등 4개 과기특성화대 출자(150억원), 29개 출자회사 설립(’17년말)한국과학기술지주 : 원자력(연) 등 17개 출연연 출자(530억원), 41개 출자회사 설립(’17년말)

(현장중심의 기술사업화)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SOS1379), 현장으로 찾아가는 수요발굴지원단 운영을 통해 기업수요와 공공기술 매칭

-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연(연), 특성화대 등 범부처 산하 전문기관의 지원역량을 통합하여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지원
  - \* 고경력과학기술인 현장지원(’18년 500건) 및 수요발굴지원단 연계지원 확대 추진

- 민간 중심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수요발굴지원단을 운영  
(22개 내외), 공공기술 사업화가 가능한 유망기업을 발굴·지원

\* (주관) 기술거래기관, 특허법인,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화전문회사 등 민간기관,  
(참여) 출연(연), 전문(연), 대학(산학협력단), 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

<표 2-23> 과기정통부 연구성과 창업·사업화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 및 모니터링	'18.1~12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18.2월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 사업 시행계획 수립	'18.2월
	실험실 창업기업 투자데모데이 개최	'18.3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8.3월
2/4분기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공모	'18.3~4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공모	'18.3~4월
	공공연구성과 확산 및 실용화 사업 수요기업 공모	'18.4월
	공공연구성과 확산 및 실용화 사업 수요기업 선정 및 투자	'18.5~12월
	수요발굴지원단 구성 및 운영	'18.5월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워크숍 개최	'18.6월
3/4분기	실험실 창업기업 투자데모데이 개최	'18.7월
	수요발굴지원단 중간점검	'18.8월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 사업 현장점검	'18.9월
4/4분기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포럼 개최	'18.12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p.107.

② 관리과제(I-3-②)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통한 연구산업 활성화

㉓ 주요 내용

- R&D 연동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인 「연구산업」으로 묶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 활동을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분업화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 \*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 수립·발표('17.12월)

- 연구산업 분야별(연구개발서비스, 연구장비 등) 시장창출→ 기업역량 강화 → 기반조성을 패키징화하여 성과 창출

㉔ 관리과제 추진계획

○ 추진배경

- R&D 연동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인 「연구산업」으로 묶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 활동을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분업화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 \*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 수립·발표('17.12월)

- 연구산업 분야별(연구개발서비스, 연구장비 등) 시장창출→ 기업역량 강화 → 기반조성을 패키징화하여 성과 창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 연구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역량 강화

- R&D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10대 연구관리 서비스 분야 집중 지원
- 주문연구기업(시험·분석 분야) 1인 기업 창업 및 디자인분야 연구관리 기업 진입요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으로 창업 촉진 추진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 연구자와 주문연구·연구관리 기업의 매칭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연구산업 시장 설명회 개최

(연구장비 국산화 기반 구축) 핵심 연구장비 운용인력 확보, 연구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우수 장비기술과 연계한 기술이전·창업 지원

- 연구현장 맞춤형 연구장비 운영관리, 유지보수, 분석기술 개발 분야 전문 엔지니어 양

성 및 국산 연구장비 공동 활용 랩 운영

(공공연구성과 활용·확산) 산학연 협력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연구성과의 발굴·이전·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

- 바이오, 나노 등 고부가가치 창출 연구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대학기술이전 지원) 대학 기술경영조직(TMC\*) 역량 확충 및 대학 R&D 사업화 과정의 분업화·전문화를 통한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

\* TMC(Technology Management Center) TLO↔기술지주회사 연계 가상조직

- TMC 역량 컨설팅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마케팅, 금융교육 등) 연계·제공으로 내실 있는 사업관리 강화

- 기술사업화 협력기관\*과의 교류 확대 및 대학 기술지주 자회사 설립(창업)·성장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여

\* 중진공, 산단공, 벤처기업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표 2-24> 과기정통부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통한 연구산업 활성화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18. 1~2월
	대학기술경영 촉진사업 시행계획 수립	'18. 1~2월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 및 장비 집적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18. 1~2월
	산학연공동연구법인 현장 방문	'18. 3월
2/4분기	주문연구·연구관리 시장 설명회	'18. 4월
	2018년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 개최	'18. 5월
	산·학·연 협력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18. 6월
3/4분기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중대형복합기술사업화) 과제선정	'18. 7월
	연구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18. 8월
	연구장비 공동 활용 랩 개소	'18. 9월
4/4분기	연구개발 신서비스 발굴 대학(원)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18. 10월
	연구산업 컨퍼런스 2019 개최	'18. 11월
	기술이전 설명회·상담회	'18. 12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p.111-112.

③ 관리과제(IV-3-④) 과학기술과 국가R&D 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 및 정보 개방성 확대

㉓ 주요 내용

-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수준평가, 미래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 R&D 통계·조사분석 등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수립 및 국가R&D 기획에 활용
- 17개 부처·청의 20개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대한 「범부처 연구과제관리시스템 표준화 및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자 친화적 연구행정 실현,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제고, R&D 종합조정 지원 강화
- 정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와 과학기술 지식·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국가R&D 투자 효율성 및 연구생산성 제고

㉔ 외부환경요인

- 외부환경요인
  - R&D 투자 증가에 따른 성과창출 향상, 연구성과를 활용한 R&D혁신, 창의·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평가 및 연구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공유확대 등 대내외 요구 증대
  - 1부처 1기관 원칙 연구관리전문기관 기능효율화 추진에 따른 전문기관 운영 관련 정책 환경 변화 예상
  - R&D예타 이관(기재부→과기부) 운영 및 제도개선 추진에 따른 정책 및 사업운영 환경 변화 예상
- 갈등관리 계획
  - 성과 평가·관리 및 연구제도는 과학기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급격한 정책 변화시 연구현장의 혼란 가능성 존재
    - R&D성과정보 확대 및 미래기술 예측 등을 통해 정책 수립에 있어서 신뢰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자 및 전문가 그룹,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연구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추진
  - 연구관리전문기관 기능효율화 대상 부처, 전문기관,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견수렴·정책소통 실시, 대응방안 마련·시행
- R&D예타 제도개선 사항 적극 홍보를 통한 현장 착근 추진, 변경되는 제도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일정관리 철저, 기타 예산관련 부처(기재부 및 과기부 투자국)와의 긴밀하게 협조

④ 관리과제 추진계획

○ 추진배경 (목적)

-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학기술 정보의 체계적 생산과 개방·공유를 통한 R&D 기획 및 연구 협업 강화
- 17개 부처·청의 20개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및 단일 서비스 구축을 통해 연구자 친화적 연구행정 실현,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제고, R&D 종합조정 지원 강화
- 국가R&D 정보의 개방성 및 연계성을 확대하여 활용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과학기술 정책수립 및 국가R&D 기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평가, R&D 통계·조사분석 실시
  -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과학기술기본법』(제14조)에 근거하여 미래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120개 중점과학기술에 대하여 주요국의 기술수준을 평가
  - (R&D 통계·조사분석)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 및 연구개발활동조사(국가지정통계), 기술무역통계(국가지정통계) 실시
- ※ 연구개발활동조사와 기술무역통계는 매년 OECD에 결과 제출
- 개별 구축 운영 중인 17개 부처·청의 20개 과제관리시스템에 대한 「범부처 연구과제관리시스템 표준화 및 구축 방안」 마련
- 정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와 과학기술 지식·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국가R&D 투자 효율성 및 연구생산성 제고
  - 과학기술 지식·콘텐츠 및 정보 개방 확대('17년 70%→'18년 75%) 및 국가R&D 정보·성과물 품질관리 강화
  - 국가 R&D 전주기 정보(사업계획→사업타당성→사업예산→예산집행→평가) 연계 및 활용 강화
  - 이용자 관점에서 쉽고 편리하게 NTIS 서비스 개편

<표 2-25> 과기정통부 R&D 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 및 개방성 확대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2018년도 기술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18.2월
	2018년도 NTIS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	'18.2월
	연구과제관리시스템 표준화에 대한 연구자 현황 조사	'18.2월
	2018년도 기술수준평가 추진계획 수립	'18.3월
	이용자 중심의 NTIS 서비스 개편	'18.3월
2/4분기	2018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	'18.4월
	연구과제관리시스템 표준화를 위한 연구관리전문기관 방문 조사	'18.4월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 결과 보고	'18.6월
	NTIS 이용자 간담회 개최	'18.6월
3/4분기	2018년 기술영향평가 위원회 및 시민포럼 구성 및 운영	'18.7월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 고시 개정 추진	'18.9월
4/4분기	범부처 연구과제관리시스템 표준화 방안 마련	'18.10월
	2017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 마련	'18.11월
	NTIS 정보활용경진대회	'18.12월
	NTIS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18.12월
	2017년도 기술무역통계 결과 마련	'18.12월
	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마련	'18.12월
	2018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마련	'18.12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p.371.

### 3)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관리 시행계획<sup>4)</sup>

#### (1) 2018년도 정책 추진방향

○ 2018년도 정책 추진방향은 산업정책분야, 산업혁신성장분야, 에너지·자원분야, 통상정책 및 협력분야, 신통상질서전략분야, 무역·외국인 투자 분야, 기술표준분야 등 크게 8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각각의 추진방향 아래에는 다시 3~7개의 방향이 구분되어 있음

○ 이러한 추진방향 중에서 산업정책분야, 산업혁신성장분야, 무역·외국인투자분야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였음

#### ① 산업정책분야 중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새로운 융합 서비스 또는 제품의 시장 출시 및 확산을 지원·촉진함으로써 차세대 먹거리 지속 발굴 및 미래 신산업 육성

4) 산업통상자원부 (2018).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pp.19-350에서 인용

- 새로운 융합 서비스·제품이 규제없이 시장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
  - \* 대통령,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 천명(4차산업혁명위 출범식, 규제혁신 대토론회)
  
- 산업기술 R&D를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업 육성 지원
  - 국가차원에서 확보가 필요한 기술 발굴 등 R&D 기획의 전략성을 제고하고,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환경을 개선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R&D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선진 기술국가로 발전
  - 공공과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한 거래를 통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방형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 촉진
  
- ② 산업혁신성장분야 중 '새 정부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중견기업 비전 2280』) 마련 및 후속조치 추진으로 중견기업을 혁신성장의 주체로 육성
  - 혁신형 중견기업 중심 수출도약 중견기업 선정, 월드클래스 300 (1단계 30여개 선정, 2단계 예타 완료) 등 맞춤형 수출·R&D 지원
  
  - 지역거점 중견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해 청년인재 채용 활성화
  
  - '중소→중견→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령을 개선하고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사업간 연계 강화
    - \* 관계부처 합동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등
  
- ③ 무역·외국인투자분야 중 수출구조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신 남방·신 북방시장 진출 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정부, 지원기관, 기업의 모든 수출역량을 결집
    - ASEAN·인도 등 전략시장에 대해 해외마케팅 및 무역금융 지원 확대
      - \* 수출바우처: ('17) 산업부·중기부(1,786억원) → ('18) 농림부·해수부·특허청 확대(1,900억원)
    - 신산업 창출로 수출주력품목을 고도화하고, 유망 소비재·서비스 수출 확대를 통해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 다변화

\* (5대 신산업) 전기·자율주행차, IoT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해 수출이 고용확대와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
  - '22년까지 내수기업 2.5만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수출성장 디딤돌을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
- \* 전문 인력·수출자금 부족 등 중소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애로 발굴 및 해소
  -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무역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수출지원체계를 개편

## (2)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특성

- ① 2018년은 산업구조 혁신 및 에너지신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 통상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고부가가치 경쟁력 제고
  -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및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고효율 사회 실현
  - 신남방·신북방정책으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주요국 통상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에 유리한 여건 조성
- ② 2018년도의 정책여건과 방향 하에서 임무와 비전 달성을 위해 8대 전략목표와 24개 성과목표, 78개 관리과제를 추진
  - 산업구조 혁신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
    -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기술 R&D와 새로운 융합 서비스·제품의 시장 출시 및 확산을 지원 등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튼튼한 산업기반을 마련한
    - 「중견기업 비전 2280」 마련 및 후속조치 추진으로 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허리 보강 등

<그림 2-3>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체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8).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p.42.

### (3) 특허청과 유사한 관리과제

- 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 등의 관점에서 특허청과 유사한 관리과제를 탐색하였음. 아래에서는 성과목표 II-3(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중에서 관리과제(②) 중견기업 R&D 지원기반 확충, 성과목표 VII-1(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로 수출 저변 확대) 중에서 관리과제(①)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성과목표 VII-4(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규제제도 운영으로 국내기업 피해 구제) 중에서 관리과제(③)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기능 강화 등을 각각 논의하였음

#### ① 관리과제(II-3-②) 중견기업 R&D 지원기반 확충

##### ㉓ 추진배경

- 중견기업군은 타 기업군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중소기업 대비하여 높은 임금과 장기재직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 중견기업 평균 고용인원은 중소기업의 80배 : (중견기업) 324명 vs (중소기업) 4명
  - 대졸초임 3천만원 이상 기업 비중(% , '13) : (중견기업) 47% vs (중소기업) 2%
  - 5년 이상 재직자 비중('15) : (중견기업) 45.3% vs (중소기업) 27.0%

-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중견기업의 성장은 매우 중요하지만, 성장의 바탕이 되는 R&D 대한 투자는 낮은 수준

\* '14년 중견기업 R&D 투자액(5조원)은 대기업의 1/5, 중소기업의 1/2 수준

\* '14년 기준 중견기업의 71%가 기업부설연구소 未보유(중견기업실태조사)

- 이는 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는 상황

\* '15년 기준 중견기업의 56%가 수출 실적 없으며(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수출액은 대기업의 1/3로 중소기업보다 저조

- 따라서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이 필요함

##### ㉔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중견기업 R&D 혁신역량 제고

- (WC 300 R&D)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 R&D 지원 프로세스 개선

- (R&D 컨설팅 강화) R&D 전 주기에 IP전략을 지원하여, R&D 과제 수행기업의 원

- 천·핵심특허 창출 및 글로벌 성장 동력 강화
- (R&D 전주기 IP 전략지원체계)
  - R&D 기획단계: IP 전략수립: 해외 경쟁사 특허분석, R&D 방향 설정 등
  - R&D 수행단계: IP 권리화: 기획단계 IP전략 업그레이드, 전략적 해외 IP 확보
  - R&D 완료단계: IP 활용: 응용특허 개발/고도화, IP 포트폴리오 구축
- (해외 마케팅 전략수립 지원) '17년 신규과제를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수립 지원 → '18년 신규 및 계속과제 수행기업\*으로 확대
  - \* ('18년) 계속과제 진도 점검 시 글로벌 사업화 전략이 미흡한 기업 대상
- (R&D 성과물의 글로벌 사업화 지원) R&D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특허, 제품을 세계 최대 기술이전 네트워크인 EEN (Enterprise Europe Network)에 연계
  - \* EEN 50개국, 600여개 파트너기관과 협업을 위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및 국내외 기술중개행사 참가 지원(EEN-KOREA 활용)
- (R&D 신규 추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R&D, 해외마케팅 등 집중 지원
  - (MIP100 추진) R&D 책임성이 강화된 중견기업 '성과지향 R&D' 사업 신규 추진으로 非 제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② R&D 인력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 (채용박람회 확대) 우수 중견기업에게 R&D 인력확보를 위한 채용의 장을 제공하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WC300성과 홍보강화) 당초 목표인 WC선정기업 300개 지정을 계기로 기업,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퍼런스·수여식 개최('18.5)
    - 월드클래스 300 기업의 기술혁신 사례,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우수 혁신성장 사례\* 발표 및 사례 공유\*의 장 마련
  - (중견기업 우수인재 유치양성) 우수 인재유입 인프라 구축 및 핵심인재 육성 등을 통한 기업의 지속성장 토대마련
    - (인재유입 인프라구축) 중견기업 바로알기 특강 등 인식개선 활동 및 지역별 채용로드쇼를 통해 우수인재 유입 촉진
      - \* 중견기업 바로알기 특강, 인식개선 공모전, 취업정보코너 시범구축 등
    -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R&D 및 수출교육 등 전문교육 지원

하여 핵심인재 육성

- \* 7개 과정 : 수출실무(실무자), R&D실무(실무자), 미래리더 양성과정(임원급 대상)  
(‘18년 신설과정) 해외수주, 지식재산권, 신입사원 입문과정, HR실무

③ R&D 연계형 해외마케팅 전략수립 지원

-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R&D결과물을 수출까지 연계시키기 위해 중견기업 100여개社를 선정, 글로벌 수출중견기업으로 육성·지원
  - 수출전문위원\* 채용(4명), 해외 전담인력 운영(15개社당 1명, 19개 무역관) 등을 통해 마케팅전략 수립 1:1 지원
- (세계일류상품육성)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을 확대하여 시장 다변화 및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
  - \* ‘17년 869개사 → ‘18년 900개사 (‘22년까지 1,100개사 목표)

<표 2-26> 산업부 중견기업 R&D 지원기반 확충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18년 WC 300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18.1월
	○ WC 300 권역별 사업설명회(5개 권역)	’18.1월
	○ WC 300 R&D 계속과제 진도점검	’18.1월
	○ WC 300 R&D 신청서 접수	’18.2월
	○ 수출도약 중견기업 80개 사 상반기 신규 선정 완료	’18.3월
	○ MIP100 예타 기획	’18.3월
2/4분기	○ WC 300 신규기업 선정평가 및 최종발표 ① 요건검토 ② 분야평가 ③ 현장확인·현장검증 ④ 종합평가	’18.3~4월
	○ WC 300 프로젝트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	’18.4~5월
	○ WC 300 컨퍼런스 및 신규기업 선정서 수여식 개최	’18.5월
	○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 개최	’18.5월
	○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 개최	’18.4월
	○ ‘18년 WC R&D 신규과제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	’18.5~6월
	○ WC 300 R&D 계속과제 진도점검	’18.6월
	○ 중견기업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 개최	’18.5월
3/4분기	○ WC 300 R&D 수행기관 교육 실시(상반기)	’18.6월
	○ ‘18년 WC 300 R&D 신규과제 지원	’18.7월
	○ WC 300 R&D 계속과제 진도점검	’18.8월
	○ 히든챔피언 탐방프로그램 운영	’18.7~8월
4/4분기	○ 세계일류상품 선정 공고	’18.8월
	○ WC 300 R&D 종료과제 현장실태조사 및 최종평가	’18.10월
	○ 2018년 Leading Korea, Job Festival 개최	’18.11월
	○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인증서 수여	’18.11월
	○ WC 300 R&D 수행기관 교육 실시(하반기)	’18.12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8).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p.161.

② 관리과제(VII-1-①)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㉗ 추진배경 (목적)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 수출생태계 조성

㉘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수출바우처 제도 확대 및 해외마케팅 사업 개선

- 수출준비~해외진출까지 전 과정을 망라한 지원 메뉴판을 구성하고, 참여기업이 바우처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기관을 선택·이용

\* '17년말 기준 6,214개사 수출기업 참여 / 2,500여개 서비스 메뉴 구축

- (제도확산) 농림부·해수부·특허청 등 수출지원사업 수행부처를 대상으로 수출바우처 대상사업 확대 추진('18년)

\* ('17) 2개 부처(산업부, 중기부) 1,786억원 → ('18) 5개 부처(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1,900억원

- 우수전시회 참가 확대 및 참가기업 선정 기준 보완 등 성과관리 강화

- (해외전시회) 해외 전시회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전시회'를 중심으로 한국관을 구성 (120회)하고, 국내 전시산업 글로벌화 지원\*

\* 서울국제식품대전 개최, 유관기관 개최 국내 전시회 바이어 유치 지원(1,600개사)

② 수출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 일자리 창출 기업이 수출을 통해 성장하고, 수출성장이 다시 고용으로 선순환 되도록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수출지원 체계 개편

- (수출바우처) 고용 증가율을 참여기업 평가지표에 반영(최대 10점)하여 고용 친화적 성장기업 중심의 지원사업으로 개편

- (지사화)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은 선정평가지 최대가점(5점)을 부여하고 참여 가능지역도 12개 지역으로 확대 (기존 8개)

- (해외전시회) 일자리 창출을 최고 점수의 평가항목으로 신설(20점)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핵심 지원대상으로 개편

\* (신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만점) 또는 고용영향 평가 반영 (20점 만점)

③ 5대 유망소비재\*를 새로운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하고

선도기업을 육성(50개사)

\*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물,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 한류 유망 시장 대상 소비재 관측은 물론, 아트콜라보 등 문화·산업 융합상품을 활용한 한류 브랜드 확산

\* 중국, 동남아 등 한류진출 유망국가 대상 한류상품박람회 추진 (2회)

○ 해외 바이어, 국내 소비재기업 등이 대규모 참여하는 초대형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 개최(6월, 한국)

○ 중국의 시장회복 및 선진국 중심 시장기회를 활용한 화장품, 패션, 식품, 생활·유아 프리미엄 소비재 시장 확대

<표 2-27>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18.1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	'18.2월
	러시아 조선기자재 시장진출 상담회	'18.3월
	한류콘텐츠 간접광고 상담회	'18.3월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	'18.3월
2/4분기	ASIA-EU Cartoon Connection 2018	'18.4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18.5월
	글로벌 일자리 대전	'18.5월
	소비재 수출대전	'18.6월
	아시아 부품소재 수출상담회	'18.6월
3/4분기	미국 플로리다 의료기기 전시회	'18.7월
	베트남 호치민 기계 전시회	'18.7월
	홍콩 9월 주얼리 & 썬패어 전시회	'18.9월
	수출첫걸음 종합대전	'18.9월
4/4분기	글로벌 모바일 비전(Global Mobile Vision)	'18.10월
	글로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플라자	'18.10월
	글로벌 부품소재 수출상담회 (GP Korea)	'18.11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8).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p.323.

③ 관리과제(VII-4-③)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기능 강화

㉔ 추진배경 (목적)

- 국내기업의 지재권 역량 확대 추세\* 및 침해 빈발국인 중국과의 교역규모\*\*를 고려하면 특허권·상표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증가 예상

\* 韓 지재권 수출액(억불): ('15년) 100.3 → ('16년) 108.9 → ('17년) 120.7

\*\* 對중국 교역규모(억불): ('15년, 1위) 2,274 → ('16년, 1위) 2,114 → ('17년, 1위) 2,400

-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효과적 구제를 위해 조사기능 강화 필요

㉕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피해기업의 무역구제 기회 확대 및 신속·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법령개정 및 조사체계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사제도 정비

-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17.11월), 산중위 법안 상정('18.2월) 및 법안 소위('18.5월 예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기간 단축(현행 6개월→100일 이내) 방안 마련
-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방안 등 연구용역 추진('18년 하반기)

-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조사관의 지재권 역량강화\*\*를 통한 조사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 통관단계의 지재권침해혐의물품 및 원산지표시위반물품에 대한 조사 연계(관세청), 불공정무역행위 빈발 분야 감시·적발 및 무역위 연계 조사 발굴(신고센터)

\*\* 외부 전문교육 프로그램 참여(연중), 특허청 심사관 파견 확대(1명→2명)

- 기업 대상 제도설명회, 불공정무역행위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홍보 강화 및 조사제도 활성화

\* 신고센터·회원사 대상 제도설명회(3~9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4~5월), 전국 본부 세관 대상 조사제도 설명회(4~8월), 불공정무역행위 심포지엄(11월)

<표 2-28> 산업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기능 강화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전문가 간담회	'18.2~3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Kick-off 회의 개최	'18.3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추가지정	'18.3월
2/4분기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조사제도 설명회)	'18.4~5월
	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18.5월
3/4분기	전국 본부세관(5개소) 대상 조사제도 설명회	'18.4~8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회원사 대상 제도설명회 개최	'18.3~9월
4/4분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18.11월
	불공정무역조사 법령 개정	연중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상담	연중
	조사관 역량강화 교육	연중
	유관기관 협력	연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8).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p.350.

## 제3장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제안을 위한 실증조사

### 제1절 조사 설계

#### 1.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조사는 특허청의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의 목적은 특허청 관련 주요 지식재산 계획들에 제시된 핵심방향 및 세부과제 등을 바탕으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특허청 성과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 2) 조사대상

- 특허법, 정부업무평가, 성과평가 등에 대한 학술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을 조사하여 이를 작성한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기술함

##### 3) 표본 설계

- 전문가 조사는 한국학술정보, DBPIA(누리미디어), 교보문고/스콜라 등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학술논문 및 보고서 등을 작성한 전문가를 탐색하였고, 이들 중에서 당해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별함

##### 4) 자료수집방법

- 전문가조사는 조사대상자 상호간에는 익명을 유지하면서, 연구책임자가 조사목적과 질문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후 회신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함

<표 3-1> 조사 설계 및 전문가조사 실시 개요

구분	전문가조사
조사대상	특허, 특허법, 정부업무평가 등 전문가
표본추출방법	목적표본추출 전문적 의견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선별
자료수집방법	이메일 자료수집
주요 조사내용	특허청 중장기 및 단기 추진과제의 우선순위(1순위~5순위)
조사일시	2018년 8월 27일 ~ 9월 9일
표본크기 및 응답률	n=41 (전체 66명의 62.1%)
분석방법	빈도분석 및 질적 분석

## 제2절 전문가조사 결과

### 1. 전문가조사 실시 개요

#### 1) 조사시기와 조사대상

- 특허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는 2018년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2주간 수행되었음
- 조사대상으로는 부산대, 성균관대, 고려대, 충북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등 특허법 전문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허 또는 정부업무평가 전문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단국대, 광운대, 부경대, 금오공대, 가천대, 수원대, 목원대, 서원대 등의 기술경영, 산업경영공학, 공공정책평가의 교수, 충남대, 경북대 등의 공학 분야의 특허 출원 경험이 풍부한 교수, 대학에서 특허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허 및 정부업무평가 분야의 전문가임. 표본으로 선택된 66명 중에서 41명이 조사에 응답하여 응답률은 62.1%임

#### 2) 조사 절차

- 연구진회의에서 질문항목 및 문항구성을 결정하였음. 연구목적에서 논의한 바대로 국가 지식재산기본계획,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등을 준거자료로 하여 질문항목을 구성하였음
- 위의 세 가지 준거자료에는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업무가 혼재하기 때문에 각 준거자료의 핵심과제와 세부과제 및 하위 세세부과제까지 검토하여 특허청의 소관업무와 연관된 것을 선별하였음
- 연구진회의에서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중장기 과제 및 단기 과제를 제안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준거자료에서 선별된 과제를 중심으로 특허청의 중장기 추진과제 및 단기 과제의 우선순위(1~5순위)를 질문하였음
- 특허 또는 정부업무평가 전문가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음. 국내 전문학술정보를 제공하

는 대표적 데이터베이스인 DBPIA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교보문고 스콜라 등에서 특허법, 정부업무평가 등과 같은 주제로 검색되는 학술논문이나 보고서를 탐독함. 이들 각각의 연구에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이면서 전자우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저자를 우선 선정하였음. 이외에도 공학 분야 중에서 특허 출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교수,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특허출원 등 특허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 등을 포함하였음.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66명을 선정함

- 연구진의 참여연구원은 전문가를 탐색, 이메일 주소를 확인·정리하고 연구책임자는 이메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질문이 담긴 메일을 발송함. 메일 발송 후 1주의 기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경우에 다시 이메일로 조사 참여를 독려하여 9월 11에 최종 41인의 전문가 자료가 수집됨

<표 3-2> 전문가(표본) 선정 및 응답률

전문가(표본) 선정	선정자 66명	응답자 41명	응답률 62.1%
특허 또는 특허청 등에 관한 전문가 (연구논문에서 선정한 연구자: 경영, 산업공학, 연구원 등)	16	10	62.5
특허법 관련 전문가(연구논문에서 선정한 연구자)	14	6	42.9
한국행정연구원의 국정평가연구실 전문가(평가담당)	11	5	45.5
한국행정학회 회원으로 특허(청) 관련 논문 발표 등의 전문가	13	11	84.6
공학 분야 교수 중 특허출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6	3	50.0
특허 출원 또는 특허관련 대학행정전문가(산학협력단 소속)	6	6	100.0

## 2. 전문가조사 분석 결과

### 1)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선별한 과제

#### (1) 상위과제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특허청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를 선별하였음. 왜냐하면 이 기본계획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장기계획이며 이와 연계된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임
-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에 제시된 전략 및 핵심과제 중에서 특허청의 소관인 과제를 선별하는 작업을 거쳤음. 이 기본계획의 20개 상위과제 중 12개 과제(각 과제와 관련된 총 30개 하위과제)를 선별하였음. 아래의 표는 전문가조사에 제시된 상위과제와 우선순위 응답결과(빈도수)를 보여줌

<표 3-3>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상위과제-전문가조사)

특허청 추진과제(12개 과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12	2	5	6	4
· 민간중심의 지식재산 금융 고도화	1	-	3	2	4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1	5	7	6	2
·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4	4	2	6	6
·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	4	4	3	4
·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애로 해소 지원	-	4	3	2	2
· 지식재산 국제공조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	2	-	5	5
· 생물·유전자원 관련 신 국제규범 대응	-	3	2	2	1
·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11	6	3	3	4
·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7	4	4	3	2
·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2	1	3	1	3
·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3	6	5	2	4

- 각 과제에 1-5순위 빈도와 비례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특허청이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는 다음과 같음. 1순위 과제는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임. 그 다음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특허권의 신뢰성·안정성 제고가 각각 2순위, 3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4순위와 5순위는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임

(2) 하위과제

- 1~5순위 상위과제와 연계된 각각의 하위과제는 다음과 같음. 1순위 상위과제인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의 하위과제 순위는 지식재산·기술의 거래·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후속 지원 확충, 기술거래 활동의 인센티브 강화 등임
- 2순위 상위과제인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와 연계된 하위과제는 신기술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체계 정립,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SW지재권 보호체계 개선의 순서임. 이하 3-5순위 상위과제와 연계된 하위과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음

<표 3-4>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하위과제-전문가조사)

상위과제 순위		하위과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 순위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기술의 거래·이전 및 사 업화에 대한 후 속 지원 확충	기술 거래 활동의 인센티브 강화	-	-
2 순위	신기술·신산업 출 현에 따른 지식재 산 보호체계 정비	신기술 지식재산 에 대한 보호체 계 정립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SW지 재권 보호체계 개 선	-	-
3 순위	특허권의 신뢰성· 안전성 제고	특허 무효율 저 감을 위한 고품 질 심사 실현	지식재산 분쟁해 결시스템 선진화	-	-
4 순위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 재산 역량 제고	지식재산 교육확 대 및 전문인력 양성 내실화	공공부문 지식재 산 인력 확충 및 조직 정비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특화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브랜드 개발
5 순위	중소기업의 아이디 어·기술 보호 강화	하도급 거래 등 에서 부당한 기 술 침해 근절	중소기업 기술 유 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정비	미등록 아이디어· 디자인 및 영업비 밀 보호 강화	-

2)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서 선별한 과제

(1) 상위과제

-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근거로 하여 특허청이 단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를 선별하였음. 왜냐하면 이 계획은 2018년도의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임
- 이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중점방향 및 추진과제 중에서 특허청의 소관인 과제를 선별하는 작업을 거쳤음.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서는 12개 상위과제 중 8개 과제(각 상위과제와 관련된 총29개 하위과제)를 선별하였음
- 아래 표는 각각의 과제에 대한 빈도를 보여주고 있음. 각 과제의 1-5순위 빈도와 비례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특허청이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는 다음과 같음. 1순위 과제는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임. 지식재산·R&D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이 2순위를,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가 3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4순위 및 5순위는 각각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임

<표 3-5>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상위과제-전문가조사)

특허청 추진과제(8개 과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10	4	4	5	2
·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시장주도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	3	4	5	5	12
·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	12	7	3	4	6
·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10	13	8	2	4
·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4	4	13	9	5
·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	2	6	4	12	4
· 현지 대응체계 강화 및 국제공조 지속 확대	-	1	3	3	4
· 초중·고 지식재산 교육 확대 및 시민 인식제고 노력 강화	-	2	1	1	4

(2) 하위과제

- 1~5순위 상위과제와 연계된 하위과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상위과제인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과 연계된 하위과제는 등의 지식재산 분쟁해결 시스템 선진화,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SW지재권 보호체계 개선, 특히 무효율 저감을 위한 고품질 심사 실현 등의 순서임
- 2순위 상위과제인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의 하위과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 지식재산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지식재산 창출 촉진, R&D-특허-표준 연계 추진,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지식재산 경영 강화 등의 순서임
- 3순위 상위과제인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의 하위과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 지식재산 기반 혁신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IP-R&D 지원 확대 등의 순서임

<표 3-6>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하위과제-전문가조사)

상위과제 순위		하위과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 순 위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분쟁해 결 시스템 선진화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SW 지재권 보호체계 개선	특허 무효율 저 감을 위한 고품 질 심사 실현	-
2 순 위	지식재산-R&D 전략 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	지식재산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지식재 산 창출 촉진	R&D-특허-표준 연계 추진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지식재산 경영 강화	국제표준특허 확 보를 위한 대외 활동 강화
3 순 위	혁신창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지식재 산 활동 지원 강화	지식재산 기반 혁 신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R&D 지원 확대	직무발명제도 활 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중소기업 특허공 제제도 도입 및 소송보험 활성화
4 순 위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현장중심 ‘지식재 산 관리’ 인재 성 장 지원	현장·융합형 ‘지 식재산 인재 육 성 기반’ 내실화	선도적 ‘지식재 산 창출’ 인재 성장 지원
5 순 위	중소·벤처기업 지식 재산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	영업비밀 보호 강 화 및 부당한 기 술침해 근절	중소기업 기술 유 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정비	-	-

3) 4차 산업혁명시대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에서 선별한 과제

(1) 상위과제

-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근거로 하여 특허청이 단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를 선별하였음. 왜냐하면 이 계획은 2018년도에 특허청이 추진한 성과목표 및 관리 과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임
-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 정책방향에서는 14개 상위과제, 85개 하위과제 중 55개 하위과제를 선정하였음. 아래 표는 전문가조사에 제시된 상위과제와 우선순위 응답결과 (빈도)를 보여줌

<표 3-7>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정책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상위과제-전문가조사)

특허청 추진과제(14개 과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	5	2	5	3	1
·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11	4	3	6	5
· 특허창출의 전주기 관리	-	6	3	3	1
·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	7	3	1	3	4
·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1	11	4	3	5
·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주도	2	1	-	2	1
· 경제·사회적 지식재산 격차 해소	-	-	1	2	-
·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	1	4	2	-
·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4	5	5	5	5
·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2	1	1	4	1
·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도 개선	3	2	3	5	7
· 미래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효율화	-	1	5	2	5
· 발명인재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	3	3	-	3
· 발명 장려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	4	-	2	-	2

- 각 과제에 1-5순위 빈도와 비례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특허청의 추진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는 다음과 같음. 1순위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임. 2순위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3순위는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임. 4-5순위 각각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이 차지하고 있음

(2) 하위과제

- 1~5순위 상위과제와 연계된 하위과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상위과제인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와 연계된 하위과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 국가 R&D 지원 강화, 4차 산업혁명 기술·디자인에 대한 우선 심사,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지원 등의 순서임. 이하 2-5순위 상위과제와 연계된 하위과제는 아래 표와 같음

<표 3-8>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정책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하위과제-전문가조사)

상위과제 순위		하위과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 순위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4차 산업혁명 분야 국가 R&D 지원 강화	4차 산업혁명 기술·디자인 에 대한 우선 심사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 선 지원	핵심특허 확 보를 위한 수수료 감면	-
2 순위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중소·벤처기 업 아이디어· 기술 보호 강 화	중소·벤처기 업의 지식재 산을 위한 손해배상제도 개선	조사·시정권 고 등 지식 재산 집행 기능 대폭 강화	영업비밀 보 호 제도 개 선 및 중소 기업 지원 확대	-
3 순위	중소·벤처기업 지식 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재 산 지원체계 활성화	지역의 지식 재산 강소기 업 발굴·육성	스타트업에 대한 특허바 우처 사업 시행	‘특허공제 제도’ 도입 추진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 업 지원
4 순위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심판 조직, 인 사 등의 혁신 을 통한 심판 전문성 제고	선택과 집중 을 통한 심 판업무의 효 율성 제고	무효심결 예 고제 도입을 통한 특허 보호 강화	외부위원 참여, 윤리 강령 제정 등 심판 공 정성 강화
5 순위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	심사 역량 강 화	고품질 심사 에 대한 책임 행정 구현	선행기술 조 사 내실화	-	-

## 제3절 수혜자조사 결과

### 1. 수혜자조사 실시 개요

#### 1) 조사시기와 조사대상

- 특허청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는 2018년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약 1주간 수행되었음
- 조사대상으로는 변리사, 일반수혜자,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등임. 응답대상으로 선택된 65명 중에서 54명이 응답하여 응답율은 83%임

#### 2) 조사 절차

- 질문항목 및 문항구성은 전문가조사와 같으며 연구진회의에서 결정하였음. 질문항목은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등을 준거자료로 하였음
- 이들 준거자료에서 선별된 과제를 중심으로 특허청의 중장기 추진과제 및 단기 과제의 우선순위(1~5순위)를 질문하였음. 이는 전문가조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음
- 조사대상선정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기관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여기에는 특허청 유관단체 7개 기관과 변리사 등이 포함됨
- 응답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특허정보진흥센터 5명, 한국발명진흥회 5명, 한국여성발명협회 2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4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명, 한국특허전략개발원 5명, 한국특허정보원 5명, 변리사 16명, 일반수혜자 9명 등임

## 2. 수혜자조사 분석 결과

### 1)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선별한 과제

#### (1) 상위과제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제시된 핵심과제 중에서 특허청 소관 과제를 선별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이 기본계획의 20개 상위과제 중 12개 과제(각 과제와 관련된 총30개 하위과제)를 선별하였음. 선별된 과제는 전문가조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음

○ 아래의 표는 수혜자조사에서 나타난 상위과제의 우선순위 응답결과(빈도수)를 보여줌

<표 3-9>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상위과제-수혜자조사)

특허청 추진과제(12개 과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10	8	8	2	14
· 민간중심의 지식재산 금융 고도화	1	4	1	2	2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8	16	5	5	6
·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9	9	9	7	2
·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0	2	0	4	2
·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애로 해소 지원	3	2	8	5	5
· 지식재산 국제공조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2	2	2	5	2
· 생물·유전자원 관련 신 국제규범 대응	0	1	1	1	0
·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3	2	7	8	5
·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12	3	1	6	4
·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1	3	5	4	6
·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3	0	5	3	4

- 각 과제에 1-5순위 빈도와 비례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특허청이 추진해야 할 과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과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임. 2순위는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3순위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가 각각 차지하고 있음. 그 다음 특허권의 신뢰성·안정성 제고,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가 각각 4순위, 5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2) 하위과제

- 1-5순위 상위과제와 연계된 하위과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상위과제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의 하위과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 지원 강화, 지식재산-R&D 지원 확대, 특허공제 제도 도입 등의 순서임
- 2순위 상위과제(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와 연계된 하위과제는 지식재산·기술의 거래·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후속 지원 확충, 기술 거래 활동의 인센티브 강화 등임. 이하 3-5순위 상위과제들의 하위과제 순위를 아래 표에서 제시함

<표 3-10>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하위과제-수혜자조사)

상위과제 순위		하위과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 순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및 소송보험 활성화
2 순위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기술의 거래·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후속 지원 확충	기술 거래 활동의 인센티브 강화	-
3 순위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하도급 거래 등에서 부당한 기술 침해 근절	중소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정비	미등록 아이디어·디자인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
4 순위	특허권의 신뢰성·안정성 제고	특히 무효율 저감을 위한 고품질 심사 실현	지식재산 분쟁해결시스템 선진화	-
5 순위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신기술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체계 정립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SW지재산 보호체계 개선	-

2)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서 선별한 과제

(1) 상위과제

-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 중에서 특허청 소관 과제를 선별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12개 상위과제 중 8개 과제(각 상위과제와 관련된 총29개 하위과제)를 선별하였음. 이러한 논의는 전문가조사에서 전술한 바와 같음
- 아래 표는 각 과제에 대한 응답결과(빈도)를 보여주고 있음. 각 과제의 1-5순위 빈도와 비례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특허청이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과제는 지식재산·R&D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임. 그 다음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가 2순위를,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이 3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4순위 및 5순위는 각각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시장주도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임

<표 3-11>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상위과제-수혜자조사)

특허청 추진과제(8개 과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3	2	5	8	15
·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시장주도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	5	2	5	9	7
·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	18	6	9	6	2
·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5	13	6	3	5
·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7	11	14	8	3
·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	7	10	6	10	4
· 현지 대응체계 강화 및 국제공조 지속 확대	7	3	4	3	6
· 초중·고 지식재산 교육 확대 및 시민 인식제고 노력 강화	0	4	2	3	8

(2) 하위과제

- 1~5순위 상위과제와 연계된 하위과제는 다음과 같음
- 1순위 상위과제(IP-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의 하위과제는 IP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지식재산 창출 촉진, R&D-특허-표준 연계 추진, 국제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대외활동 강화 등의 순서임
- 2순위 상위과제인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IP 활동 지원 강화의 하위과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 IP-R&D 지원 확대, IP 기반 혁신 창업 활성화, 특허공제제도 도입,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등의 순서임
- 3순위 상위과제인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의 하위과제는 기술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정비,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부당한 기술침해 근절 등이 있음. 4-5순위 상위과제의 하위과제는 아래 표에 제시됨

<표 3-12>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하위과제-수혜자조사)

상위과제 순위		하위과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 순 위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	지식재산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지식재산 창출 촉진	R&D-특허-표준 연계 추진	국제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대외 활동 강화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지식재산 경영 강화
2 순 위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R&D 지원 확대	지식재산 기반 혁신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특허공제제도 도입 및 소송보험 활성화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3 순 위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	중소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정비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부당한 기술침해 근절	-	-
4 순 위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SW 지재산 보호체계 개선	지식재산 분쟁해결 시스템 선진화	특허 무효율 저감을 위한 고품질 심사 실현	-
5 순 위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시장주도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	지식재산 금융을 통한 우수 지식재산 기업 지원 강화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금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기술거래 활동의 인센티브 강화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3) 4차 산업혁명시대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에서 선별한 과제

(1) 상위과제

○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 정책방향에서는 14개 상위과제 및 85개 하위과제 중 55개 하위과제를 선정하였음. 선별과제는 전문가조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음

○ 아래 표는 수혜자조사에 제시된 상위과제와 응답결과(빈도)를 보여줌

<표 3-13>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정책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상위과제-수혜자조사)

특허청 추진과제(14개 과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	14	3	4	0	2
·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6	10	6	8	3
· 특허창출의 전주기 관리	2	4	4	3	4
·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	4	9	3	3	4
·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9	7	10	5	5
·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주도	2	2	1	5	4
· 경제·사회적 지식재산 격차 해소	0	1	1	0	1
·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0	0	1	2	2
·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7	7	10	9	8
·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2	1	4	1	3
·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도 개선	4	3	6	7	6
· 미래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효율화	1	1	1	3	3
· 발명인재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1	1	0	2	3
· 발명 장려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	0	3	1	3	3

○ 각 과제의 1-5순위 빈도와 비례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특허청이 추진해야할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는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임. 2순위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가, 3순위는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가, 4-5순위는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이 차지하고 있음

(2) 하위과제

- 1~5순위 상위과제와 연계된 하위과제는 다음과 같음. 1순위 상위과제(중소·벤처기업 IP 역량 강화 및 IP 기반 창업 지원)의 하위과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 창업기업에 대한 IP 지원체계 활성화, 지역 지식재산 강소기업 발굴·육성, 스타트업에 대한 특허바우처 사업 시행, IP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등의 순서임
- 2순위 상위과제인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의 하위과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IP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제도 개선, 조사·시정권고 등 IP 집행 기능 대폭 강화, 영업비밀 보호 제도 개선 등임
- 이하 3-5순위 상위과제 각각의 하위과제 순위를 아래 표에서 제시함

<표 3-14>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정책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하위과제-수혜자조사)

상위과제 순위		하위과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 순위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체계 활성화	지역의 지식재산 강소기업 발굴·육성	스타트업에 대한 특허바우처사업시행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특허공제 제도’ 도입 추진
2 순위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제도 개선	조사·시정권고 등 지식재산 집행 기능 대폭 강화	영업비밀 보호 제도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
3 순위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4차 산업혁명 분야 국가 R&D 지원 강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지원	4차 산업혁명 기술·디자인에 대한 우선 심사	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수수료 감면	-
4 순위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	심사 역량 강화	선행기술조사 내실화	고품질 심사에 대한 책임 행정 구현	-	-
5 순위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	심판 조직, 인사 등의 혁신을 통한 심판 전문성 제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판 업무의 효율성 제고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을 통한 특허 보호 강화	외부위원 참여, 윤리 강령 제정 등 심판 공정성 강화

## 제4장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제안

### 제1절 정책 환경의 변화와 성과목표 제안

#### 1.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의한 정책 환경의 변화<sup>5)</sup>

-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특히 국민 전체의 삶과 희망을 제시하는 ‘포용국가(embracing state)’를 국정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국정철학과 전략에 따라서 특허청에만 해당되는 구체적인 국정과제는 없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급, 이하 중기부로 표기)의 신설에 따른 혁신과 창업(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전 정부부처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서비스 하는 행정 등의 국정과제는 특허청의 정책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1)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에 의한 정책 환경의 변화

-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국가 조성사업에 의한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의 육성, 특히 스마트벤처캠퍼스나 스마트창업터 등의 창업팀의 사업화에 의한 특허청의 스마트특허기술이나 ICT융합특허기술 분야의 출원과 허가 등에 관한 정책 환경이 연동되고 있음
- 창업전문기관 및 민간역량, 창업선도대학 등과 같은 초기창업자 발굴육성과 창업친화적 지원기반 확충 사업에 의한 특허청의 특허관련 업무의 선도적 대응이 필요한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음. 특히 사내벤처 창업이나 창업도약 패키지,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의 창업기업 등과 같은 정책 환경의 변화에 의한 특허청 특허관련(특히 창업이전의 특허 출원 및 허가 등)의 사업과 성과지표의 선제적 설정 등의 환경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5) 여기서의 정책환경의 변화는 2017년 5월, 문재인정부의 출범에 의한 국정과제의 제안과 실천에 따른 특허청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변화와 변동을 의미함. 그 외의 외부적인 정책환경의 변화나,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요 국가들의 특허행정이나 정책변동에 관한 내용은 기타의 연구과제나 실천과제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특히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intellectual property patent policy)은 특허청의 조직위상과 국정과제의 정책우선순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내용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지식재산 정책은 법률적인 분쟁이나 재산보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앞으로 특허지식의 산업 및 경제재화, 기업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분야에서 지식재산정책이 심층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

## 2) 열린 혁신정부 및 서비스하는 행정에 의한 정책 환경의 변화

- 과제 발굴 및 계획수립과 평가 등의 전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면서 행정내부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열린 혁신정부는 특허청의 행정서비스 및 특허 관련 행정서비스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필수적인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철저하고 공정한 기록관리에 의한 행정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특허청 특허관련 행정기록의 기록관리 또는 데이터관리(data-management)의 중요성과 투명성이 행정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음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의 국정과제에 의하여 특허청의 특허관련 및 행정의 자료나 기록 등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면서 특허청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는 방향으로 정책 환경이 변화되고 있음

## 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의 선도기반 구축의 국정과제에 의한 정책 환경의 변화(과기정통부 및 산업부 중심)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국정과제에 의한 특허청의 특허데이터의 관리 및 고부가가치의 창출 등과 같은 정책 환경이 변화되고 있음
-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및 자율협력주행 스마트하이웨이 시스템 확산 등과 같은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에 따른 특허청의 특허기술 분야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업대응의 필요성 등이 정책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음
- 청년과학자 기초연구 지원확충에 의한 청년과학자들의 특허관련 교육이나 실질적인 특허관련 기술의 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국정과제의 중요성이 정책 환경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특히 대학이나 공공기관에 소속된 청년과학자들의 지식재산에 관한 특허의 지원과 발굴육성도 특허청의 정책 환경의 변화로 등장하고 있음

## 4)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의한 특허청 정책 환경의 변화

- 중기부의 신설은 특허청의 직접적인 정책 환경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중기부의 구체적

국정과제(예: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웹 등의 사업화를 통한 지식서비스 산업 및 창업, 중소벤처기업이나 스마트공장의 육성과 창업, 기술혁신 등)와 관련하여 특허청의 특허행정과 사업에의 정책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ICT나 웹기반 사업화에 의한 신기술, 고유기술, 산업보호기술 등과 같은 기술혁신과 보호 등에 관한 특허청의 특허대응사업 등의 정책 환경의 변화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라서 기술의 특허권이나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특허청 사업의 대응 등의 정책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5) 진 부처의 일자리 창출의 국정과제에 의한 정책 환경의 변화

- 일자리 창출의 근원적 국정과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의 창출임. 국민의 눈높이는 포용국가의 기본과제임. 일자리를 구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눈높이는 주관적·개인적이며 다양함. 이에 더하여 좋은 일자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일자리의 조건이 되어야 함
- 이와 같은 일자리 창출의 이념적이고 선언적 과제를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특허청의 고유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중요한 정책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음. 특히 특허청의 특허관련 기술 분야나 기타 지식서비스기술, 창업 및 아이디어 출원, 일상생활관련 특허출원, 기타 산업기술 등의 특허행정은 좋은 일자리 창출의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이와 같은 정책 환경에서 특허청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진보적이면서도 (progressive) 교육적이고(educational), 선도적(precursor) 역할에 초점을 두는 사업으로 변화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이고 통계적인 효과나 목표달성도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특허청의 공공분야 일자리창출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면서 특허청 고유의 일자리 창출 분야를 개척해야 하는 정책 환경이 변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서 특허청 본청뿐만 아니라 소속기관(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구원, 지역사무소)의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인 목표(물론 국민의 눈높이와 좋은 일자리에 초점) 달성의 가능성 등과 같은 사업변화의 환경이 중요해지고 있음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사업에 의한 특허청의 특허청운영 시스템의 구축과 대응전략이 정책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특허산업과 지식활성화에 의한 민간일

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실현(예: 혁신형 창업을 특허청 일자리로 계산, 특허산업의 일자리 늘리기 사업을 특허청 사업으로 전환, 지식산업과 지식재산권 사업의 특허청 사업으로 전환 등) 등과 같은 정책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음

- 6) 대외적 환경으로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의 변화가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적 아이디어 등 소프트 파워가 경쟁력의 원천이며, 지식재산 등의 무형자산이 노동·자본 등 유형자산을 추월하여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임. 혁신적 아이디어가 산업적으로 활용되고 지식재산으로 보상 받으며,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주요국의 노력은 주지하는 바와 같음<sup>6)</sup>. 따라서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활성화, 미래에 대비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등의 노력이 필요함

## 2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된 성과목표 제안

- 고부가치의 표준특허의 창출을 지원하여 지식산업 및 벤처기업 창업의 선도역할. 세계 3대 표준화기구(ISO, IEC, ITU)에서 선언된 표준특허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특허청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국내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으로 연계하는 목표체계를 제안
- 4차 산업혁명의 선도기반 구축 국정과제의 중심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의 표준화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전략적 표준특허 창출(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소송, 특히 특허소송관할 등의 개선(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의한 특허법원의 위상 강화, 특허관리전문회사, 표준필수특허권자의 남용)에 의한 혁신창업국가 조성의 선도, 외국기업의 특허공제나 산업특허 등에 관한 특허청의 국제적인 특허분쟁에의 대응능력 강화에 대한 목표체계의 제안 등으로 국민을 포용하는 포용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체계를 제안
- 특허 특허소송제도와 특허법원의 위상과 관련하여 특허청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제도와 특허법원의 조직개편을 지적할 수 있음. 법원조직법은 특허청의 권한과 업무범위에 관계없는 것이지만, 특허의 전문법원에 관한 특허기술, 데이터관리, 특허관련 법률적 쟁점에서 기술적인 자문과 판단, 특허출원과 결정에의 진행과정 및 제도 등은 특허청의 고

6) 특허청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 pp.2-4.

유권한과 업무로서 특허법원의 실질적인 위상강화의 변수라고 할 수 있음

- 특허청 데이터관리 시스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와 목표연계. 특히 문재인정부의 공공데이터의 혁신적인 개방과 이용활성화 및 책임성을 강조하는 국정과제를 특허청의 목표관리체계로 전환. 특허청 데이터 관리(D/B) 기법의 선진화 사업 등의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 특허청의 데이터관리 선진화사업으로 2017년 7월 이후부터 특허청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외부에서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면개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동시에 데이터 관리의 안전성과 동시에 공공정보의 공개와 동시에 특허권의 개인의 사유재산권 및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관리책임의 의미하는 데이터시스템 관리도 필요함. 이것이 특허청의 특허출원과 판단 및 행정과정의 전체에 대한 행정행위의 정당성과 합법성 및 합리성 등을 동시에 설명하는 특허 데이터관리의 투명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봄. 이와 같은 특허청의 D/B 관리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체평가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특허 문재인정부의 국정전략(전략3)인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에서 강조하는 국정과제를 특허청의 목표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 항목으로, 특허관련 행정행위와 판단의 철저하고 공정한 기록관리에 의한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노력성과점수 획득, 특허청의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활성화의 성과점수(2017년 7월부터 시행된 성과), 특허청의 정보공개건수의 증가로 인한 성과점수 등을 들 수 있음
- 특허청의 일자리 창출과제의 실현을 위한 목표체계의 제안으로, 포용국가의 실천을 위하는 국민의 눈높이와 좋은 일자리에 초점을 두는 일자리 창출로서 본청과 소속기관과의 연계전략, 특허산업 및 특허출원 및 해당기업체와의 연계전략의 추구로 일자리 창출 목표의 성과달성
- 특허청 조직입장에서 특허산업과 특허권, 지식재산관리 등과 같은 특허관련 선도형 조직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의 역할에 필요한 미래형 목표관리 및 성과체계 구축이 필요한 단계임. 이와 같은 성과 및 목표관리 시스템이 국정과제와 연계되면서 특허청의 종합적인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중시해야 할 필요성도 큼

## 제2절 실증조사 결과에 따른 성과목표체계 제안

- 1절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정책 환경변화 및 이와 연계된 성과목표체계를 제안하였음. 여기에서는 3장 전문가조사 및 수혜자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조사 결과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성과목표체계를 제안하였음. 실증조사는 단기 및 중장기 추진과제를 구분하여 설계되었음.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단기적 성과목표체계와 장기적 성과목표체계로 구분하여 제안하였음
-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제안 순서는 전문가 조사결과의 우선순위(전문가조사 분석결과 참조)를 반영하였음

### 1. 단기적 성과목표체계 제안<sup>7)</sup>

#### 1)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함

- 이 목표의 추진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이며, 다른 하나는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SW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개선임

##### (1)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는 지식재산 분쟁해결 시스템 선진화와 특허 무효율 저감을 위한 고품질 심사 실현 등 두 가지로 구성됨

##### ① 지식재산 분쟁해결 시스템 선진화

- 이 과제의 추진 배경으로는 법원-특허심판원 간 특허무효 여부에 대해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심결·판결의 일관성·신속성 제고 필요 및 특허심판에 대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 증가 예방 및 특허심판 결과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심판품질 향상 필요 등이 있음
- 주요 내용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특허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특허 소송·심판 체계 개선 및 특허심판의 품질 제고 등이 있음

7) 여기에서 논의된 단기 성과목표체계 제안의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2018).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과제(pp.13-60) 및 특허청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의 핵심과제와 세부과제(pp.10-24) 중 특허청 관련 사업에서 인용함

- ㉓ 특허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특허 소송·심판 체계 개선
  - 심판사건을 3개월 내에 처리하는 ‘신속 심판제도’ 지속 관리
  - 심판당사자의 방어부담 감소 및 심판지연 방지를 위해 지나치게 늦게 제출하는 증거·이유에 대한 제한규정 도입
  - 민사법원의 지재권 침해사건에 대하여 법원-특허심판원 간 소 제기 통보 및 심판 정보 공유 활성화
  
- ㉔ 특허심판의 품질 제고
  - 특허법원 심결 취소 사건에 대해 유형별, 쟁점별 원인 분석·공유(분기별)
  - 고객 맞춤형 심판을 위해 쟁점 파악에 도움이 되는 구술심리/사건 설명회를 개최 확대 및 원격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
  
- ② 특허 무효율 저감을 위한 고품질 심사 실현
  - 이 과제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허는 기술혁신의 원동력으로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허 무효율이 높고 심사품질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기술 융·복합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심사체계를 정비하고, 심사관의 심사처리 건수를 적정화하는 등 심사품질 혁신 필요
  -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심사 조직 및 방식 개편, 고품질 심사를 위한 심사인력 확충,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이 있음
  
- ㉕ 4차 산업혁명 대비 심사 조직 및 방식 개편
  -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별 다양한 전문심사관들로 구성된 전담 심사 조직(예: IoT 심사과) 정비 추진
  - 기술 융·복합화를 고려한 3인 협의심사 도입, 산업현장 전문가의 지식을 심사에 활용하는 산업현장 소통형 공증심사 확대 등 협력 심사 활성화
  
- ㉖ 고품질 심사를 위한 심사인력 확충
  -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를 주요국 수준으로 적정화하기 위해 심사 인력 단계적 증원 및 관련 예산 확보
  - AI, 로봇,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분야 전문 심사인력 확충을 위해 기술 분야별 고급 이공계 인력(고경력 과학기술인, 경력단절 여성인력 등)을 심사관으로 충원 추진

㉞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심사관 경력별 맞춤형 법제교육 및 현장 중심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분야별 외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육성
- AI 기술을 특허검색 및 상담서비스에 시범 적용, 검색/심사시스템의 검색 결과 정확도 개선 및 심사관 요구사항이 반영된 맞춤형 편의기능 제공
- 중국특허문헌 인용 지원을 위해 중·한 기계번역 사전 확충

(2)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SW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개선

- 이 과제의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음. SW 유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특허기술이 포함된 SW 보호를 위한 특허법 및 심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상에서 특허기술이 포함된 SW 보호체계 마련 및 특허 심사 내실화 등이 있음

㉟ 온라인상에서 특허기술이 포함된 SW 보호체계 마련 및 특허 심사 내실화

- 특허기술이 포함된 SW 심사기준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심사 필요사항·사례 추가 등 심사기준 재정립 및 국제적인 논의 채널 구축
-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한 SW의 온라인 유통(전송) 행위를 특허 침해 행위에 포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특허법 개정 추진

2) IP-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을 선점함

- 이 목표의 추진과제는 IP 전략과 R&D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 신기술 분야 R&D에 표준특허 전략 적용 강화,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IP 경영 강화 등임

(1) IP 전략과 R&D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

- 이 과제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음.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특허의 양적 성과는 확대 되었으나 우수 특허비율은 저조함.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지식재산 확보를 위해 주요국 및 기업들이 경쟁 중인 상황에서 지식재산 전략에 기반한 정부 R&D를 통해 신기술 분야 원천·핵심 특허 선점이 필요함
- 주요 내용으로는 R&D 전 주기 특허 빅데이터 분석 지원 확대 등이 있음

① R&D 전 주기 특허 빅데이터 분석 지원 확대

-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국가 특허 선점 전략 제시

- (과제발굴단계)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등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부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 및 원천·표준 특허 확보 전략 수립 지원
- (연구기획단계)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대한 특허동향조사를 집중 지원하고, 연구기획단계 전부터 연구 타당성 검증 지원
- (연구수행 및 완료 단계) 원천·핵심 특허 확보가 가능한 분야를 선별하여 대학·공공(연)에 맞춤형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연구결과를 강한 특허로 설계하도록 지원
- (사후 관리 단계) R&D 과제와 무관한 특허성과를 제출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심층 검증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보유 미활용 특허 진단

(2) 신기술 분야 R&D에 표준특허 전략 적용 강화

- 이 과제는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R&D-특허-표준 연계 추진, 다른 하나는 국제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대외 활동 강화임

① R&D-특허-표준 연계 추진

- 이 과제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음. 기술 융·복합으로 기기 간 신호·정보 교환 및 호환 등이 중요해지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의 중요성 증대. 우리나라 표준특허 점유율이 세계 5위임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밀접한 ICT 분야 특허 사용권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분야 R&D 단계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 지원, 표준특허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있음

㉔ 4차 산업혁명 신기술분야 R&D 단계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 지원

- 표준특허 확보가 유망한 과제를 발굴하여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하고, 특허 성과물이 표준특허로 완성될 때까지 후속 관리

㉕ 표준특허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표준화 기구 등에 산재된 표준특허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산·학·연에 통계 및 상세정보 제공
- 국민들이 표준특허에 관한 최신 정보를 쉽게 접하도록 전문지 발간(분기별)

② 국제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대외 활동 강화

- 이 과제의 추진 배경으로는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유도하고 국외로 로열티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화 활동과 특허 권리화 간의 긴밀한 연계 필요 등임

-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표준 대응체계 구축, 국제표준화 활동의 전문성 향상 및 인식 제고 등이 있음

㉔ 국제표준 대응체계 구축

- 과기정통부, 산업부가 운영 중인 국제표준 대응위원회와 연계하여 블록체인 등 대응 시급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 특허전략 마련을 위한 범부처 국제표준 공동 대응체계 구축. 여기서 특허청의 역할은 각 국 표준 제안서에 대한 특허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등임
- 표준화 기구 일정에 맞춰 국내 특허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전략 밀착 지원

㉕ 국제표준화 활동의 전문성 향상 및 인식 제고

- AI, IoT, 빅데이터, 5G 등 융합 분야 표준기술 동향 정보 제공 및 교육
- R&D 인력 및 특허전문가(변리사)를 표준특허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운영(예: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양성 교육 등)
- 이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계하여 진행해야 함

(3)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IP 경영 강화

- 이 과제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음. 출연(연)은 연구 성과의 87% 이상을 특허 출원하고 있으나 활용률은 48.1%에 그치는 등 활용 가치가 높은 성과는 미흡함. 정부 R&D 기반 고품질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체계적인 IP 전략 수립 및 특허 관리 필요
- 이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 출원 및 미활용 특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① 특허 출원 및 미활용 특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출연(연)의 특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 수요 기반 R&D 과제를 중심으로 특허 전략 지원 확대
- 출원 전에 기술성, 특허성, 시장성을 기반으로 특허가치를 판단하여 차등 관리하는 발명 등급제 시행
- 대학·출연(연)의 미활용 특허를 분석·진단하여 등급별 차등관리
  - 출연(연) 기술료 사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우수 등급특허는 출연금·기술료 등을 활용하여 집중 지원
- 이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계하여 진행해야 함

3)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을 강화함

- 이 목표의 추진과제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 이 과제는 지식재산 기반 혁신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IP-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특허공제제도 도입 및 소송보험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됨

① 지식재산 기반 혁신 창업 활성화

- 이 과제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음.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형 창업 활성화가 필요함. 스타트업의 특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기업의 수요에 맞춰 지원 시기, 규모, 내요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
- 주요 내용으로는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시행, IP 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 단계별 지원 강화 등이 있음

㉓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시행

-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이 특허바우처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서비스와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이용
-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업지원기관 및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

㉔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 단계별 지원 강화

- 예비창업자가 손쉽게 아이디어를 사업아이템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지역별 지식재산 창업 촉진 거점을 통해 'IP 디딤돌 프로그램' 확대 추진
- 창업 기업 특화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IP 나래 프로그램' 확대 추진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체계)  
1단계: 아이디어 발굴: 지역발명경진대회, 특허정보 활용교육 등  
2단계: IP 디딤돌(창업 준비 또는 초기): 아이디어 고도화 및 권리화 등  
3단계: IP 나래(성장단계): 사업 아이템 경쟁사 IP 분석, 지재권 창출·보장 등

② 중소기업에 대한 IP-R&D 지원 확대

- 이 과제의 추진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임. 하나는 지식재산 보유 여부가 스타트업 생존에 핵심 요인이며, 원천 특허 확보를 위해서는 IP 전략에 기반을 둔 R&D가 필요하다는

것임. 다른 하나는 출연(연)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장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전문성과 비용 부족으로 사업화 및 국제 표준화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및 기술분야별 IP-R&D 지원 강화, 표준특허 중소기업 육성, 부처 협업을 통한 R&D 및 IP-R&D 공동 사업 추진, 중소기업 수요기반 R&D 활성화 등이 있음

㉓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및 기술분야별 IP-R&D 지원 강화

-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IP-R&D 전략 지원 확대
- 기술분야별(ICT, 제약, 바이오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IP 전략 지원 강화

㉔ 표준특허 중소기업 육성

-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특허-표준 연계 전략 사전기획 후 과기정통부 등의 표준화 지원 사업과 연계

㉕ 부처 협업을 통한 R&D 및 IP-R&D 공동 사업 추진

- 혁신 창업의 R&D 성과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부처(중기부-특허청) 공동으로 R&D 자금과 IP-R&D 전략을 패키지 지원 등

㉖ 중소기업 수요기반 R&D 활성화

- 중소기업 수요 기반의 출연(연) R&D 과제에 대해 특허 창출지원 확대 등

③ 중소기업 특허공제제도 도입 및 소송보험 활성화

- 이 과제의 추진배경으로는, 특허분쟁은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경영 차질을 초래하며, 직접적인 분쟁 이외에도 지식재산 관련 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임
-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특허공제사업 추진, 분쟁 대응 컨설팅 및 소송보험 지원 등임

㉗ 중소기업 특허공제사업 추진

- 이 사업은 발명진흥법 제50조의 4를 근거로 하여 중소기업 간 상호부조를 위해 기업이 납부하는 공제부금 등을 기반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특허 출원 및 IP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 해외출원, 소송 대응 등 지식재산 관련 비용을 ‘선 대여 후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

원하고, 분쟁 대응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㉔ 분쟁 대응 컨설팅 및 소송보험 지원

-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분쟁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 수출(예정)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소송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2)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 이 과제의 추진 배경은 산업 고도화로 우수한 기술 및 발명이 대부분 기업, 연구소, 대학에 의해 개발됨에 따라 직무발명제도 도입 확산 및 제도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발명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인식 개선, 공공분야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등이 있음

① 직무발명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인식 개선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특허료 감면 연장
-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설명회 확대 개최, 홍보 영상 및 직무발명규정 표준모델 등 배포
-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및 직무발명 최신판례 조사·분석

② 공공분야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 국가가 공무원에 대한 직무발명 승계의사를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 신고 및 비밀유지 의무 이행 방안 마련
- 발명기관의 장 또는 국유특허 업무수탁기관에 국유특허권 처분권한 위탁
- 지방 공무원의 특허 출원·등록 및 유지관리 지원, 보상금 지급

4)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을 구축함

- 이 목표의 추진과제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등이 있으며, 이 과제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하나는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부당한 기술침해 근절,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정비임

(1)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부당한 기술침해 근절

- 이 과제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음. 대기업, 경쟁사 등에 의한 예비창업자·스타트업의 아이디어·기술탈취는 기업의 성장기반을 잠식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 감퇴 및 범죄 억제 효과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하도급 거래 등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함.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술보호를 할 수 있는 역량 제고가 필요함
- 주요 내용에는 부정경쟁행위 확대 및 처벌·행정조치 강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강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계약 역량 제고 등이 있음

① 부정경쟁행위 확대 및 처벌·행정조치 강화

-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와 매장의 실내외 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에 대한 침해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전환
  - 침해 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도 적극 도입 추진
-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②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강화

- 중소기업 기술침해 및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중기부와 특허청에 조사·시정권도고 등 행정조치 권한 보강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
  - 현행 상표권 침해에서 상표권·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로 확대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등

③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계약 역량 제고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IP 관리자 대상 특허출원, 라이선싱 등 실무 위주의 맞춤형 교육 운영
-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보안인력 육성 과정, 예비창업자 대상 기술보호교육, 중소기업 특성화고에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취득 과정 운영 등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2)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정비

- 이 과제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기술유출 등 피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첨단·지능화 하고 있는 지재권 침해 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간 협력 및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식재산 분쟁은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기업 존폐와도 직결되므로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활성화가 필요함

-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부처 협력으로 피해사건 신속 해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등이 있음

① 관계부처 협력으로 피해사건 신속 해결

-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및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피해사건 신속 해결
- 기술탈취 사건 접수 또는 인지 시(중기부), 행정조사·시정권고 사항일 경우 특허청(부정 경쟁방지법) 등에, 수사 필요사항일 경우 특허청(특별사업경찰) 등에 각각 인계하는 등 범부처 공조체계를 수사기관으로 확대

②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 위원회는 발명진흥법 제41조를 근거로 하여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관련 분쟁의 심의·조정함
-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분쟁조정 사무국을 운영하여 상시 분쟁 상담 및 조사 등 전담
  -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찰청 협조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조정이 가능한 사건을 회부 받아 처리하고, 조정-특허심판 연계 추진
- 미디어 등을 활용한 대민 홍보 강화 및 온라인 신청 접수
-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5)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를 지원함

- 이 목표의 추진과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 국가 R&D 지원 강화, 4차 산업혁명 기술·디자인에 대한 우선 심사,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지원, 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수수료 감면 등이 있음

(1) 4차 산업혁명 분야 국가 R&D 지원 강화

-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정부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 및 원천·표준 특허 확보 전략 수립 지원
- 표준 특허 창출을 위해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 보유 기업·기관에 R&D 과정에서 표준화 및 관련 특허 동향 제공

(2) 4차 산업혁명 기술·디자인에 대한 우선 심사

- 4차 산업혁명 기술·디자인에 대한 기업의 지적재산권 선점 지원을 위해 관련 기술 및 디자인의 우선 심사 확대

(3)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지원

- 지식재산 무역수지의 만성적 적자 해결을 위해 지식재산 수출입에 관한 정확한 지재산 국제거래 실태 파악이 미비함
- 지식재산 외환거래 내역의 조사·분석 자료를 관계 부처에 제공하여 부처별 적자 개선 대책 마련에 활용

(4) 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수수료 감면

-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대상 특허 연차료 감면 확대

6)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함

- 이 목표의 추진과제는 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제도 개선, 조사·시정권고 등 지식재산 집행 기능 대폭 강화,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이 있음

(1) 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 하도급, 공모전 등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하여 강력히 규율
- 프랜차이즈 창업, 청년 창업 등 영업상의 특징적 외관을 모방하여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명시
- 고객흡인력이 높은 특정인의 성명, 초상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2)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제도 개선

-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보호 강화
  - 악의적인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하여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 확대
  -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등 고려 요인 규정
- 지식재산 침해·손해배상 입증부담 완화
  - 중소·벤처기업의 소송 대응력 제고를 위한 특허법 개정 추진
  - 특허법에 반영된 침해 소송에서의 증거제출 강화 규정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

쟁방지법에도 도입

○ 손해배상액 산정 지원을 위한 특허 실시료 DB 구축

- 특허 침해 시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술분야별 특허 실시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일반에 제공

(3) 조사·시정권고 등 지식재산 집행 기능 대폭 강화

○ 중소·벤처기업 기술·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 권고 등 집행력 강화

○ 상표권 침해만 관장하는 특허청 소속 특허사법경찰대의 업무범위를 디자인 도용·침해 행위까지 수사 확장

○ 위조상품 단속 수사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한 상표권 침해 방지

- 대규모·상습 사건, 온라인 사건 등에 대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력 집중
- 특별사법경찰대 지역사무소를 3개에서 5개로 확대 추진

(4)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시 징벌배상 도입, 벌금 상한액 상향, 처벌 가능한 영업비밀 침해 유형 확대 등 추진

○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무상보급,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7)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을 지원함

○ 이 목표의 추진과제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체계 활성화, 지역의 지식재산 강소기업 발굴·육성, 스타트업에 대한 특허바우처 사업 시행, 특허공제 제도 도입 추진,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등임

(1) 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체계 활성화

○ (IP 디딤돌)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체화, 지식재산권화 및 사업아이템 도출을 지원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 촉진

○ (IP 나래) 창업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춰 안정적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지식재산권 컨설팅 제공

(2) 지역의 지식재산 강소기업 발굴·육성

○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확대

- 해외출원 지원 등 지적재산권 종합 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육성
- 산업계 전반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확산
- IP 출원, 활용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인센티브 제공

(3) 스타트업에 대한 특허바우처 사업 시행

-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 바우처 사업 시행
- 기업 성장 단계별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바우처 제공 등

(4) 특허공제 제도 도입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특허공제 제도 도입
- 자금 지원, 전문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지식재산 애로와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5)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의 자격조건 완화 및 무상 제공기간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에 특화된 지식재산 스마트 창작터 운영 등

8)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

- 이 목표의 추진과제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심판 조직·인사 등의 혁신을 통한 심판 전문성 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판 업무의 효율성 제고,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통한 특허 보호 강화, 외부위원 참여·윤리강령 제정 등 심판 공정성 강화 등이 있음

(1)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 중소·벤처기업이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 심판지연을 목적으로 증거 등의 제출을 지연시킬 경우 증거를 각하하고 심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제도 개선 등

(2) 심판 조직·인사 등의 혁신을 통한 심판 전문성 제고

- 심판장의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심판장 업무의 일부를 3급 심판관에게 위임하도록 개편
- 심판 1건당 심리시간을 늘리고, 최첨단기술에 대한 심리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심판관을 보좌하는 연구관제 도입
- 직무수행능력 등이 우수한 인력을 심판관으로 선발하기 위한 심판관 선발위원회 운영 및 심판관 장기근무 우대

(3)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판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심판관이 핵심사항의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심결문을 간소화하여 쟁점위주 심결문 작성
- 답변서 제출 후 심판관을 지정하고, 부분 송달 등의 업무는 심판정책과에서 전담처리하며, 심리일정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4)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통한 특허 보호 강화

- 특허 무효율이 높은 상황으로, 특허권자는 정정을 통해 무효를 방어할 수 있으나, 그 시기가 제한되는 상황임
- 특허권자에게 무효심결을 예고하고 정정기회를 추가로 부여하여 특허권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5) 외부위원 참여·윤리강령 제정 등 심판 공정성 강화

- 외부 전문가가 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심사품질평가위원회에 민간위원을 과반이상 참여시켜 투명성 개선
- 심판관과 이해관계인의 사적접촉을 엄격히 금지하고, 동일부서 출신 특허청 퇴직 변리사의 사건을 회피하는 등 윤리강령 제정·시행
- 부당한 지식, 외부청탁 등으로부터 심판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판관 임기·신분 보장 등 규정을 특허법에 신설

9) 특허 심사품질을 혁신함

- 이 목표의 추진과제는 심사 역량 강화, 고품질 심사에 대한 책임행정 구현, 선행기술조사 내실화 등이 있음

(1) 심사 역량 강화

- 융·복합 기술 분야 중심으로 소통형 협력심사를 강화하고 최종 특허 결정 단계에서 3인

협의제 심사 확대 시행

- 심사관 경력별 맞춤형 법제 교육 및 연구소·기업 실무자 초빙 교육 등 현장 중심 기술 교육 강화

(2) 고품질 심사에 대한 책임행정 구현

- 현행 심사 처리기간은 10개월로 세계적 수준이나, 주요국 대비 특허심사 1건당 투입시간이 현저히 적어 고품질 특허 창출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점진적으로 심사 투입시간을 적정화하여 심사품질을 제고함. 이를 위해 2022년까지 특허심사인력 1,000명 증원 추진
- 특허 무효 시, 특허권자에게 기납부한 특허등록료를 전액 반환함으로써 심사품질에 대한 책임행정 구현

(3) 선행기술조사 내실화

- 기계, 통신, 화학 등 기술분야별 전문 조사기관 확대 및 제3의 기관에서 조사품질 평가 및 관리 등

10)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 이 목표는 전문가 조사결과에서 제시된 것임
- 추진배경으로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및 교육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 인력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대응한 고급 인재가 부족하며, 창업·취업 연계도 다소 미흡하다는 점 등이 있음
- 이 목표의 추진과제에는 'IP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현장중심 'IP 관리' 인재 성장 지원, 현장·융합형 'IP 인재 육성 기반' 내실화, 선도적 'IP 창출' 인재 성장 지원 등이 있음

(1)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 (IP서비스기업 채용연계 교육)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조사·분석·번역 등 실무교육 후 IP 서비스 기업으로 채용 지원
- (실무에 강한 변리사 양성) 국제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 시험에 실무형 문제 출제 및 현장 중심 교육 운영

(2) 현장중심 '지식재산 관리' 인재 성장 지원

- (예비창업자 교육) 기술기반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기 위한 지식재산 관리

및 사업화 전략 등을 교육

- (청년 창업가 대상 지식재산 실무교육)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 과정 중 지식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청년 CEO 양성

(3) 현장·융합형 '지식재산 인재 육성 기반' 내실화

- (지식재산 지역인재 양성) 지자체-지역 대학-기업이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여 채용과 연계
- (실무중심 학과 운영)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MIP, 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운영
  - 지식재산 관련 법 및 기술·경영 과목 등 다양한 교과목 교육, 분쟁사례 연구, 현장실무 경험 제공 등

(4) 선도적 '지식재산 창출' 인재 성장 지원

-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 표준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수립하는 전문인력 양성
-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 지식재산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특허정보 조사·분석, 특허권 확보 및 관리 전략 등 맞춤형 교육 등

11)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시장주도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

- 이 목표는 수혜자 조사결과에서 제시된 것임
- 이 목표의 추진과제에는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금융 고도화(IP 금융을 통한 우수 IP 기업 지원 강화, 민간 중심의 IP 금융을 위한 인프라 구축), IP 기술거래 활동의 인센티브 강화, IP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등이 있음

(1) IP 금융을 통한 우수 IP 기업 지원 강화

- 이 과제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음. IP 금융의 대부분은 IP 보증, 담보대출인 반면, 창업·초기기업은 사업화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IP 투자를 선호한다는 점, 현재 특허권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IP 금융의 저변 확대를 위해 상표권 기반의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임
-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 특허 보유 스타트업 등에 대한 IP 투자 강화, 상표권 기반 투자 활성화 유도 등임

① 우수 특허 보유 스타트업 등에 대한 IP 투자 강화

-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해 IP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 시 IP 가치 평가 강화
- IP 출원 단계에서 명세서 보강, 해외 출원·등록유지 비용 지원 등 기업의 IP 고도화 전략을 지원하는 IP 출원 펀드 조성
- IP 제품혁신전략 등 IP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수 IP 보유기업을 발굴하고 투자기관과 공동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 ② 상표권 기반 투자 활성화 유도

- 상표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상표권 로열티 기반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등 상표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 한류확산 및 신진 디자이너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패션·뷰티업계, 브랜드 전략이 확고한 중소기업에 선별 지원

## (2) 민간 중심의 IP 금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이 과제의 추진 배경은 정부 주도 하에 기술금융 시장의 성장과 함께 IP 금융도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 모델을 확보하는 등 질적으로도 향상, 민간 중심의 IP 금융이 확산되도록 인프라 고도화 필요하다는 점 등임
- 주요 내용은 IP 가치평가의 전문영역 특화 및 신뢰성 제고, IP 금융인력 육성 및 전문성 제고 등임

### ① IP 가치평가의 전문영역 특화 및 신뢰성 제고

- IP 담보대출 외에도 기업이 보유한 IP를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규모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IP 우대 대출 시행
- 민간 IP 가치평가기관을 확대하여 평가기관별 전문영역을 특화하고 신속한 투·융자를 위해 평가비용 및 평가기간 현실화 등
- 기술평가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부처(과기정통부, 특허청 등) 기술평가기관 품질관리 협의회 운영 및 기술가치평가 교육 실시

### ② IP 금융인력 육성 및 전문성 제고

- IP 가치평가에 대한 금융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리사 교육과정 등을 개선하여 변리사를 예비 IP 금융 인력으로 양성 등

## (3) IP 기술거래 활동의 인센티브 강화

- 이 과제의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음. 지식재산·기술 도입은 기술사업화 시간 단축 및 리

스크 제거 측면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 요소이나 국내 기업들은 자체 개발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시장에서 기술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홍보 및 기반 구축이 필요. 민간의 IP 수요와 대학·공공(연)의 IP 공급 간 불균형 해소 위해 수요·공급 간 중개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임

①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개 활성화

- 지식재산 수요·공급·투자·중개자 간의 'IP 활용 네트워크'를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IoT, 무인운송,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소재, 바이오, 스마트 헬스케어, 기능식품,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AI, VR) 중심으로 확대 개편
- 기술 분야별 협회 등과 협력하여 시장 동향 파악 및 수요기업 발굴 등
  - 중소기업 대상 특허거래전문관 상담, 수요·공급 매칭, 중개·협상 등 지원

(4) IP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 이 과제의 추진배경으로는 지식재산 서비스업이 IP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산업으로 고급 일자리 및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라는 점, IP 서비스업이 정부 주도로 시장이 형성되어 민간의 자생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임
- 이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주도의 IP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IP 서비스 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IP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이 있음

① 민간 주도의 IP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IP 가치평가기관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하고 IP 서비스업 투자펀드 조성 및 투자 설명회 개최
-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② IP 서비스 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 전시회 홍보부스 설치 통역 지원 등 해외 현지 마케팅 지원, KOTRA 등 유관기관 협력을 위해 'IP 서비스 해외진출 협의체' 구성·운영

③ IP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민간영역 IP 서비스 인력 양성) 기업 수요 기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IP 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제도를 운영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을 대학(원)·전문기관 등에 보급 등
- (IP 권리화·보호 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특허심사 인력

확충 및 심사관 역량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 교육 강화 등

## 2. 중장기 성과목표체계 제안<sup>8)</sup>

### 1)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함

- 이 목표의 추진과제에는 지식재산·기술의 거래·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후속 지원 확충, 기술 거래 활동의 인센티브 강화 등이 있음

#### (1) 지식재산·기술의 거래·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후속 지원 확충

##### ① 미활용 지식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후속개발 지원 확대

- 개별 제품화 등이 어려운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은 기업이 원하는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로 재구성하여 기술이전까지 통합 지원

##### ② 지식재산 거래·이전 후 기술사업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강화

-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공공연구기관 보유 지식재산에 대해 창업, 투·융자, 사업화 컨설팅 등 지식재산 사업화 정책과 연계 지원

#### (2) 기술 거래 활동의 인센티브 강화

##### ① 지식재산·기술거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정착

- 기술거래 중개자의 적절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수수료 등을 포함한 기술거래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보급하여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 이외에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기술 거래의 세제 혜택 확대 등의 추진과제가 있음

### 2)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정비함

- 이 목표의 추진과제에는 신기술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체계 정립,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SW지재권 보호체계 개선 등이 있음

8) 여기에서 논의된 중장기 성과목표체계 제안의 세부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2016).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및 추진과제(pp.23-36, pp.64-78) 중 특허청 관련 사업에서 인용함

(1) 신기술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체계 정립

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적인 지식재산권 체계 마련

○ 인공지능이 창출한 발명·디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 보호 방안 및 권리 주체 등에 대한 이슈 발굴·검토

② 신기술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국제적 논의 참여

○ WIPO 등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신기술 지식재산 이슈와 관련한 규범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

(2)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SW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개선

○ 추진과제에는 SW 특허 심사의 내실화 추진, 디지털·초연결 환경에 적합한 SW 지재권 보호체계 개선 등이 있음. 이 중에서 SW 특허 심사의 내실화 추진에는 SW 특허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 활용 확대, SW 특허 심사기준의 국제적 일관성 제고 등이 있음

3) 특허권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제고함

○ 이 목표의 추진과제에는 특허 무효율 저감을 위한 고품질 심사 실현, 지식재산 분쟁해결시스템 선진화 등이 있음

(1) 특허 무효율 저감을 위한 고품질 심사 실현

① 심사 품질 강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및 인적자원 확보

○ 심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화

○ 특허 처리물량 변동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 구축

② 중국 특허 선행기술 조사를 위한 관련 인프라 정비

○ 심사관 대상 중국어 교육 활성화 및 중국어 번역 시스템 고도화 등

(2) 지식재산 분쟁해결시스템 선진화

① 심결·판결의 신속성·일관성 제고를 위한 특허 소송·심판 체계 개선

○ 민사법원의 지재권 침해사건에 대하여 법원-심판원 간 소제기 통보 및 정보 공유 활성화

## 화 등 법원-특허청 간 다각적 협력 강화

### ② 특허 심판 품질 제고 및 고객 맞춤형 심판 실현

- 심판 품질 제고 및 심판관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화
- 서면 심리에 비해 정확한 쟁점 파악에 도움이 되는 구술심리/사건 설명회 확대 및 원격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 이용 확대 등

### 4)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 보호를 강화함

- 이 목표의 추진과제는 하도급 거래 등에서 부당한 기술 침해 근절, 중소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정비, 미등록 아이디어·디자인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 등이 있음

#### (1) 하도급 거래 등에서 부당한 기술 침해 근절

- 현황 및 문제점은 하도급 거래의 속성상 기술 유용 관련 신고가 많지 않은 실정이고, 하도급 거래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유용 행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술유용 여부 판단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이 있음
- 추진과제로는 대·중소기업간 바람직한 거래 문화 조성, 대기업의 보복행위에 대한 실효적 패널티 마련,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유용에 대한 감시·조사 강화 등이 있음

#### ①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유용에 대한 감시·조사 강화

- 기술유용에 대한 조사시 기술자료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협력(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을 통해 집중조사 실시 등

#### (2) 중소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정비

- 현황 및 문제점으로 소송 제기 전,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가처분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특허 등 기술 관련 사건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 시간·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있음
- 추진과제로는 중소기업 사건에 대한 심결 신속성 도모, 대체적 분쟁해결제(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용 활성화 등이 있음

#### (3) 미등록 아이디어·디자인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

- ① 부정경쟁행위의 정의를 개정하여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되면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 및 ‘트레이드 드레스(색채, 크기, 모양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복합 무형요소)’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부정경쟁방지법 개정)

②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처벌 및 행정조치 강화

- 악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현행 시정권고, 형사처벌 체계에 과태료 부과를 추가하여 신속한 피해자 구제 및 위반 행위 경중에 따른 적정 제재 추진

5)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함

- 전문가 조사결과에서 제시된 목표임
- 이 목표의 추진과제에는 지식재산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내실화, 공공부문 지식재산 인력 확충 및 조직 정비,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제고 및 브랜드 개발 등이 있음

(1) 지식재산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내실화

① 초·중·고 학생 대상 발명·특허·저작권 소양교육 강화

- 발명·특허 등에 대한 인식제고, 진로설계 및 직업체험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확대

② 지식재산 선도대학을 확대 설치하고 IP 교육 커리큘럼을 내실화

-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R&D와 IP 전략 연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IP 분야 커리큘럼을 점진적으로 ‘이공계 공학인증제도’와 연계

③ 공무원 및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에 대한 IP 교육 체계화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을 보강하고 신규공무원 교유과정에도 지식재산 소양교육 포함
- R&D 및 산업진흥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IP-R&D 전략 과정 등을 개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연구과제 책임자에게 교육 이수 권장 등

(2) 공공부문 지식재산 인력 확충 및 조직 정비

① 중앙부처 및 광역 지자체에 IP 전문인력 보강

- 지식재산 관련 부서에 특허담당관 지정·운영 추진
- 지식재산 전문인력(변리사 등) 채용시 자격수당 현실화 등 인센티브 제공

② 주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IP 전문조직 확충

-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점진적으로 상설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설치

③ 지역별 지식재산센터를 권역별 '지역지식재산진흥원'으로 개편

-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의 IP 지원 기능을 강화
-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IP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

(3)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

①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및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 정착

- 학생, 학부모, 직장인 등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지재권 보호 e-러닝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보급
-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등 전국민 대상 홍보 강화

②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 서비스 확대
- 사회적 약자가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시제품 제작 및 가치평가 비용 지원 확대

③ 지식재산 저변 확대를 위한 '발명체험센터' 설치·운영 등

- 학생, 일반인의 창의적 영감고취 및 발명·지식재산에 대한 친화적 환경 조성

(4)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제고 및 브랜드 개발

① 향토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원

- 지식재산에 기반한 향토기업 육성을 위해 농어촌 기반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컨설팅 등 지식재산 경영 기반 구축 지원
- 지역 농민·토착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리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상담 등 지원
- 이외에도 지역 전통산업 육성 및 브랜드 개발 지원 등의 과제가 있음

6)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을 강화함

- 수혜자 조사결과에서 제시된 목표임
- 이 목표의 추진과제에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및 소송보험 활성화 등이 있음

(1)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강화

① 특허바우처 제도 도입 활성화

- 중소기업이 출원·등록 및 소송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강화

②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및 생존가능성 증대를 위한 성장단계별 지식재산 전략 지원 강화

- 창업 초기, 특허 분석으로 유망성 등을 검증하고, 지식재산개발 전략을 통해 고품질 특허 포트폴리오 마련
- 성장기, 보유 특허 진단, 시장 맞춤형 제품 설계, 해외 지식재산 확보 지원 등

(2)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연구개발 지원 확대

①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특허기술 수요를 받아 출연(연)이 개발하여 지식자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이전

- 표준특허 창출 역량이 우수한 출연(연)과 중소기업간 매칭 추진

② 2020년까지 표준특허 강소기업 20개 육성

- 기술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표준특허 창출 지원

③ 중소기업에 대한 IP-R&D 지원은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중심으로 추진

-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증강현실 등 핵심기술 분야

(3)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활성화 및 소송보험 활성화

① 중소기업 대상으로 선지원 후변제(장기 분할 상환) 방식의 특허공제제도 도입 활성화

- 정부지원사업의 시간적,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소송 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까지 중소기업이 스스로 대비하도록 운용

② 소송보험 상품 다양화 및 보험료 지원 확대

- 기업별로 사업 현황에 따라 보험선택이 가능하도록 보험 상품 다양화 추진, 보장내역 강화 및 보험료 지원 확대 등
- 지자체 등과 사업 매칭, 공동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역소재 중소기업 대상 소송보험 지원 확대 등

### 3. 제안 종합

#### 1) 단기 성과목표체계 제안 종합

-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제안 및 실증조사결과를 근거로 하는 제안 등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기 위해 현행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전략목표에 맞추어 제안된 성과목표를 배분하였음
- 단기 성과목표체계 제안은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과제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의 핵심과제(세부과제)를 기반으로 하였음
-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들을 종합하기 위해 전문가 및 수혜자 실증조사결과에 나타난 제안의 공통사항 추출, 조사결과의 분리 및 통합 등이 이루어졌음. 기존의 4대 전략목표(지식재산의 창출지원·보호강화·활용촉진·기반마련)에 따라 성과목표를 배분함
- 전략목표 I. 지식재산 창출 지원: 여기에 속하는 성과목표로는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지식재산 분쟁해결시스템 선진화, 특허 무효율 저감을 위한 고품질 심사 실현), 4차 산업혁명 분야 국가 R&D 지원 강화(4차 산업혁명 분야 국가 R&D 지원 강화, 4차 산업혁명 기술·디자인에 대한 우선 심사 등), 신기술 분야 R&D에 표준특허 전략 적용 강화(IP 전략과 R&D 연계를 통한 우수 지식재산 창출 촉진 등, R&D-특허-표준 연계 추진, 국제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대외 활동 강화) 등이 있음
- 전략목표 II. 지식재산 보호 강화: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온라인에서 특허기술이 포함된 SW 보호 체계 마련 및 특허 심사내실화),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부당한 기술침해 방지, 기술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정비, 조사·시정권고 등 집행기능 대폭 강화) 등이 있음

- 전략목표 III.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 기반 혁신창업 지원(지식재산 기반 혁신 창업 활성화, 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체계 활성화,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중소기업에 대한 IP-R&D 지원 확대, 지역의 지식재산 강소기업 발굴·육성 등),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IP 금융을 통한 우수 지식재산 기업 지원 강화, 민간 중심의 IP 금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기술거래 활동의 인센티브 강화) 등이 있음
- 전략목표 IV. 지식재산 기반 마련: 특허행정 및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품질 제고(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 확충 및 품질 제고, 특허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지식재산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현장 중심 지식재산 관리 인재 성장 지원) 등이 있음
- 이러한 논의를 그림으로 표시하였고, 성과목표와 연계된 추진과제는 표로 제시하였음

<그림 4-1> 특허청 성과관리 목표체계 제안(단기)

전략 목표	지식재산 창출 지원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 기반 마련
성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1)</li> <li>·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지원(1)</li> <li>·표준특허 전략 적용 강화(환, 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1)</li> <li>·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4, 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재산 기반 혁신 창업 지원(환, 3)</li> <li>·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3)</li> <li>·지식재산서비스업 및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허행정 및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품질 제고(환)</li> <li>·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환, 5)</li> </ul>

주 1: (환)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제안 내용을 의미함

주 2: 괄호 안의 숫자는 단기 제안의 우선순위임. 실증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제안을 분리 또는 통합하여 그림에 표시하였기 때문에 우선순위 중복이 있음

<표 4-1> 특허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제안(단기)

성과목표	관리과제	사업 예시
I-1.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을 제고한다.		
	① 지식재산 분쟁해결시스템 선진화	특허소송·심판 체계 개선 특허심판의 품질 제고
	② 특허 무효율 저감을 위한 고품질 심사 실현	4차 산업혁명대비 심사 조직 및 방식 개편, 심사인력 확충, 심사역량강화 위한 인프라 확충
I-2.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를 지원한다.		
	① 4차 산업혁명 분야 국가 R&D 지원 강화	정부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 표준특허확보 전략 수립 지원 우수기업에 관련 특허동향 제공
	② 4차 산업혁명 기술·디자인에 대한 우선 심사	지재권 선점 지원을 위한 관련 기술·디자인 우선 심사 확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류	
I-3. 신기술 분야 R&D에 표준특허 전략 적용을 강화한다.		
	① IP 전략과 R&D 연계를 통한 우수 지식재산 창출 촉진	R&D 전주기(과제발굴·기획·수행·사 후) 특허 빅데이터 분석 지원 확대
	② R&D-특허-표준 연계 추진	R&D 단계별 표준특허 확보 전 략 지원 등
	③ 국제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대외 활동 강화	국제표준 대응체계 구축 등
II-1.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정비한다.		
	① 온라인에서 특허기술이 포함된 SW 보호 체계 마련 및 특허 심사내실화	심사기준 재정립, 국제 논의 채 널 구축, 특허법개정(특허기술 무단사용 SW전송행위관련)추진
II-2.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한다		
	①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부당한 기술침해 방지 조사·시정권고 등 지식재산 집행 기능 대폭 강화	처벌·행정조치 강화, 불공정행위 감사·조사 강화 등
	②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정비	분쟁조정위 활성화 등
III-1. 지식재산 기반 혁신창업을 지원한다.		
	① 지식재산 기반 혁신 창업 활성화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등
	② 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체계 활성화	IP 디딤돌·나래 사업 등
	③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데이터기프트제도 자격조건 완 화 및 무상제공기간 확대 등
III-2.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① 중소기업에 대한 IP-R&D 지원 확대	기술분야별 IP-R&D 지원 강화 표준 강소기업 육성 등
	②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지원 강화 및 인식 개선 등
	③ 지역의 지식재산 강소기업 발굴·육성	지재권 종합 지원 등 기업육성
	특허공제제도 도입 및 소송보험 활성화	
III-3.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지식재산 거래·금융을 활성화한다.		
	① IP 금융을 통한 우수 지식재산 기업 지원 강화	우수특허보유기업 IP 투자 강화 등
	② 민간 중심의 IP 금융을 위한 인프라 구축	IP 가치평가의 전문영역 특화 등
	③ 지식재산·기술 거래 활동의 인센티브 강화 등	IP 거래를 위한 중개활성화 등
IV-1. 특허행정 및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① 특허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확보노력 성과 접수 등
	② 지식재산 DB 품질 제고	자체평가제도 등
IV-2.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①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IP서비스기업 채용연계교육 등
	② 현장 중심 지식재산 관리 인재 성장 지원	청년창업가 실무 교육 등
	각급 학교 지식재산 인재 양성(IP 교육 및 발명특성화고 지정 등)	

## 2) 중장기 목표체계 제안 요약

- 실증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중장기 목표체계 제안 논의를 요약하기 위해 현행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전략목표에 맞추어 제안된 성과목표를 배분하였음
- 중장기 목표체계 제안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를 기반으로 하였음
- 전략목표 I. 지식재산 창출 지원: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특허 무효율 저감을 위한 고품질 심사 실현, 지식재산 분쟁해결시스템 선진화)
- 전략목표 II. 지식재산 보호 강화: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신기술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체계 정립 등),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하도급 거래 등에서 부당한 기술 침해 근절, 미등록 아이디어·디자인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 등)
- 전략목표 III.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지식재산·기술의 거래·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후속 지원 확충, 기술거래 활동의 인센티브 강화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강화, IP-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특허공제제도 및 소송보험 활성화 등)
- 전략목표 IV. 지식재산 기반 마련: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지식재산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내실화, 지식재산 인력 확충 및 조직 정비, 지역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이 있음
- 지금까지 논의된 성과목표와 이와 연계된 추진과제를 표로 제시하였음

<표 4-2> 특허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제안(장기)

성과목표	관리과제
I-1.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을 제고한다.	
	① 특허 무효율 저감을 위한 고품질 심사 실현
	② 지식재산 분쟁해결시스템 선진화
II-1.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정비한다.	
	① 신기술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체계 정립
	②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SW지재권 보호체계 개선
II-2.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를 강화한다	
	① 하도급 거래 등에서 부당한 기술 침해 근절
	②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정비
	③ 미등록 아이디어·디자인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
III-1. 지식재산·기술 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① 지식재산·기술의 거래·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후속 지원 확충
	② 기술 거래 활동의 인센티브 강화 등
III-2.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강화
	② 중소기업에 대한 IP-R&D 지원 확대
	③ 중소기업 특허공제제도 및 소송보험 활성화
IV-1.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① 지식재산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내실화
	② 공공부문 지식재산 인력 확충 및 조직 정비
	③ 지역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제5장 결론

- 이 정책연구는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특허청의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제안하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논의하였음
-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단기 성과목표는 201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임. 이러한 성과목표는 크게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4차 산업혁명 분야 국가 R&D 지원 강화, 신기술 분야 R&D에 표준특허 전략 적용 강화,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식재산 기반 혁신창업 지원,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품질 제고,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등 10가지임
-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중장기 성과목표는 2018년 이후 연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며, 단기 성과목표와는 하위 추진과제에서 서로 다를 수 있음. 그러한 성과목표는 크게 6가지로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지식재산·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등이 있음
-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국정과제는 특허청의 외부 정책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중 2018년도 후반기는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는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성과목표 아래 ‘지식재산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강화’ 관리과제를 두고 ‘IP 서비스업 채용 연계율’, ‘전문자격취득률’의 성과지표를 두고 있음. 추가적으로 <표 4-2> 및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지식재산 인력 확충 및 조직 정비’를 제안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자체에 지식재산 전문인력 보강, 출연연구기관에 상설 지식재산 전담조직 설치·확대 등임.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조직 및 인력 확충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지식재산 전문인력 확충 및 채용 확대를 제안함

##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16).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2017-2021)”.
- 관계부처 합동 (2018).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국무조정실. (2016). <2016년도 정부업무평가백서>.
- 국무조정실. (2018). <2017년도 국가주요정책 심층분석 평가결과>.
- 김민희, 오성수. (2017). “성과평가 등급의 수와 공무원의 동기부여: 성과평가에 대한 인식과 업무특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1): 131-156.
- 김영록. (2011). <정부정책과 성과평가>. 파주: 한국학술정보.
- 금재덕, 양승범, 이정욱, 조문석, 정장훈. (2014).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4(1): 189-212.
- 박해육, 박희정. (2015). “정부 3.0 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활성화 방안.” <지방정부 연구>. 19(2): 1-24.
- 박찬정. (2011). “성과평가에 있어서 평가대상별 평가항목의 중요도 분석: AHP와 퍼지모형의 비교.” <기업경영연구>. 40: 225-242.
- 산업통상자원부. (2018).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송재호, 윤다영, 이상문. (2014). “지적재산권 통합관리 시스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391-394.
- 윤수재. (2013). “중앙정부 국정과제점검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3): 55-84.
- 이광희. (2013).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체평가 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 연구>. 2013년 12월.
- 이성기.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IP의 역할.” <이슈페이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이정욱, 정장훈, 조문석. (2014). “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미국, 호주의 성과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4(2): 279-307.
- 이종훈. (2005). “국정평가기본법 하 통합적 성과관리에 대한 성과관리 전략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방안에 대한 연구.” 국무조정실 발간자료, 2005.
- 이환성, 양홍석. (2014). “국정과제평가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 2014년 12월.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8).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 정선웅, 신상근. (2006). “6시그마를 통한 공공서비스 품질개선 성과: 특허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산업공학회지>. 32(4): 358-368.
- 조경호. (2011). “한국 공무원 성과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3): 171-192.
- 조문석, 이정욱. (2016). “공공부문 통합적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6(1): 77-103.
- 주상현, 김원호, 박성원. (2009). “공공기관 성과관리 사례분석과 운영방안.” <한국비교정부학보>. 13(2): 187-212.
- 중소벤처기업부. (2018).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최정인, 정세희, 문명재. (2017).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4(3): 1-27.
- 최현경. (2017).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IP) 정책방향.” <산업경제>. 2017.06.
- 특허청. (2007-2018). “2007-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특허청.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 특허청. (2017). “성과관리 전략계획(2017-2021).”
- 특허청. (2018). “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 특허청. (2018).. “2018년도 성과계획서”
- 특허청. (2018). “2018년도 자체평가 계획.”
- 특허청. (2018). “2018년도 특허청 업무계획: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퍼포먼스 웨이컨설팅. (2011). “특허청 조직성과 평가 체계 및 성과지표 개선용역.” 2011년.
- 한국정책학회. (2017). 용역과제: 2017년 국정과제 시스템 개선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2007). “상표조사분석사업의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특허청발간자료, 2007.
- 한국행정연구원. (2011). “성과평가모형 적용을 통한 정부업무평가의 실증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한국행정학회. (2017). 용역과제: 2017년 정부업무평가체계 개선방안.
- Andrijcic, Eva and Barry Horowitz. (2006). “A Macro-Economic Framework for

- Evaluation of Cyber Security Risks Related to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26(4): 907–923.
- Fisher III, William W. and Felix Oberholzer-Gee. (2013). “Strategic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n Integrated Approach.”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55(4): 157–183.
- Hussain, Iftikhar. (2015). “Su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Public Sector.” *Journal of Human Resources*. 50(1): 189–221.
- Kroll, Alexander and Donald P. Moynihan. (2018). “The Design and Practice of Integrating Evidence: Connecting Performance management with Program Evalu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8(2): 183–194.
- Lee, Jung Min, et al. (2018). “The Complementary Effec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mechanisms on Product Innovation Performance.” *R&D Management*. 48(3): 320–330.
- Leoveanu, Andy. (2016).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in the Public Sector.” *Juridical Current*. 19(3): 26–38.
- Marvel, John D. (2016). “Unconscious Bias in Citizen’s Evaluation of Public Sector Performan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 Theory*. 26(1): 143–158.
- Osborn, Lucas S. (2018). “Intellectual Property Channeling for Digital Works.” *Cardozo Law Review*. 39(4): 1303–1364.
- Osei-Tutu, J. Janewa. (2017). “Humanizing Intellectual Property: Moving Beyond the Natural Rights Property Focus.” *Vanderbilt Journal of Entertainment & Technology Law*. 20(1): 207–257.
- Shingler, John, et al. (2008). “The Importance of Subjective Data for Public Agency Performance Evalu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8(6): 1101–1111.
- Toma, Antonio, et al. (2018). “Open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Business Process Management Journal*. 24(2): 501–516.
- Wang, Ming-Kuen and Kevin P. Hwang. (2011). “Key Factors for the Successful Evalu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peciality.”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38(9): 10794–10802.

부록 1. 특허청 2018년도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현황

2018년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략목표 I.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한다	
I-1. 국가·민간 연구개발 전 주기의 강한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한다	특허정보활용사업 종합만족도(점)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정부 R&D 효율성 제고	정부 R&D 과제의 특허동향조사 결과인용률(%) 정부 R&D IP 창출 수용도(%)
산·학·연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	민간 R&D IP 창출 수용도(%) 출원특허의 표준안 반영률(%)
I-2.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사품질관리지수(점) 특허상표 제도개선 고객만족도(%) 심사관·심판관 전문성 지수(점)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 구현	선행기술조사 심사전 제공 실적(건) 결정계 심결취소율(%)
공정하고 편리한 심사·심판제도 구축·운영	제도개선 진척도(%)
심사·심판관 대상 신기술 및 법제도 교육 강화	심사·심판 교육의 현업적용도(점)
전략목표 II.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한다	
II-1. 지식재산의 보호활동 및 체계를 강화한다	국내 지재권 보호 인식도(점) 해외 지재권 보호 기여도(점)
국내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지원 실적(건) 영업비밀 보호기반 조성사업 만족도(점)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 강화	특허분쟁지원 기대충족도(점)
II-2. 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환경 개선한다	국외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 및 합의실적(건)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의회 및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제 질서 변화 선도	IP5 및 양자협력 합의실적(건)
우리 기업에 우호적 글로벌 지식재산협상강화	국제규범 형성기여도(건) 지식재산나눔사업 전문가평가(점)
전략목표 III.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한다	
III-1.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거래를 촉진한다	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율(%) 지식재산 보증 대출 투자 금융 연계지원액(억원) 지식재산 거래건수(건)
IP 금융 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	IP 활용 지원과제 기술이전 건수(건)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강화	기업의 지식재산 서비스 활용률(%)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비율(%)
III-2.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및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한다	IP 서비스업 채용 연계율(%) 전문자격 취득률(%)
지식재산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강화	직무발명제도 컨설팅의 효과성(%)
직무발명에 대한 상당한 보상 문화 정착	지원기업의 경영환경개선 및 지원사업 활용도(점) 사업 서비스 품질 만족도(점)
III-3.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식재산 경영인증률(%) 아이디어 기반 창업건수(건)
지역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IV.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을 마련한다	
IV-1. 창의적인 지식재산인력을 양성한다	대학생 중 지식재산 강좌 수강생 비중(%) 지식재산권 교육 이수자 수(명)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사업 교육만족도(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초중고 발명교육센터 교육생 만족도(점)
창의적인 발명인재 육성	지식재산 행정정보화 서비스 만족도(점)
IV-2. 지식재산 행정 및 정보서비스 품질 제고	특허고객 만족도(점)
대국민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특허넷 서비스 수준 만족도(점) 목표시간내 장애 조치율(%)
지식재산정보시스템 적기구축 및 운영효율화	데이터 품질 정합도(%) 한국특허영문초록(KPA) 사용자 만족도(점)
지식재산정보 DB 확충 및 품질 제고	
IV-3. 글로벌 특허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한다	정보화 해외 협력과제 합의 건수(건)
국내외 지식재산정보 민간개방 및 공유확대	특허정보 상품보급 건수(건)
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국제특허정보 서비스 만족도(점)

부록 2. 단기 및 중장기 추진과제 분류(전문가조사 응답 결과)

1) 단기 추진 과제

<표> 전문가조사 응답 결과(단기 상위과제)

전문가	1순위	2순위	3순위
A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미래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효율화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	·발명 장려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시장주도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
B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초중·고 지식재산 교육 확대 및 시민 인식제고 노력 강화
C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도 개선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 기술 지식재산 선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시장주도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D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특허창출의 전주기 관리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E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 기술 지식재산 선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F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 기술 지식재산 선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시장주도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G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	·미래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효율화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H	·무응답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무응답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	·무응답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I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 기술 지식재산 선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발명인재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아래에서 계속)

전문가	1순위	2순위	3순위
J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주도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	·특허창출의 전주기 관리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
K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	·특허창출의 전주기 관리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
L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도 개선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현지 대응체계 강화 및 국제공조 지속 확대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 ·혁신창업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M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
N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
O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P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	·특허창출의 전주기 관리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시장주도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
Q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혁신창업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R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주도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혁신창업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S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도 개선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T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주도 ·초·중·고 지식재산 교육 확대 및 시민 인식제고 노력 강화	·미래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효율화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아래에서 계속)

전문가	1순위	2순위	3순위
U	·발명 장려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발명인재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시장주도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	·미래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효율화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
V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도 개선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	·발명인재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현지 대응체계 강화 및 국제공조 지속 확대
W	·발명 장려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시장주도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	·발명인재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도 개선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X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시장주도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도 개선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Y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특허창출의 전주기 관리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	·경제·사회적 지식재산 격차 해소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Z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도 개선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현지 대응체계 강화 및 국제공조 지속 확대
AA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미래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효율화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AB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시장주도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
AC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시장주도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
AD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특허창출의 전주기 관리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시장주도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AE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도 개선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

(아래에서 계속)

전문가	1순위	2순위	3순위
AF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 기술 지식재산 선점	·특허창출의 전주기 관리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미래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 정 효율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AG	·발명 장려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 재산 활동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 산 인프라 구축
AH	·발명 장려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 라 구축	·발명인재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 ·현지 대응체계 강화 및 국 제공조 지속 확대
AI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 기술 지식재산 선점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특허창출의 전주기 관리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시장주도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
AJ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 기술 지식재산 선점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 산 인프라 구축
AK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시장 주도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발명인재 성장을 위한 인프 라 확충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AL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 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 업 육성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AM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 재산 활동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 호 ·초중고 지식재산 교육 확대 및 시민 인식제고 노력 강화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 스업 육성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AN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 기술 지식재산 선점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발명 장려 및 지식재산 존 중 문화 조성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AO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 기술 지식재산 선점	·특허창출의 전주기 관리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 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 축

2) 중장기 추진 과제

<표> 전문가조사 응답 결과(중장기 상위과제)

전문가	1순위	2순위	3순위
A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B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C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D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E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F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애로 해소 지원	민간중심의 지식재산 금융 고도화
G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애로 해소 지원
H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I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애로 해소 지원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J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애로 해소 지원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K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L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M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생물·유전자원 관련 신 국제규범 대응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N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O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P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Q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R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지식재산 국제공조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애로 해소 지원

(아래에서 계속)

전문가	1순위	2순위	3순위
S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생물·유전자원 관련 신 국제규범 대응
T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생물·유전자원 관련 신 국제규범 대응
U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V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W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X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민간중심의 지식재산 금융 고도화
Y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Z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생물·유전자원 관련 신 국제규범 대응
AA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애로 해소 지원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AB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AC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AD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생물·유전자원 관련 신 국제규범 대응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AE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민간중심의 지식재산 금융 고도화
AF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AG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애로 해소 지원
AH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지식재산 국제공조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AI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AJ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아래에서 계속)

전문가	1순위	2순위	3순위
AK	민간중심의 지식재산 금융 고도화	생물·유전자원 관련 신 국제규범 대응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AL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AM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AN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AO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부록 3. 설문지

■ 다음 중 특허청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선순위과제(1~5순위)를 표시해 주십시오.

핵심과제	우선순위 (1~5순위)
A.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B. 민간중심의 지식재산 금융 고도화	
C.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D.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E.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F.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애로 해소 지원	
G. 지식재산 국제공조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H. 생물·유전자원 관련 신 국제규범 대응	
I.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J.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K.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L.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 위에서 1순위로 선택하신 핵심과제에서 세부과제의 우선순위를 표시해 주십시오.

A. 지식재산·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우선순위 (1~2순위)
기술 거래 활동의 인센티브 강화	
지식재산·기술의 거래·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후속 지원 확충	

B. 민간중심의 지식재산 금융 고도화	우선순위 (1~2순위)
지식재산 금융을 통한 우수 지식재산 기업 지원 강화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금융을 위한 인프라 구축	

<b>C.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b>	우선순위 (1~3순위)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R&D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및 소송보험 활성화	

<b>D.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b>	우선순위 (1~3순위)
미등록 아이디어·디자인 및 영업비밀 보호강화	
하도급 거래 등에서 부당한 기술 침해 근절	
중소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정비	

<b>E.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b>	우선순위 (1~2순위)
직무발명 범위 확대 및 정당한 보상 문화정착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관계 및 이익배분체계 합리화	

<b>F.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애로 해소 지원</b>	우선순위 (1~3순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종합 전략 지원	
지식재산-DESK의 기능 확대 및 전문성 강화	
해외 상표브로커 및 모조품 유통 등에 대한 대응 강화	

<b>G. 지식재산 국제공조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b>	우선순위 (1~3순위)
글로벌 심사협력 강화	
개도국에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 지원 및 지식재산 ODA 확대	
지식재산 국제기구 유치 및 글로벌 지식재산 이니셔티브 주도	

<b>H. 생물·유전자원 관련 新 국제규범 대응</b>	우선순위 (1~2순위)
주요 국가별 [생물·유전자원 관련 출처공개 및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수립 및 현지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생물·유전자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양자·다자간 협력 강화	

<b>I.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b>	우선순위 (1~2순위)
신기술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체계 정립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SW지재권 보호체계 개선	

<b>J.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b>	우선순위 (1~2순위)
특허 무효율 저감을 위한 고품질 심사 실현	
지식재산 분쟁해결시스템 선진화	

<b>K.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b>	우선순위 (1~2순위)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수급 기반 조성	

<b>L. 지식재산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b>	우선순위 (1~4순위)
공공부문 지식재산 인력 확충 및 조직 정비	
지식재산 교육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내실화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제고 및 브랜드 개발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	

(아래에서 계속)

■ 다음 특허청의 8대 추진과제 중 시급히 추진해야할 우선순위과제(1~5순위)를 표시해 주십시오.

8대 추진과제	우선순위 (1~5순위)
A.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B.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시장주도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	
C. 지식재산-R&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	
D.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E.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F.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	
G. 현지 대응체계 강화 및 국제공조 지속 확대	
H. 초중·고 지식재산 교육 확대 및 시민 인식제고 노력 강화	

● 위에서 1순위로 선택하신 추진과제에서 세부과제의 우선순위를 표시해 주십시오.

A.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취업 연계	우선순위 (1~4순위)
선도적 '지식재산 창출' 인재 성장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현장중심 '지식재산 관리' 인재 성장 지원	
현장·융합형 '지식재산 인재 육성 기반' 내실화	

B.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 및 시장주도 지식재산 거래·금융 활성화	우선순위 (1~4순위)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지식재산·기술거래 활동의 인센티브 강화	
지식재산 금융을 통한 우수 지식재산 기업 지원 강화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금융을 위한 인프라 구축	

<b>C. 지식재산-R&amp;D 전략을 통한 핵심기술 지식재산 선점</b>	<b>우선순위 (1~4순위)</b>
지식재산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지식재산 창출 촉진	
R&D-특허-표준 연계 추진	
국제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대외 활동 강화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지식재산 경영 강화	

<b>D. 신기술·신산업 대응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b>	<b>우선순위 (1~3순위)</b>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SW 지재권 보호체계 개선	
특허 무효율 저감을 위한 고품질 심사 실현	
지식재산 분쟁해결 시스템 선진화	

<b>E.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b>	<b>우선순위 (1~4순위)</b>
지식재산 기반 혁신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특허공제제도 도입 및 소송보험 활성화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b>F.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구축</b>	<b>우선순위 (1~2순위)</b>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부당한 기술침해 근절	
중소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정비	

<b>G. 현지 대응체계 강화 및 국제공조 지속 확대</b>	<b>우선순위 (1~6순위)</b>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종합 전략 지원	
현지 대응체계 강화(지식재산-DESK의 기능 확대 및 전문성 강화)	
해외 상표브로커 및 모조품 등에 대한 대응 강화	
글로벌 심사협력 강화	
지식재산 국제기구 유치 및 글로벌 지식재산 이니셔티브 주도	
개도국에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 지원 및 지식재산 ODA 확대	

<b>H. 초·중·고 지식재산 교육 확대 및 시민 인식제고 노력 강화</b>	우선순위 (1~2순위)
청소년 대상 지식재산 교육 강화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	

■ 다음 특허청의 14개 핵심과제 중 시급히 추진해야 할 우선순위과제(1~5순위)를 표시해 주십시오.

14개 핵심과제	우선순위 (1~5순위)
A.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	
B.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C. 특허창출의 전주기 관리	
D.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	
E.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F.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주도	
G. 경제·사회적 지식재산 격차 해소	
H.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I.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J.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K.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도 개선	
L. 미래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효율화	
M. 발명인재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N. 발명 장려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	

● 위에서 1순위로 선택하신 핵심과제에서 세부과제의 우선순위를 표시해 주십시오.

<b>A.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b>	우선순위 (1~3순위)
고품질 심사에 대한 책임행정 구현	
심사 역량 강화	
선행기술조사 내실화	

<b>B.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b>	<b>우선순위 (1~4순위)</b>
4차 산업혁명 기술·디자인에 대한 우선 심사	
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수수료 감면	
4차 산업혁명 분야 국가 R&D 지원 강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지원	

<b>C. 특허창출의 전주기 관리</b>	<b>우선순위 (1~3순위)</b>
R&D 단계: 특허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R&D 전략 지원 강화	
출원 단계: 고품질 특허 설계·출원 기반 마련	
심사 前 단계: 심사청구시 선행기술조사 결과 사전 제공	

<b>D.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 심판</b>	<b>우선순위 (1~5순위)</b>
외부위원 참여, 윤리강령 제정 등 심판 공정성 강화	
심판 조직, 인사 등의 혁신을 통한 심판 전문성 제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을 통한 특허 보호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판업무의 효율성 제고	

<b>E.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b>	<b>우선순위 (1~4순위)</b>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영업비밀 보호 제도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조사·시정권고 등 지식재산 집행 기능 대폭 강화	

<b>F.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주도</b>	<b>우선순위 (1~3순위)</b>
우리 기업의 K-브랜드 보호 체계 강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지원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b>G. 경제·사회적 지식재산 격차 해소</b>	<b>우선순위 (1~4순위)</b>
여성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향상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익변리 서비스 확대	
사회적 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b>H.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b>	<b>우선순위 (1~6순위)</b>
특허·상표·디자인 조사서비스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으로 새로운 지식재산 서비스 창출	
민간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 지정 확대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강화 및 서비스 인력 양성	
지식재산 분야 세제개선 추진	
지식재산 발굴·거래 등을 촉진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b>I.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b>	<b>우선순위 (1~5순위)</b>
‘특허공제 제도’ 도입 추진	
스타트업에 대한 특허바우처 사업 시행	
지역의 지식재산 강소기업 발굴·육성	
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체계 활성화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b>J.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b>	우선순위 (1~4순위)
지식재산 금융: 1조원 규모로 성장	
민간 중심으로 지식재산 금융 저변 확산	
지식재산 금융연계 가치평가 인프라 확충	
지식재산 거래 촉진: '22년까지 3천억 원 규모로 확대	

<b>K.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도 개선</b>	우선순위 (1~3순위)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체계 개선	
미래 신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제도 정비	
융복합 발명·창작물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b>L. 미래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효율화</b>	우선순위 (1~2순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특허정보시스템 고도화 전략 수립	
특허 빅데이터 자원의 가치창출·활용 기반 조성	

<b>M. 발명인재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b>	우선순위 (1~5순위)
청소년 발명교육 확산	
초·중·고 교원의 발명교육 인식 및 역량 증진	
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 강화	
현장 중심의 지식재산 실무능력 제고	
전문 자격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 및 제도 개선	

<b>N. 발명 장려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b>	우선순위 (1~5순위)
발명 친화적 사회 환경 구현	
직무발명제도 개선 및 도입 확산	
발명인에 대한 포상 및 예우 강화	
지식재산 허위표시 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 추진	
국민 참여를 통한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	